



발간등록번호
74-6440000-000282-01

|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

C/O/N/T/E/N/T/S

제1장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의 개요

제1절 양성평등 비전 2030의 수립배경	1
제2절 양성평등 비전 2030의 의미	4
제3절 양성평등 비전 2030의 수립과정	5

제2장 충남 양성평등 미래 전망과 과제

제1절 충남 성평등 미래전망과 과제	13
제2절 영역별 미래 전망과 과제	17
제3절 도민이 바라는 양성평등 미래상	66

제3장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의 구성체계

제1절 핵심가치와 영역별 목표	73
제2절 비전체계	77

제4장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추진과제

제1절 추진과제	81
제2절 대표과제	137

제5장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의 실현

제1절 비전의 실현	145
제2절 점검체계	147
제3절 성평등 충남의 미래	150

부록

추진과제의 추진시점	157
핵심과제목록	167
참여진 명단	168
참고문헌	173

표 목 차

<표 1-1> 충남의 3대 혁신 및 3대 행복 과제	3
<표 1-2>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과정	9
<표 2-1> 지역 성평등지수 분야별 현황	14
<표 2-2> OECD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의 한국 순위 및 젠더불평등 순위	15
<표 2-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성별현황	17
<표 2-4> 독거노인 현황 (1951.1.1.이전 출생자)	18
<표 2-5> 80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1936.1.1.이전 출생자)	18
<표 2-6>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19
<표 2-7> 독거노인의 돌봄서비스 현황	19
<표 2-8> 충남 보건분야의 세부지표(2014년 기준)	22
<표 2-9> 충남도민의 의료서비스 이용빈도	23
<표 2-10> 충남의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26
<표 2-11> 충남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 현황	27
<표 2-12> 충남도민의 범죄위험 및 안전 환경에 대한 평가	27
<표 2-13> 충남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06~'15)	30
<표 2-14> 산업별 종사자 현황 및 대표자 성비	30
<표 2-15> 경제활동 분야 충남의 성평등 현황	31
<표 2-16> 충남의 경력단절여성 현황	31
<표 2-17> 충남의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32
<표 2-18> 최근 3년간 충청남도 의사결정 분야 세부지표 변화 추이	34
<표 2-19>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비율	34
<표 2-20> 충청남도 성인지예산 현황	35
<표 2-21> 충남의 이혼율 현황	40
<표 2-22> 충남의 가족내 성평등 역할에 대한 인식	41
<표 2-23> 충남의 노인가구 및 노인 1인가구 증가 추계	42
<표 2-24> 충남도민의 주된 여가 활동 경험 여부	44
<표 2-25> 20세 이상 충남 농가 인구 성별 현황	48
<표 2-26> 충청남도 및 시군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 제정 현황	54
<표 2-27> 외국인주민 현황(2015.11. 기준)	56
<표 2-28> 결혼이주여성 사회 참여 현황	56
<표 2-29> 결혼이주여성 가구소득 현황 비교	57
<표 2-30> 충남 결혼이주여성 현재 직종	57
<표 2-31> 충남 학교밖청소년의 자살충동 현황	59
<표 2-32> 성별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60
<표 2-33> 충남 장애인의 학력구성비	60
<표 2-34> 평생학습 참여율	61
<표 3-1> 비전체계 구성을 위한 영역별 목표 설정	75
<표 5-1> 10대 추진전략별 주요 점검지표	149
<표 5-2> 성평등 충남의 현재와 미래	151
<표 5-3> 미래 충남의 성평등 도달 수준	152

그림 목 차

<그림 1-1>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추진체계	7
<그림 1-2>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과정 체계도	10
<그림 1-3>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 참여자	12
<그림 2-1> 한국과 충남의 양성평등 수준	14
<그림 2-2> 충남도민의 성별 여가시간 격차	44
<그림 2-3> 여성농업인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49
<그림 2-4> 충남 결혼이주여성 구직의 어려움	58
<그림 2-5> 청소년 성별 위기보호요인 수준의 차이	59
<그림 2-6> 충남의 양성평등 비전에 답아야 할 가치	66
<그림 2-7> 성평등 충남을 위한 제반 여건들의 중요도와 기여도에 대한 평가	67
<그림 2-8> 성평등 충남을 위한 제반 여건들의 중요도와 기여도 평가의 분포	67
<그림 2-9> 도민들이 바라는 2030년 성평등 충남의 모습	68
<그림 3-1> 비전 키워드의 추출과정	74
<그림 3-2> 비전 키워드와 핵심가치	74
<그림 3-3> 영역별 목표와 비전체계의 목표 연계	76
<그림 3-4>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의 비전 슬로건	77
<그림 3-5> 기타 비전 슬로건(안)	78
<그림 3-6>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의 체계	80
<그림 5-1> 비전의 실현	146
<그림 5-2> 비전 실현 점검을 위한 추진체계	148
<그림 5-3> 미래 충남의 성평등 도달 수준	154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의 개요

제1절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의 수립배경

■ 성평등과 연계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확정

- UN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추진 종료 후(2000~2015), MDGs의 한계를 넘어선 향후 15년간의 발전프레임으로서 Post-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확정
-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과정에서 UN Wome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각국 여성운동 진영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성평등 독자목표를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어 총 17개 목표 중 ‘성평등 달성 및 여성·여아의 자력화’가 목표5로 포함됨
- 한편, UN과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북경여성행동강령 선언 이후 지난 20년 동안 이행 정도와 과제를 주기적으로 평가·정리해왔음
- 2000년에는 제23차 유엔총회 특별회의에서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향후 행동과 조치’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고(UN General Assembly, 2000), 2015년에는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여성지위위원회(CSW)에서 ‘제23차 유엔총회 특별회의 및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 이행 점검과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음(CSW, 2015)
- 이 보고서에서는 북경선언과 행동강령이 모든 여성의 발전과 평화, 평등이라는 목표 성취를 위한 일련의 약속들과 비전을 내포한(visionary) 아젠다를 확립하였으며, 그 비전은 모든 국가들이 숙고해야 할 post-2015 발전 아젠다와도 관련이 있다고 언급(CSW, 2015:104)
- 최근 UN 여성지위위원회는 제60차 총회에서 우선순위 의제인 ‘여성의 자력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연계’를 주제로 논의하고 합의된 결론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를 젠더 관점에서(gender-responsive) 이행한다는 것은, 성평등의 실현, 여성과 소녀의 자력화 실현,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fundamental) 자유의 동등한 향유의 실현을 위하여 현재와 장기적인 측면 모두에서의 행동의 가속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인정(CSW, 2016:4)
- 또한,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의 온전하고, 효과적이며 가속화된 이행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젠더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주류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킨 바 있음(CSW, 2016:4)

- 향후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외에도 개별 국가 단위에서 post-2015 개발의제에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자력화의 달성을 연계하려는 노력과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국가 및 지역단위에서의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비전 수립 필요성 증대

- 이처럼 성평등 관점에서 국가단위에서의 post-2015 아젠다(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을 위한 점검과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post-2015 아젠다와 연계한 성평등 실현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나 현재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비전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 단기적인 법정계획 수립·시행에 머무르고 있음
- 이러한 노력과 작업은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도 독자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전망과 목표 설정을 포함하는 비전 수립과 시행은 충남 지역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임
- 현재 충남의 성평등 수준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지역성평등수준'(2014년 기준)에 따르면 '성평등 하위지역(Level 4)'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13년 이후 3년 연속 성평등 하위지역으로 머무르고 있는 현실임(주재선 외, 2015)
- 따라서 충남은 현재의 성평등 하위 수준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이자 로드맵으로서 장기적 실행계획인 성평등 비전의 수립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 성평등 관점에서의 모든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패러다임의 변화

- 1995년 제정되어 지난 20여 년간 여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었던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되면서, 성평등 관점을 전 영역의 정책 전반에 접목하고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과 추진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충청남도의 성평등 비전의 수립은 현재 충청남도의 낮은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리는 대응 전략과 실행 방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실질적으로 성평등 수준을 상승시키는데 기여할 것임
- 또한,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과 이에 기반한 비전 추진은 충청남도의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성평등의 실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임

■ 성평등 관점의 접목은 충남의 3대 혁신 및 3대 행복 과제 추진의 완성에 기여

- 충남은 민선5기(2010.7~2014.6)에 '3대 혁신' 과제로서 행정혁신, 자치혁신, 3농혁신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하였으며, 민선6기(2014.7~현재)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민선6기에 추진하고 있는 3대 행복과제인 ‘자영업에서 기업까지 행복한 성장’,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행복할 권리’, ‘도랑에서 서해까지 행복한 환경’에서 주력하고 있는 과제들은 경제 분야의 미래 정책 발굴, 성평등 정책의 확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살기 좋은 거주 공간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과제들이 성평등의 관점에서 추진될 때, 사실상 도민의 보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정책 수혜의 균형을 높일 수 있음
- 특히 충청남도는 2016년 올해, 3대 혁신과제와 3대 행복과제의 구체적인 성과 제고를 위하여 도정 전반에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관점의 통합적 추진과 점검을 강화해 왔으며, 이러한 점에서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도정 기조를 지속·발전시키는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임

<표 1-1> 충남의 3대 혁신 및 3대 행복 과제

구분		주요 과제
3대 혁신 과제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가는 행정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중심의 소통·공감 채널 활성화 ▷ 일 잘하는 충남형 행정혁신 강화 ▷ 조직 역량제고를 위한 중기 인적자원 개발·운용 세부계획 수립 ▷ 도민 고충해소 기능 강화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중심의 충남형 동네자치 확산 ▷ 시민사회의 도정협치 및 역량 강화
	농어촌에 희망주는 3농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 ▷ 「농어촌 마을 재구조화」 사업 ▷ 충남 농어업 지도자 육성 및 농업·농촌 가치 확산
3대 행복 과제	자영업에서 기업까지 행복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의 꿈(DREAM)구현을 위한 미래정책 발굴 ▷ 충남 경제비전 수립 ▷ 상생산업단지 구축 확산 ▷ 내포신도시의 완벽한 정주기반 구축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행복할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정책의 양성평등 확산 ▷ 경력단절여성에 양질의 일자리 연계 ▷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 ▷ 저출산 대응 및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장애인 인권 보호 ▷ 지방 의료원 경영개선 및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도랑에서 서해까지 행복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 문화향유권 신장 ▷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을 위한 지역환경 개선 ▷ 선도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

* 자료 : 충남도청 홈페이지(www.chungnam.go.kr)

1. 충남 양성평등 비전의 2030의 의미

-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은 충남의 특성에 맞는 장기 미래 비전계획으로서, 충남의 성평등 현황을 점검하고, 성평등 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님
- 또한, 이 비전계획은 충남의 성평등과 관련한 많은 정책들이 성평등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 지침의 역할을 하는 최상위 계획으로서 위상을 지님
- 한편,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은 법정계획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틀과 범위를 넘어서 도민의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본계획임

2. 비전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17년, 목표연도 2030년

- 비전계획의 기준연도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 보건, 복지, 가족, 문화, 환경 등 분야별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전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달성 지표를 설정
- 비전계획의 목표연도는 수립 시점인 2017년부터 13년 후인 2030년으로 설정

2) 공간적 범위

- 비전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의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충청남도 전체 지역으로 면적은 8,214 km² 임
- 광역도의 행정구역으로서 충청남도 전역을 포괄하며 기초단위 행정구역으로서 15개 시·군을 포함

3) 내용적 범위

-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평등과 관련한 미래 여건의 전망과 충남의 향후 과제 도출
- 둘째, 지역의 여건과 미래 전망에 기반하여 영역별 목표와 과제방향 도출
- 셋째, 비전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이에 부합하는 추진과제 도출
- 넷째, 추진과제의 실현에 부합하는 세부과제와 사업내용의 도출
- 다섯째, 비전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과 비전계획 실현을 위한 점검 체계 구축 방향제시

제3절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의 수립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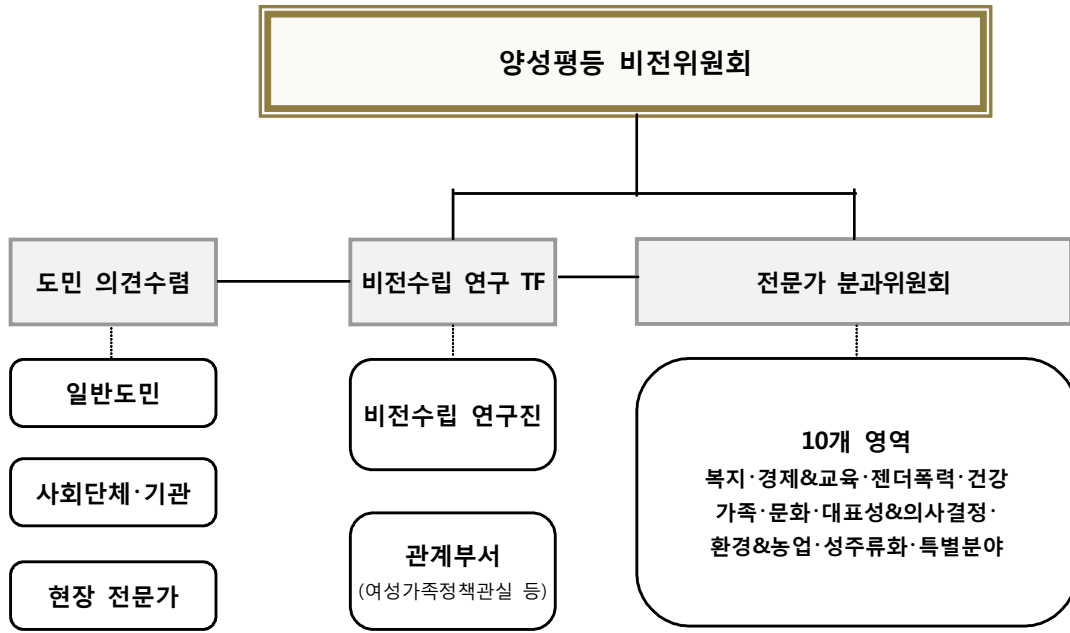
1. 수립방향

-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은 2015년 이후의 발전전략인 지속가능발전과 성평등의 가치를 정합적으로 연계하여, 이 비전계획이 궁극적으로 충남의 미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는데 방점을 둠
- 또한, 이 비전계획이 성평등의 가치와 관점을 반영한 도정 추진의 시스템을 확고히 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성평등 관점에서의 행정 시스템 개선과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
-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은 성평등한 도정 추진을 위한 최상위 계획이자 미래 비전으로서 다음의 방향에 입각하여 수립
- 첫째, 충남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현황에 부합한 미래 비전계획이되, 타 지역과 한국 사회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고 선도할 수 있도록 설계
- 둘째, 이 비전계획이 충남의 일반적인 성평등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하되, 여성 내에서의 차이를 고려하고, 다양한 소수자의 취약성, 차별 현실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하여 충남 성평등 수준의 전체적인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지향
- 셋째, 비전계획 수립의 전 과정에서 도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도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넷째, 비전계획이 구체적인 실현 과정에서 성평등 수준 향상이라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점검 계획과 원칙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계

2. 추진체계

-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은 양성평등 비전위원회, 전문가 분과위원회, 비전 수립 연구 TF팀을 중심으로 각계각층 도민과 사회단체 및 기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
- 충남 양성평등 비전위원회는 비전 수립의 방향 설정,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자문 기구로서 도지사·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총 17명으로 구성·운영
- 전문가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젠더이슈 정리와 비전계획 수립의 추진과제 발굴 등에 관한 자문 단위로서, 복지, 경제&교육, 건강, 젠더폭력, 대표성&의사결정, 가족, 문화, 성주류화, 환경&농업, 특별분야의 10개 분과, 총 45명으로 구성·운영
- 전문가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4~5인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영역별 목표설정과 추진전략 도출, 추진과제 설정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
- 비전수립 TF팀은 비전 수립 연구를 담당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과 비전 수립 추진을 담당한 도 여성가족정책관실로 구성되어 계획 수립의 진행 과정을 공유,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
- 또한 비전 수립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의 채널로 도민 일반, 여성단체 및 경제, 복지 등 사회단체·기관, 현장 전문가의 3개 단위를 운영 하였으며, 도민의 다양한 의견들은 비전계획의 핵심 가치, 목표 도출,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의 발굴과 연계하여 수렴·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
- 특히 도민 일반에 대한 의견수렴은 도민의견조사와 연령별 집담회, 시군토론회, 도민원탁회의(타운홀미팅)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비전계획 수립의 전 과정에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림 1-1>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추진체계

3. 수립과정

■ 사전준비 및 기초연구

-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은 2016년 3월부터 착수하기 시작하였으나 1~2월에는 사전 준비 과정으로, 도 여성가족정책관실과의 협의회, 연구진 구성, 자료 수집 등의 과정을 거쳤음
- 다음 3~4월은 기초연구, 관련 추진위원회 구성, 비전계획 수립의 기본 틀을 확정하는 것으로 진행됨. 기초연구 과정은 연구진들이 여러 차례 학습 및 토론을 통하여 충남의 성평등 관련 현황과 젠더 이슈를 정리하고, 각 영역별로 2030년 미래 여건의 변화와 전망을 도출하는 작업을 수행

■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본 틀 확정

- 비전계획 수립의 주요 추진위원회로서 비전위원회와 10개 영역의 분과별 전문가위원회를 3월에 준비과정을 거쳐 4월에 구성하였으며, 비전계획의 기본 틀을 1차 연구진 워크숍과 1차 비전위원회를 통하여 확정

■ 비전체계 도출

- 다음으로 비전체계 도출을 위하여 5월에는 연령별 집담회, 6월에는 도민의견조사, 분과별 1차 전문가위원회, 5~7월에 걸쳐 시군토론회를 운영함. 연령별 집담회에서는 성평등에 대한 생각, 현재 성평등한 점과 불평등한 점, 주력해서 추진하고 싶은 성평등 정책, 성평등 미래상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는 도민의견조사의 설문문항과 비전체계 초안을 도출하는데 반영
- 5~7월에 시군을 순회하며 진행한 시군토론회에서는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의 방향, 중점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는 비전체계 초안에서 목표와 추진전략을 도출하는데 반영
- 6월에는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도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성평등 현실에 대한 인식, 성평등 미래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별 과제, 비전에 담아야 할 중요 가치, 희망하는 미래 성평등 충남의 모습 등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였고, 그 결과는 비전체계 초안의 도출과정에서 핵심가치, 목표, 추진전략을 설정하는데 활용
- 또한 6월에는 10개의 분과별 1차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영역별 현황과 과제, 미래 여건과 전망, 영역별로 주력하여 추진이 필요한 과제 도출 등에 대하여 논의함. 또한, 전문가 위원 외에 담당부서의 공무원도 참여하여 현재 정책 현황의 파악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비전체계 초안의 작업 과정에 반영
- 8월에는 중간보고회와 2차 비전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비전체계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초안의 수정·보완, 추진전략의 체계를 설정하는데 반영

■ 추진전략 설정 및 추진과제 발굴

- 9월에는 분과별 전문가 위원, 담당부서 공무원이 참여한 2차 전문가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추진전략을 정교하게 다듬고 추진전략별 추진과제의 내용을 발굴하는 과정을 거침
- 9~11월은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의 발굴과 수정·보완 작업을 수행하였고, 우선적으로 10월에 도민 원탁회의(타운홀미팅)를 통하여 도민들의 참여와 직접적인 논의를 거쳐 비전의 대표과제(안)를 선정
- 11월에는 추진과제와 세부과제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발굴, 정리하면서 그 과정에서 영역별 전문가 집담회 운영을 통하여 결과를 반영

■ 세부실현 및 점검계획 도출

- 11~12월은 추진전략-추진과제-세부과제의 사업 내용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향후 비전계획의 실현을 위한 점검 계획을 도출함. 이 과정에서 추진과제의 세부내용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3차 분과별 전문가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그 결과를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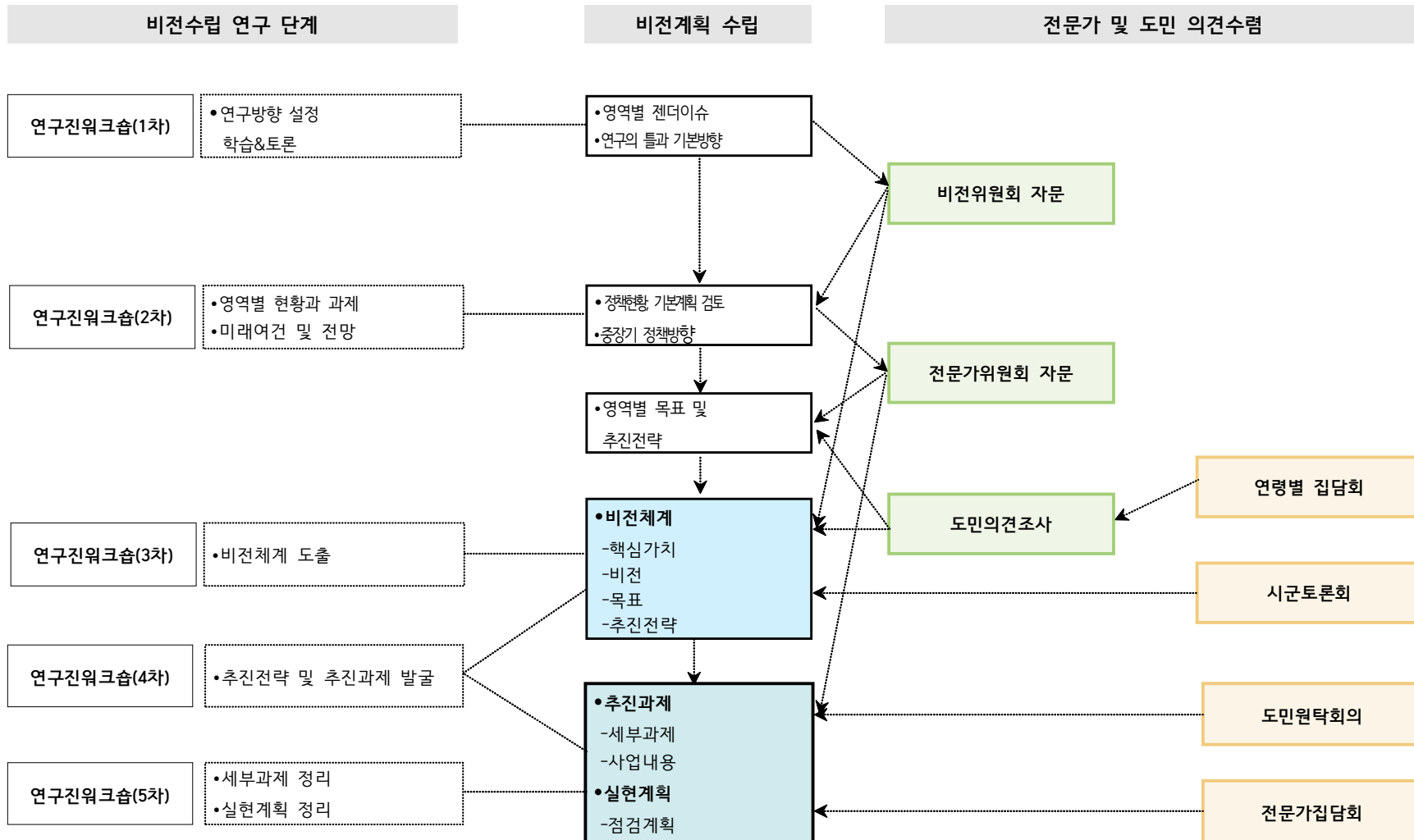
- 또한, 3차 비전위원회에서 비전계획의 추진과제-세부과제 및 세부실현 계획에 대한 자문을 거쳐 비전계획 수립의 최종적인 수정 과정에 반영

■ 비전계획 수립 완료 및 선포

- 12월은 최종보고회를 거쳐 비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도민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발표


<표 1-2>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과정

■ 사전준비	1~2월	▶ 연구진 구성 ▶ 비전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 기초연구	3~4월	▶ 연구진 학습 및 토론 ▶ 비전계획 관련 젠더 이슈 정리
■ 관련 추진위원회 구성	3~4월	▶ 비전위원회 구성·위촉 ▶ 분과별 전문가위원회 구성
■ 비전계획의 기본 틀 확정	3~4월	▶ 1차 연구진워크숍(4.7) ▶ 1차 비전위원회 개최(4.21)
■ 비전체계 도출을 위한 의견수렴	5~7월	▶ 연령별 집담회 운영(5월) ▶ 2차 연구진워크숍(5.20) ▶ 도민의견조사 실시(6월) ▶ 시군토론회(5~7월) ▶ 1차 전문가위원회 운영(6월)
■ 비전체계 초안 도출	7~8월	▶ 3차 연구진워크숍(7.11) ▶ 중간보고회 개최(8.18) ▶ 2차 비전위원회(8.30)
■ 추진전략 설정	9월	▶ 4차 연구진워크숍(9.26) ▶ 2차 전문가위원회 운영(9월)
■ 추진과제, 세부과제 발굴	9~10월	▶ 도민원탁회의(10.24)
■ 추진과제별 세부과제 보완	11월	▶ 5차 연구진워크숍(11.16) ▶ 전문가 집담회 운영(11월)
■ 세부실현계획, 점검계획 도출	11월	▶ 3차 전문가위원회 운영(11월) ▶ 3차 비전위원회 개최(11.29)
■ 비전계획 수립 완료	12월	▶ 최종보고회(12.9) ▶ 비전계획 수립 완료(12월)
■ 비전 선포	12월	▶ 비전 선포(12.14)




<그림 1-2>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과정 체계도


■ 비전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3~4월 • 위원 : 17명 (도지사, 민간위원 공동위원장) 	【1차】 : 4.24 개최 ▷ 영역 설정, 연구방향, 주요 연구방법 자문
	 【2차】 : 8.30 개최 ▷ 비전슬로건 안에 대한 자문 ▷ 비전체계의 구성, 내용에 대한 자문
	【3차】 : 11.29 개최 ▷ 추진전략별 추진과제, 세부과제 자문 ▷ 실현계획, 점검계획에 대한 자문

■ 전문가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3~4월 • 위원 : 45명 (분과별 4~5인) 	【1차】 : 6월 운영 ▷ 영역별 현황 및 과제, 미래여건 및 전망 ▷ 핵심과제의 방향, 내용에 대한 자문
	 【2차】 : 9월 운영 ▷ 추진전략별 추진과제의 구성 ▷ 추진과제별 세부과제의 내용에 대한 자문
	【3차】 : 11월 운영 ▷ 세부과제의 사업내용 ▷ 실현계획에 대한 자문

■ 도민원탁회의(타운홀미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0.24 • 참여자 : 102명 	【1단계】 ▷ 추진과제들에서 대표과제 후보군 도출 - 10대 추진전략별(조별) 1개씩 대표과제 후보군 추출 - 후보군 추출은 조별 토론 후 선정
	 【2단계】 ▷ 대표과제 후보군에 대한 조별 발표 - 조별 대표과제 후보군(1개 과제) 발표
	【3단계】 ▷ 대표과제 선정 - 10개의 대표과제 후보군 중 총3개 대표과제 선정

■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 참여자

-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은 전문가 588명, 도 및 시군 공무원 1,276명, 도민 4,280명인 총 6,144 명이 함께 참여
- 비전 수립과 관련한 토론회, 워크숍, 집담회, 보고회, 공모전, 의견조사 등 총 96회에 이르는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에서 전문가, 공무원, 도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비전을 수립



<그림 1-3>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 참여자

성평등 미래 전망과 과제

제1절 충남 성평등 미래 전망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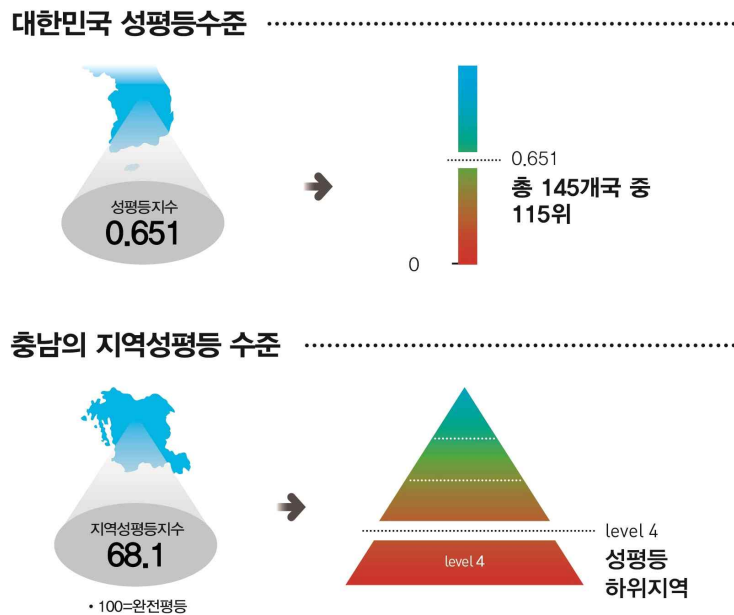
■ 한국과 충남의 성평등 수준은 하위

- 세계경제포럼(WEF)은 2006년부터 4개 분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성별격차를 수치화한 ‘세계 성격차 지수’(the Global Gender Gap Index)의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는데,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0.651(1=완전 평등)로 총 145개국 중 115위에 불과한 현실임(WEF, 2015, The Global Gender Gap Index)
- 한국의 분야별 순위를 살펴보면,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에서는 125위(0.557), ‘교육성취’분야에서는 102위(0.965), ‘건강과 생존’ 분야에서는 79위(0.973), ‘정치적 권한’ 분야에서는 101위(0.107)를 차지
-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전 세계에서 낮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한국 내에서도 충남의 성평등 수준은 현재 4개 등급 중 가장 낮은 ‘성평등 하위지역(level 4)’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시도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위치에 머물러 있는 현실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연구)
- 충남은 종합점수 68.1(100=완전 평등)인 가운데 8개 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보면, ‘경제활동’은 67.8(11위), ‘교육·직업훈련’은 92.3(12위), ‘보건’은 95.5(13위), ‘의사결정’은 14.4(14위), ‘복지’는 72.3(12위), ‘안전’은 53.1(13위), ‘가족’은 66.6(5위), ‘문화·정보’는 82.7(13위)로 전반적으로 낮은 순위를 차지
- 충남과 전국1위 지역의 지수를 비교하여 보면, 특히 ‘의사결정 분야’에서 격차가 25.4p로 가장 크게 나타나 향후 충남의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의사결정 영역에서의 성별 격차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표 2-1> 지역 성평등지수 분야별 현황

구분	경제	교육 직업훈련	보건	의사결정	복지	안전	가족	문화 정보
충남	67.8	92.3	95.5	14.4	72.3	53.1	66.6	82.7
전국1위	73.7	96.0	98.5	39.8	80.6	72.7	73.4	91.5

*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2015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그림 2-1> 한국과 충남의 성평등 수준

■ 한국의 삶의 질 관련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성별 격차도 큰 편

- OECD가 2016년 5월에 발표한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 BLI)에서 한국은 38개국 중 종합순위 28위를 차지하여 삶의 질 수준이 전반적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OECD, 2016, The Better Life Index)
- 총 11개 부문 중 성별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부문은,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생활의 균형의 9개 부분으로서, 일부 지표를 제외하고

는 대부분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OECD, 2016, The Better Life Index)

- 특히 개인소득 지표는 전체 순위 19위, 성 불평등 순위는 38위이고, 장기 실업률 지표는 전체 순위 1위이지만, 성 불평등 순위는 38위이며, 삶의 만족도는 전체 순위 31위, 성 불평등 순위는 38위, 여가와 개인돌봄에 쓴 시간 지표는 전체 순위가 27위, 성 불평등 순위는 37위로 성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OECD, 2016, The Better Life Index)
- 이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낮은 삶의 질 수준은 성 불평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삶의 질과 관련한 여러 부문에서의 성평등 수준이 향상될 때 결과적으로 국가전체의 삶의 질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함

<표 2-2> OECD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의 한국 순위 및 젠더불평등 순위

분야	점수	전체 순위	세부지표	전체순위	젠더불평등 순위
주거	6.1	17	·개인당 방 수	24	-
			·주거관련 지출	27	
			·기본시설을 갖춘 가구	2	
소득(가구)	2.5	24	·가구당 순가처분 소득	24	-
			·가구당 금융순자산	20	
직업	7.7	17	·직업안정	5	18
			·개인소득	19	38
			·고용률	23	32
			·장기실업률	1	38
공동체	0.2	37	·지원 관계망의 질	37	37
교육	8.0	6	·기대 교육기간	18	37
			·학생역량	1	2
			·교육성취	15	33
환경	2.9	37	·공기오염	38	2
			·수질	26	
시민참여	6.1	10	·이해관계자로서 규정제정 참여	14	-
			·투표율	12	30
건강	4.7	35	·평균수명	12	31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38	35
삶의 만족도	3.3	31	·삶의 만족도	31	38
안전	7.6	21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	22	12
			·살인율	21	19
일-생활 균형	5.0	36	·장시간 노동자 수	36	9
			·여가와 개인돌봄에 쓴 시간	27	37

* 자료 :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홈페이지(<http://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 한편, 성평등은 국가 차원의 삶의 질 수준의 향상과 직접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수준의 성평등을 유지하면 2025년까지 향후 10년간 전 세계 경제가 33조 달러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더하여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이 실현될 경우 28조 달러가 추가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제시한 바 있음(Mckinsey Global Institute, 2015)

■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증가와 이에 대한 정책 대응 강화 필요

- 한국의 미래는 고령화와 인구절벽 현상의 심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며, 그에 따른 부양비 증가, 세대갈등 증가와 함께 사회 전반의 발전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충남의 경우 2016년 현재 노령화율은 16.8%(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지만, 향후 2030년에는 26.6%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노령화지수(유소년층 인군대비 노년층 인구)도 2016년 현재 193.0에서 2030년에는 203.2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미래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은 산업구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모습을 변화시키는데, 특히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는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점차 없애지게 만들고, 사람들의 생활패턴과 속도, 관계망의 형성 등에 있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고르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사회적 자원의 수혜와 관련하여 계층, 세대, 지역 간 격차 또한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 구조가 지속될 경우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음
- 또한, 환경오염의 심화, 재해의 증가 등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도 증가하고 있음
- 앞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격차 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즉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형평성을 높이는 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임
- 특히 형평성의 접근에서 ‘성평등’은, 사회 구성원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위가 성별이라는 점 외에도, 성 불평등의 문제가 가장 오래된 구조적 차별 중의 하나이자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궁극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성평등을 강화하는 정책 패러다임은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많은 사회 문제의 해결에도 보다 유연하고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임

1. 복지

1) 현황

■ 빈곤과 젠더의 연관성: 빈곤의 여성화

-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 연구 과정에서 실시한 ‘도민의견조사’ 결과, 빈곤탈출 성인지적 정책이 7.87점(여성7.97점, 남성 7.71점)이며, 소득 보장 최저기준 달성이 7.96점(여성8.09점, 남성 7.75점)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정책욕구가 높게 나타남. 이미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발표된 북경여성행동강령에서는 빈곤 여성의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며 농촌 여성노인의 빈곤과 삶의 질 낮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충남의 인구대비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비율은 2012년 2.9%(58,363명)에서 2015년 말 기준으로 3.1%(64,120명)로 증가함. 이러한 저소득층 증가추이는 『충남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2013)』에서 설정한 기준선인 1.3%(2023년까지 저소득층 비율)와는 상반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충남 저소득층의 수급자 수는 64,120명(2015년)으로 여성(54.6%)이 남성(45.4%)보다 많은데, 인구수 대비 성비를 보면, 여성이 3.4%, 남성이 2.8%로 여성이 높게 나타나 빈곤과 성별의 연관성이 나타남

<표2-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성별현황

기준: 2015. 12월말

국민기초수급자 수					인구수 대비 국민기초수급자 성별 비율				
계	남성	비율	여성	비율	계	남성	비율	여성	비율
64,120	29,093	45.4	35,027	54.6	2,077,649	1,054,439	2.8	1,023,210	3.4

* 자료: 충청남도, 2016,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 성인지 관점의 사회적 배제: 여성노인의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증가

- 사회적 배제(다차원적인 빈곤유형)가 발생하는 기제에서 성을 기준으로 배제가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배제의 결과가 ‘빈곤의 여성화’임. 특히 생애주기 관점에서 ‘빈곤의 여성화’는 연령이 높을수록 그 정도가 심화됨. 65세 이상의 여성노인은 공공부조 의존도가 높고 빈곤율이 높음. 이는 노동시장의 낮은 경력, 빈약한 교육경험 등에 따른 것임(안현

미, 2005; 송미영, 2011: 7)

- 충남의 노인 인구수(2015년 12월 말)는 341,214명으로 여성은 58%(199,107명), 남성은 42%(142,107명)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음.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은 27.4%(93,532명)로 나타남. 독거노인 중 여성은 72%(67,337명)를 차지해 남성 28%(26,295명)보다 2.5배 높음(충청남도, 2016, 여성가족정책관 내부자료)
- 여성 독거노인은 고령화될수록 절대적 빈곤이 심화되고 있음. 독거노인 가운데 빈곤한 독거노인비율(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은 17.2%(16,060명)임
- 빈곤한 독거노인의 74%(11,807명)가 여성으로, 남성 26%(4,253명)보다 2.8배 높게 나타남. 또한 80세 이상의 독거노인(28,151명) 중 빈곤한 여성 독거노인 비율은 80%(4,977명)로 나타남(남성 20%)(충청남도, 2016, 여성가족정책관 내부자료)

<표 2-4> 독거노인 현황 (1951.1.1.이전 출생자)

기준: 2015. 12월말

시군	독거노인								
	계			일반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계	남성	여성	계	남	여	계	남성	여성
계	93,532	26,295	67,337	77,472	22,042	55,430	16,060	4,253	11,807

* 자료 : 충청남도, 2016,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내부자료

<표 2-5> 80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1936.1.1.이전 출생자)

기준: 2015. 12월말

시군	독거노인 수								
	계			일반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8,151	5,763	22,389	21,933	4,523	17,410	6,216	1,239	4,977

* 자료 : 충청남도, 2016,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내부자료

■ 빈곤 여성의 사회 안전망 취약: 농촌 여성노인의 빈곤과 낮은 삶의 질

- 충남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72%로 나타남. 기초연금 수급자(246,009명) 중 여성노인은 63%(155,562명), 남성 노인은 37%(90,447명)로 여성노인의 수급률이 현저히 높게 나타남
- 충남도 농촌지역의 수급률이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며, 수급자 중 여성노인의 수급률이 남성노인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남

<표 2-6> 기초연금¹⁾ 수급자 현황

기준: 2016. 3월

시군	전체			수급자 성별		
	65세이상 노인인구수	수급자	미수급자	수급률	남자	여자
합 계	343,287	246,009	97,278	71.66	90,447	155,562
천안시	55,268	34,640	20,628	62.68	12,158	22,482
공주시	23,902	17,358	6,544	72.62	6,458	10,900
보령시	22,555	17,337	5,218	76.87	6,474	10,863
아산시	34,212	22,297	11,915	65.17	7,865	14,432
서산시	27,423	19,575	7,848	71.38	7,173	12,402
논산시	27,741	21,610	6,131	77.90	8,121	13,489
계룡시	3,643	2,307	1,336	63.33	703	1,604
당진시	26,981	16,819	10,162	62.34	5,956	10,863
금산군	14,388	11,638	2,750	80.89	4,360	7,278
부여군	20,573	16,640	3,933	80.88	6,335	10,305
서천군	17,490	14,194	3,296	81.15	5,353	8,841
청양군	10,206	8,268	1,938	81.01	3,143	5,125
홍성군	20,762	15,620	5,142	75.23	5,867	9,753
예산군	21,679	15,759	5,920	72.69	5,898	9,861
태안군	16,464	11,947	4,517	72.56	4,583	7,364

* 자료 : 충청남도, 2016,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내부자료

■ 노인 돌봄 및 안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격차 발생

- 노인의 빈곤·질병·안전 등 복지수요 커짐. 2015년 충남의 고령화율(330천명, 16.4%)은 전국 5위, 노인 자살률은 전국 1위임. 노인 4명 중 1명이 독거노인으로 독거노인 비율(27.4%, 4명 중 1명) 증가함(충청남도, 2016,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내부자료)
- 독거노인의 돌봄 및 안전 서비스 지원 비율 낮음. 빈곤한 독거노인(16,060명) 중 독거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13%(2,110명), 독거노인(93,532명) 중 응급안전돌봄 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9.7%(9,097명)로 나타남

<표 2-7> 독거노인의 돌봄서비스 현황

기준: 2015. 12월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응급안전돌봄서비스 대상자			독거노인중노인돌봄 종합서비스대상자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12,725	1,665	11,051	9,097	953	8,144	2,110	687	1,423

* 자료 : 충청남도, 2016,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내부자료

1) 65세 이상 한국국적을 가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기준은 소득인정액(재산+소득)은 단독가구 1,000,000원, 노인부부는 1,600,000원.

■ 아동 돌봄 환경 조성 필요

- 출산율이 전국 상위권('14년 전국 1.21명, 충남 1.42명/4위)을 유지하고 있지만 연도별 출산율은 지속적인 하락세('12년 1.57→ '13년 1.44 → '14년 1.42)를 보이고 있음(충청남도, 2016,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내부자료)
- 충남도의 미취약 자녀 보육시설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65점으로 낮음.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의 1순위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32.1%)로 나타남(충청남도, 2015, 2015 충남 사회지표)

2) 미래전망

■ 고령화로 인한 복지분야 세대간 긴장감 고조

- 충남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1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37.23명을 부양했지만, 204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은 67.45명을 부양해야 함(충남연구원, 2016). 향후 충남은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용구조 변화, 노인과 관련된 건강보험정책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세대 간 격차 및 갈등 심화 등의 문제를 겪을 것임. 구체적으로 노인빈곤, 고독사, 치매노인, 자살, 돌봄 인력 부족 및 돌봄 비용 부담 증가, 노인범죄 증가, 지역인구 불균형 등의 문제임(강은나 외, 2014)

■ 여성 노인의 빈곤 심화

- 충남도 내 이미 초고령 사회(20% 이상)로 접어든 10개 시·군의 경우 계속 초고령 사회로서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고령사회(14%이상~19%)인 2개 시·군은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할 가능성, 고령화 사회(7%이상~13%)인 3개 시·군의 경우 고령화 사회 유지 혹은 고령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
- 노인 인구 중 여성노인의 비중이 높고, 노인 빈곤의 70% 이상이 여성노인빈곤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여성노인빈곤이 심화될 것임

■ 초저출산 현상 지속과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무 강화

- 향후 충남은 저출산이 지속되어 초저출산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 전년도와 비교해 2014년 출산율은 1.42명으로 출생아수는 428명, 혼인건수는 442건, 가임 여성수는 2,576명 감소되었음(충청남도·충청남도교육청, 2016)
- 이러한 초저출산의 기초를 가져오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아동 돌봄에 대한 높은 부담과 어려움이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음

- 한편,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 연구 수행 과정에서 실시한 도민의견조사에서는 성평등을 위한 개선 필요 항목으로 ‘자녀양육환경 마련’이 7.55점(10점)으로 높게 나타나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는 정책의 강화가 요구됨

3) 과제

■ 모든 형태의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성인지적 정책과 프로그램 강화

- 빈곤은 경제적 결핍의 차원을 넘어 사회·문화·심리적 결핍 등과 연계되어 있음. 여성노인은 남성노인과 비교해 경제·실업·주거·교육·건강·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사회적 참여로부터 배제되어 있음(송미영, 2011). 따라서 여성 노인의 빈곤문제는 경제적 결핍 외에 고용·건강·주거·사회참여·교통·사회적 포용·사회적 관계망 등의 영역까지 포괄하여 다차원적인 빈곤완화를 위한 총남도 차원의 관심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
- 모든 형태의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성인지적 정책과 프로그램 강화 및 발굴, 빈곤 여성의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취약여성의 주거복지 지원을 통한 생활안전망 구축이 필요

■ 지역사회 기반 수요자 중심의 균형잡힌 노인 돌봄 시스템 및 생활안전망 구축

- 절대적인 노인 돌봄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각 지자체 차원에서 치료적 차원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돌봄 서비스 인프라 및 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이뤄져야 함. 이와 함께 고령인구가 자살, 범죄, 사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노인 친화적인 생활안전망 구축이 이뤄져야 함

■ 저출산 극복 및 아동돌봄 환경 토대 마련

- 충남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은 젊은 세대의 유입을 통해 출산력을 높이고 인구 고령화를 낮추는 것이며, 젊은 세대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일·가족 균형 정책의 확대가 필요. 결국 남성과 여성이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돌봄환경 조성 등이 필요
-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충남도만의 특화된 지역정책이 필요함.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과 함께 다양한 보육 수요를 수용하는 틈새 없는 보육환경 토대 마련이 요청됨

2. 건강

1) 현황

■ 성별 건강 관련 삶의 질

- 충남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보건분야 지표인 건강관련 삶의 질(EQ-5D)과 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보면, 건강관련 삶의 질(EQ-5D)성비지표는 2012년 96.2에서 2014년 96.5로 개선되었고,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지표는 2012년 95.2에서 2013년 95.4로 상승하였으나 2014년 94.6으로 하락

<표 2-8> 충남 보건분야의 세부지표(2014년 기준)

(단위 :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성비	평균점수
충남	96.5	94.6	95.5
분야1위지역	97.0	100.0	98.5
한국평균	96.6	96.6	96.1

*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5,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분석』, 보건복지부, 2015, 『건강보험통계』.

-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의 성비 지표는 전국평균보다 0.1p,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1.0p낮아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 다만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지표는 보건분야 1위 지역보다 5.4p 낮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건강에 대한 인식의 성별 차이

- 2015년 충남 사회지표 분석 결과를 보면, 도민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7점이었고, 2013년 대비 소폭 증가. ‘행복’은 6.03, ‘근심걱정’은 4.28, ‘우울’ 3.49, ‘하고 있는 일 가치’에 대한 평가 5.86점으로 2013년 대비 전반적 하락추세임. 주이용 의료시설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02점으로 나타났으나,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자료는 없음
-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WTO), 주관적으로 평가한 건강상태는 현재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을 위한 개인의 노력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짐
- 충남 여성의 경우 자가 평가 건강수준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6년에 20.3%, 남성은 12.6%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건강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통계청, 2016, 사회조사)

- 한편, 여성의 자가 평가 건강수준의 전국평균은 18.0%로 충남 여성의 건강평가가 전국 평균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대수명의 경우 2014년 기준 충남 여성의 기대여명은 85.3세로 78.2세인 남성에 비해 높았으며 건강 수명에는 성별에 따른 큰 차이가 없기에 여성의 긴 수명은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예방을 통한 건강수명의 연장과 만성질환의 지속적 관리를 통한 건강한 생활이 중요함을 보여줌(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일반적으로 여성이 주관적 건강 평가가 낮은 한편, 활동제한율(현재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은 비율)은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은 일상적인 건강 문제가 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줌

■ 의료서비스 이용빈도

- 의료서비스 이용빈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은 평균 14.45회, 남성은 10.79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길고 유병률이 높은 특성에 따른 것이며, 의료서비스 이용 여건이 보다 개선되는 변화는 결국 여성에게 더욱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함

<표2-9> 충남도민의 의료서비스 이용빈도

성별	1~4회	5~9회	10~19회	20회이상	평균
여성	33.9	21.0	24.5	20.5	14.49
남성	44.4	20.4	21.9	13.3	10.79

* 자료: 충청남도, 2015, 『2015 충남 사회지표』 원자료 분석.

2) 미래전망

■ 사회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역 주민의 건강불평등 심화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신체적·객관적 건강수준은 상위수준에, 정신적·주관적 건강수준은 최하위수준에, 그리고 건강형평성은 하위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 등으로 충남도 주민의 미충족 보건의료수요가 증가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만혼·초산 연령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직장생활과

육아의 병행 등에 의한 모성건강의 위협요소들은 여성개인의 건강과 사회재생산에 영향을 미침

■ 지속되는 여성의 건강불평등 문제

- 여성의 유병률은 높으나 의료이용 정도는 남성이 더 높고, 평균수명은 남성에 비해 길지만 건강수명은 차이가 적어 질병상태로 살아가는 기간이 길며, 신체적 특성에 따른 여성 고유의 건강 및 질병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건강에 취약

■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국가는 국제사회공통의 정책목표로 제시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기대여명 연장, 예방적 건강관리, 모성보호, 건강검진에 대한 지속가능발전계획의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음
- 여성건강과 관련해 모성건강만이 아닌 신체·심리·사회적 건강으로까지 건강 개념을 확대하는 여성건강의 재개념화와 영역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3) 과제

■ 여성의 생애주기별 신체·정신·사회적 건강 문제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 여성의 생애주기별 충남 여성의 건강 문제에 대한 분석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생애주기별로 나타난 취약점에 대한 조사, 조사결과에 토대를 둔 맞춤형 해결방안 마련, 관련 제도 및 정책마련. 1차 건강관리 기관인 보건소를 중심으로 충남 여성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과의 네트워크, 사업추진 및 결과평가가 필요
- 정신건강과 관련해 기존 통계자료를 이용해 생애주기별 충남 여성의 정신건강 실태를 분석하고 건강관리 및 정책마련 필요함. 또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충남여성의 건강상태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방안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정신건강 정책 수행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여성건강정책 총괄 기구의 중요성, 생애주기별 접근의 중요성, 지역에 기반한 정책 개발의 중요성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여성 건강관리 시범사업 공모 및 선정, 충남의 지역별 여성 건강문제의 특성에 따라 사업을 구상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공모하고 해당 사업 결과를 충청남도 보건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건강측정 대표지표인 삶의 질과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및 자가 건강인식 향상

- 충남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보건분야 지표인 건강관련 삶의 질(EQ-5D)과 건강검진 수검률을 분석해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충남 여성의 자가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이에 대한 개선책을 통해 자가 건강상태 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공보건의료 기관을 활용한 여성건강 향상

- 충남 여성의 취약한 건강 부분과 관련된 여성전문센터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여성 건강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 모성보호 취약업종(병원, 출판업 등)별 고용평등협의회 구성 등 기초고용평등 질서 확립 필요. 건강보험 임신출산 정보 등 빅 데이터 활용,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 등 위법 사업장 적발 강화 등 필요

3. 젠더폭력

1) 현황

■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폭력 증가

-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와 성매매 등 각종 폭력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례로 강간·추행은 2015년 충남에서의 발생건수가 825건으로 최근 연 800건 이상 발생하였고, 카메라를 이용한 신체촬영과 같은 일명 ‘몰카촬영’ 발생도 매해 크게 증가하는 추세
- 최근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를 비롯하여,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는 각종 폭력들이 개인 간의 관계나 사적 영역을 넘어서, 공공장소 등 지역사회 커뮤니티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스토킹, 성적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특정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살인과 같은 여성혐오 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확대
- 또한, 여성의 성을 극단적으로 상품화한 성매매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이루

어지고 있고,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일상생활의 공간에 포진되어 있으며, 충남 지역도 도시, 농촌 지역에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관련 업소들이 있으며 성매매 알선과 성구매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표 2-10> 충남의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 강간·추행	762건(2012) → 851건(2013) → 825건(2015)
■ 몰카 촬영	52건(2012) → 136건(2013) → 315건(2015)
■ 성매매 알선	15건(2012) → 39건(2013) → 69건(2015)

* 자료: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2013~2016)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의 증가

- 젠더폭력은 성 차별적 구조에서 비롯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폭력의 대상이 주로 여성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주여성, 여성장애인, 청소년 집단의 경우 젠더폭력에 대하여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
- 일례로 충남의 경우, 도내 젠더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 건수 중에서 이주여성이 의뢰한 상담건수는 2014년 1,588건, 2015년 2,501건으로 전년대비 17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충청남도 2016, 여성가족정책관실 내부자료)
- 노동이주여성은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취업비율은 높지만, 내국인 남성 중심 산업·노동구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차별적 요인 이외에도 이주여성이기에 노출되는 위협들이 존재(내국인 여성에 비해 더 쉬운 성희롱·성폭력, 임신·출산으로 인한 해고와 미등록 신분 추락, 고위험 출산 등)
- 특히, 전통적 가치가 중시되고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강하게 남아 있는 지방의 고립된 농촌에서 농업 분야에 고용된 노동이주여성의 경우, 무시와 차별 뿐 아니라 성폭력 노출 위험은 더욱 증가(국가인권위원회, 2013, 농축산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 폭력피해 등 인권침해를 당한 위기 이주여성의 체류와 귀화, 장애 대응지원 등 기존 법규의 사각지대에 처한 이주여성 상담 및 보호 조치 확대가 필요
- 충남의 성폭력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20세 이하)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35.4%, 2014년 44.5%, 2015년 36.7%이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는 2013년 69명, 2014년 45명, 2015년 56명으로 나타남(충남지방경찰청, 2016, 내부자료)
- 젠더폭력은 한 사람의 피해자에게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중첩적으로 발생하거나 피해 결과가 표면화되기까지 장기간 누적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러한 비가시적 특성 속에서 이주민, 장애인, 청소년 등의 집단은 젠더폭력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표 2-11> 충남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 현황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35.4%(2013) → 44.5%(2014) → 36.7%(2015)
■ 장애인 성폭력 피해	69명(2013) → 45명(2014) → 56명(2015)

* 자료: 충남지방경찰청 2016, 내부자료.

■ 폭력 등 범죄에 대한 불안 심화와 안전 환경에 대한 낮은 평가

- 폭력 등 강력범죄의 위협에 대한 안전도에 대하여 충남 여성의 30.1%, 남성의 26.3%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고, 반면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여성 27.1%, 남성 28.1%임 (충청남도, 2015, 2015 충남 사회지표)
- 연령별로 안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20대 여성의 35.0%, 30대 여성 33.3%, 15~19세 여성의 31.7%가 범죄위험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반면, 남성은 30대의 29.8%, 40대의 26.8%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특히 30대 이하의 젊은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음
- 안전 환경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충남 여성의 38.1%, 남성의 37.7%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여 안전 환경에 대하여 낮게 평가하고 있고, 특히 20대 여성의 52.6%, 15~19세 여성의 49.5%가 안전 환경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젊은 연령층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

<표 2-12> 충남도민의 범죄위험 및 안전 환경에 대한 평가

여성	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30.1%가 범죄위험에 불안함 ▶ 20대 여성의 35%, 30대 여성의 33.3%가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 26.3%가 범죄위험에 불안함 ▶ 30대 남성의 29.8%, 40대 남성의 26.8%가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38.1%가 안전환경에 대하여 부정적 ▶ 20대 여성 52.6%, 15~19세 여성 49.5%가 부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 37.7%가 안전환경에 대하여 부정적

* 자료: 충청남도, 2015, 『2015 충남 사회지표』 원자료 분석.

2) 미래전망

■ 도시화와 공동화 현상의 심화, 젠더폭력 취약 지역 증가

-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집중과 도시화가 심화되는 한편,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함께 인구과소화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또한, 도시지역 내에서도 신개발 지역

을 중심으로의 인구집중,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주거공간의 계층적 분화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공간구조의 변화와 함께 생활공간에서의 공동체적 관계와 기반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에 취약한 지역도 늘어나 향후 지역 차원에서의 젠더 폭력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임

■ 1인가구의 증가와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수요 증가

- 2010년도 기준, 충남의 1인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 중 26.9%였으나 2020년은 33.4%, 2030년은 37.3%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국가통계포털, 장래가구추계), 그 가운데 여성 1인가구도 청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에서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여성 1인가구의 증가는 성폭력 등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욕구와 수요를 증폭시킬 것으로 전망

■ 과학기술의 발전 및 새로운 매체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젠더폭력 등장

- 과학기술의 발전, 새로운 매체의 발달은 방법기술의 발전과 첨단 방법도구의 활용과 연결되어 젠더폭력 방지와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한편에서는 첨단 기술과 새로운 매체의 발달 및 확산과 함께 여성의 성 상품화를 확산시키는 등 새로운 유형의 젠더폭력 발생이 이슈로 부각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도 증가

■ 글로벌화의 진전과 함께 국제적 성착취 및 인신매매 확대

- 글로벌화의 진전과 함께 국내 이주민의 증가, 국민의 해외여행 및 체류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국내의 성산업 시스템과 연결된 이주여성의 인신매매 피해, 국민의 해외 성구매, 범죄조직과 연계된 국민의 해외 성매매 송출 등과 같은 여성에 대한 국제적 성착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성착취 및 인신매매의 문제는 젠더 폭력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임

3) 과제

■ 폭력에 둔감한 문화의 개선과 도민의 반(反)폭력 감수성 제고

- 충남의 여성에 대한 젠더폭력의 지속적 증가는 가정, 학교, 직장, 지역 내 다양한 커뮤니티 내에서 반(反)폭력 감수성과 인권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다차원적인 젠더폭력 예방체계 강화가 성평등한 충남을 위한 선결 과제

- 젠더폭력 예방체계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훈련이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마련되도록 하고 교육훈련의 효과가 일상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 뿐 아니라 생애과정에서의 각 과정별로 교육과 훈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젠더폭력 이슈에 대한 미래지향적 대응 필요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여성의 성폭력, 가족 내 혹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성착취 인신매매의 문제, 새로운 유형의 여성의 몸에 대한 성적 대상화 등의 문제는 기존의 젠더폭력 이슈에 더하여 새로운 이슈로 한층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젠더 폭력 이슈들에 대한 조사·분석, 모니터링이 주기적으로 이뤄져 효과적으로 정책화되고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폭력 피해 지원 체계의 효과적 구축과 운영 강화

- 현재 젠더폭력 피해 지원은 관련법의 시행과 함께 수사, 상담 및 심리 치료, 의료, 법률 지원 및 지원분야별 연계서비스 제공 등 전반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젠더폭력 지원 기관들의 효과적인 운영과 연계 체계가 피해자의 회복력과 나아가 충남도 내의 젠더폭력의 방지와 직결됨. 도내의 대표적인 ‘인권 지킴이’로서 폭력 피해 지원 체계의 효과적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과 함께 이를 위한 재정 투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젠더폭력 취약 집단에 대한 대응책 강화

- 이주여성, 여성장애인, 청소년은 폭력 피해 위험의 정도 외에도 피해 후 대처에서의 취약성이 높은 집단으로 향후 젠더폭력 피해 지원체계는 취약집단 지원 전문성을 높이고, 이주여성, 장애인, 청소년 관련 지원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공조와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만들기

- 충남 지역은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성격의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인 시군이 혼재된 광역 단위로서 권역별, 시군별 여건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젠더폭력과 관련한 지역별 지속적인 조사·분석과 자료 구축 통하여 성폭력 등 범죄 발생 위험의 공간적 특성, 경향성을 파악하고, 이를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의 설계에 다각도로 접목해야함. 또한, 주민들이 지역의 여러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동네자치 또는 마을단위 공동체 조성 그 동력을 통해 주민과 함께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해가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경제

1) 현황

■ 충남 경제활동참가율 남녀간 성별격차 전국 2위

- 2015년 충남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52.3%, 76.8%로 전국 평균(여성 51.8%, 남성 73.8%)보다 높지만, 남녀 간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24.5%p)는 울산(33.9%p)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함(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지난 10년간 충남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이 70% 후반에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한 반면 여성은 50% 초반에서 별다른 진폭 없이 정체 상태임

<표 2-13> 충남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06~'15)

단위: %, %p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남	77.1	77.6	75.0	74.6	74.1	75.0	75.0	77.3	76.8	76.8
여	54.2	55.0	52.6	50.5	50.5	50.1	50.9	51.8	52.2	52.3
격차	22.9	22.6	22.4	24.1	23.6	24.9	24.1	25.5	24.6	24.5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성별 업종 분리 심화

- 충남의 산업별·성별 고용구조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제조업 종사자수가 가장 많음. 그 외 산업에서 여성은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의 5개 산업에 종사자가 집중되어 있음. 업종별 여성 대표자 비중 또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9.6%, 숙박·음식업 65.2%, 교육서비스업 56.4% 순으로 편중되어 있음

<표 2-14> 산업별 종사자 현황 및 대표자 성비

		종사자수(명)			여성대표자 비율
		계	남	여	
전 산업		812,822	495,865	316,957	39.0
Top5 업종	제조업	265,732	200,978	64,754	24.4
	도매·소매업	99,017	52,698	46,319	46.8
	숙박·음식점업	84,244	29,315	54,929	65.2
	교육서비스업	60,275	26,265	34,010	56.4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55,777	11,385	44,392	79.6

* 자료 : 통계청, 2014, 『전국사업체조사』

■ 일자리의 성별 질적 차이

- 충남의 경제활동분야 성평등 지수(2014년 기준)는 67.8로 전국 11위임.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68.0, 상용근로자 성비 75.7, 성별 임금격차 59.8로 하위권임. 또한 충남 여성의 평균 재직기간은 4.63년으로 남성 6.46년에 비해 2년 이상 짧음(주재선, 2015: 128)
- 충남도 인력양성 및 창업 프로그램의 여성 참여율은 16%로 매우 저조
- 도민들은 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취·창업지원 사업(28.1%)을, 가장 불평등한 분야로 직장(32.4%)을 꼽음(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 도민의견조사, '16.3)

<표 2-15> 경제활동 분야 충남의 성평등 현황

<경제활동 분야 충남 성평등 지수(2014)>	
■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지수 : 충남 67.8 (전국 11위)	
-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68.0, 상용근로자 성비 75.7, 성별 임금격차 59.8	
■ 평균 재직기간 : 여성 4.63년, 남성 6.46년	
■ 충남도 맞춤형 인력양성 및 창업 프로그램 성별 참여 현황 : 남성 84.0%, 여성 16.0%	

*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2015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충청남도. 『2015 충남 사회지표』, 충청남도. 2016.5.10. 『양성평등 대표과제 발굴 보고회』 자료

■ 여성의 경력단절과 일자리 장벽

-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의 주요 원인은 경력단절임. 충남도 15~54세 비취업여성(157천명) 가운데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59.9%로 전국 평균(53.9%)에 비해 높음(통계청, 201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특히 20~30대 경력단절여성 비율(15~29세 14.1%, 30~39세 57.0%)이 전국 평균(15~29세 8.6%, 30~39세 53.1%)보다 높아 전형적인 M자 곡선을 나타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 여성의 주된 취업 장애요인은 가사 및 육아부담(57.2%),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관행(22.1%), 불평등한 근로여건(11.9%)으로 전통적인 성역할과 차별적인 근로여건(34.0%)이 함께 작용함(충청남도, 2014, 2014 충남사회지표)

<표 2-16> 충남의 경력단절여성 현황

단위 : 천명, %

	15~54세 기혼여성	비취업여성	경력단절여성
전국	9,420	3,815(100.0)	2,053(53.8)
충남	402	157(100.0)	94(59.8)
연령대별 경력단절여성	전국 : 15~29세 8.6%, 30~39세 53.1%, 40~49세 29.8%, 50~53세 8.5%		
	충남 : 15~29세 14.1%, 30~39세 57.0%, 40~49세 24.2%, 50~53세 4.7%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경력단절여성통계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 각 년도 상반기

■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장

- 충남의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2014년 436개, 2015년 523개, 2016년 610개(사회적기업 134개, 마을기업 109개, 협동조합 367개)로 증가함. 그러나 사회적경제 기업의 여성대표자 비율은 22.6%로 도내 기업체 여성 대표자 비율 39.0% 보다 낮음

<표 2-17> 충남의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단위 : 업체 수, %

	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여성대표자 비율
2014년	436	143	90	203	-
2015년	523	139	96	288	-
2016년	610	134	109	367	22.6

*자료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16년 11월 기준), 여성 대표자 비율('16년 3월 사회적기업 기준)

2) 미래전망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와 일·생활의 균형 확산

- 충남의 일자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정책 프레임으로 전환될 것임. 여성의 교육훈련 참여 확대와 일터에서의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을 통해 경력단절 없는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임
- 여성의 경제활동은 일과 생활의 균형과 맞물려 있음. 그러므로 여성의 일자리 참여와 고용유지를 방해하는 약한 고리를 집중 보완하여 여성의 일할 권리와 기회를 확장해 나갈 것임

■ 남녀 고용평등 강화

- 일터의 차별 개선, 전문직종 교육훈련 참여 확대, 노동권의 보호, 임금격차 해소 등을 통한 남녀 고용평등을 위한 정책 노력들이 진척될 것임

■ 자본주의 4.0의 확장과 지역 공동체 경제의 성장

- 시장과 정부의 동반적 관계설정이 중시되고 공공정책과 경제 전략에서 실험정신과 실용주의가 강조될 것임
- 지역 공동체 경제의 확장, 생활경제의 성장 등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성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임. 기존 경제적 생산성 및 효율

성에 몰입된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공생, 협력, 상생이라는 사회적 책임이 결합된 성장 모델에 대한 기대가 증가할 것임

3) 과제

■ 성인지적 일자리 정책 추진

- 현재 경력단절여성을 중심으로 협소하게 모델링된 충남도 여성 일자리 정책의 지평을 미취업여성을 포함한 여성 전체로 확장하고 비자발적인 실업이 없는 성장을 도모해야 함
- 지역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지역 일자리 전략에 젠더를 교차시키는 입체적 전환이 필요함. 지속가능한 여성 일자리 확대, 일터에서의 고용평등 강화, 여성의 노동권 신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참여와 성평등한 노동환경이 구축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여성일자리기관의 기능 강화, 고부가가치 취·창업 프로그램의 여성 참여 확대, 지역 공동체 경제의 여성 창업 활성화 등이 필요

■ 차별없는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 결혼, 임신과 출산, 돌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동선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유발하고 남성과 달리 여성에게 두터운 경제활동 장벽을 형성함. 따라서 성별에 따른 일자리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의 일자리 구조는 대개 상대적 저임금, 하위직급, 서비스직, 탈숙련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적, 통계적 차별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일자리 질서를 정착시켜야 함
- 이를 위해 성별고용지표 관리,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강화, 성차별 없는 표준임금체계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

■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노동환경 조성

- 맞벌이, 맞살림 시대에 일과 생활의 균형은 여성의 경력유지와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의 필요충분조건임
- 일과 생활의 균형 전략은 삶을 지지하는 사업장의 근로환경과 기업문화, 그리고 남녀가 함께하는 공동 책임 원리가 중요함. 이를 위해 가족친화경영 확대, 남녀가 상생하는 기업문화 안착, 일·생활지원 인프라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

5. 대표성과 의사결정/성 주류화

1) 현황

■ 충남 여성 과소대표성 : 의사결정 영역 성평등 수준 전국 하위권

- 여성 대표성 및 의사결정 관련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지역성평등지수를 살펴보면, 충청남도는 2012년 18.9, 2013년 14.5, 2014년 14.4로 하락 추세에 있으며 2014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를 차지

<표 2-18> 최근 3년간 충청남도 의사결정 분야 세부지표 변화 추이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영역 및 세부지표	2012		2013		2014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의사결정	18.9	11	14.5	15	14.4	14
광역 및 기초의원 성비	16.4	12	16.4	12	18.1	13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13.7	15	14.5	15	15.0	16
관리자 비율 성비	26.6	3	12.4	11	10.0	13

*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2015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정치 분야 여성 과소대표성은 기초의회보다 광역의회가 더욱 뚜렷하고 여성비율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전국 추세와 달리 충청남도는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 전국평균은 2006년 12.1%에서 2014년 14.3%로 2.2%p 증가하였으나, 충청남도는 2006년 10.5%에서 2014년 5.0%로 5.5%p 감소함. 같은 기간 기초의회 여성비율은 12.4%에서 23.7%로 증가해 전국 수준의 상승폭을 보임
- 충청남도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6.3%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차지함. 상위 직급 여성 공무원 비율이 낮은 이유는 승진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요부서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충남도 여성 공무원들은 타 시도에 비해 적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실제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실국 주무과 등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비율은 26.8%로 전국에서 16위 수준임(행정자치부, 2015,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표 2-19>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비율

주요부서	계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실국 주무과
전국	36.5%	37.1%	36.5%	30.0%	25.3%	36.5%
충남	26.8%	19.6%	21.6%	27.7%	14.0%	28.7%
순위	16위	17위	16위	11위	17위	16위

*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2015.12.31.기준)

- 경제 분야 여성 관리직 비율은 변동이 심한 지표의 특성을 지님. 관리직 비율 성비를 살펴보면 남성 15천명, 여성 1천명으로 여성비율은 6.3%에 그침(충청남도, 2014, 2014 충남 성인지 통계). 전국 평균 11.1%보다 4.8%p 낮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 수준임. 관리직 성비 하락은 충남도 성평등 수준이 전국에서 중하위권으로 떨어지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여성의 정책참여 유도 위한 젠더거버넌스 전략 미흡

- 충남 여성의 정책참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는 도·시군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 비율임. 충남도 및 시군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은 24.6% 수준으로 전국 평균 30%보다 5.4%p 낮으며 17개 시도 중 14위를 차지(여성가족부, 2016, 201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조사결과)
- 여성의 정책참여 비율 확대는 여성·시민사회 활성화 정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나 충남은 여성단체의 활동력이 미약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음. 일반여성단체인 도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조직은 299개이나 그 외 등록 여성단체는 16개에 불과해, 일반여성단체와 여성운동단체가 공존하며 견제·성장하는 타 지자체와 대별되는 특성을 보임(충청남도, 2016, 2016여성단체현황, 2016비영리민간단체현황, 여성가족정책관실·도민협력새마을과 내부자료). 다양한 이슈와 활동력을 가진 여성단체·조직의 발굴과 육성이 요구되는 상황

■ 성주류화 정책의 추진 현황

-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명문화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는 2013년 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됨. 2016년 충남의 지방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5.9%로 지방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성인지예산의 비중 8.3%에 비해 낮은 수준

<표 2-20> 충청남도 성인지예산 현황

회계년도	사업수(개)	예산액(백만원)	지방예산 대비율(%)
2014	133	294,699	6.1
2015	141	302,258	6.2
2016	182	332,510	5.9

* 출처: 충청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orga/content.do>)

-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컨설팅 과제수는 2014년 456과제에서 2015년 172과제로 오히려 감소함. 또한 세부적으로는 회계별, 기능별, 조직별, 실국별 성인지예산 편성의 편차도

존재함

- 충청남도 2016 성인지예산 편성방향에 따르면, 기능별로 사회복지분야사업 49개 193,542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사업 55개 45,219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사업 12개 24,424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사업 14개 20,613백만원, 보건분야사업 12개 19,506백만원, 교육분야사업 3개 10,430백만원, 일반공공행정분야사업 22개 8,407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사업 5개 8,022백만원, 환경보호분야 6개 1,457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개 890백만원임(충청남도, 2016 성인지예산서)
-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과제 수로만 본다면 2013년 1,259, 2014년 1,657, 2015년 2,126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대상과제는 자치법규 조례(2014년 67.1%)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례의 정책개선 사항은 주로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조항으로 국한되는 한계를 가짐. 대상과제 정책범주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 절대적으로 치중되어 있어 정책 전반에 걸친 성별영향분석을 목적으로 한 주류화 전략적 취지에도 맞지 않음. 또한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예산사업 등이 분석평가대상이 되지 않음에 따라 도민체감 정책을 펼치는데 한계를 가짐
- 충남의 성인지 통계 구축은 2008년 「통계로 보는 충남여성의 삶」(충남여성정책개발원) 이후 충남의 성별분리통계의 수집과 작성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2014년 「2014 충남성인지 통계」가 발간됨. 발간과정에서 행정자료의 성별구분이 되어있지 않았던 한계점 등이 드러남

■ 성주류화 정책 추진 법적 근거의 취약

- 「양성평등기본법(2015.7)」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충청남도양성평등기본조례(2016.2.22)」로 개정·시행하고 있으나 성주류화조치와 관련 정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조항이 마련 되어있지 않음

■ 취약한 성주류화 정책 추진 행정력

- 충남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기획 및 운영은 행정부지사 직속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되어있으나 여성정책팀 주무관 1인이 여성, 가족, 청소년, 다문화 등의 사업부서 등을 총괄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위주로 수행하고 있음
- 성주류화 정책(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결산, 성인지통계, 공무원 교육 등) 실행부서의 다원화(여성가족정책실, 기획조정실 등)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운영이 어려움. 또한 담당공무원의 업무순환으로 추진의 연계성 및 전문성이 낮음
- 현재의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위상과 행정력은 도정 전체 실·국의 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젠더 관련성 점검과 성평등적 전환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역부족인 상황임

2) 미래전망

■ 일부 특정 영역에 한정된 여성 대표성 수적 증가 예견

- 정부 주도의 적극적 조치들이 그 시행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영역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여성의 수는 일정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견됨

- 경제 부문에서 간접차별 금지('99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도입('06년)
- 정부위원회('95년), 공직(4급 이상, '07년), 교직('05년), 군·경찰('12년), 공공기관('14년) 등 공공분야별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목표제 수립·이행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역구 후보자 30% 여성 할당 노력('04년), 비례대표 후보자 50% 여성 할당 의무화('05년)

■ 비공식적인 성차별 규범과 여성지위에 대한 '착시'현상으로 제도 추진 정체 우려

- 공식적인 제도의 형태로 추진되는 적극적인 조치가 확산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노력'을 요구하는 비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성차별적 규범으로 인해 다른 분야에 비해 성별 격차가 크고 개선 이행이 더딘 특성을 지님
- 특히 최근 소수 여성들의 성공이 사회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여성 전반의 지위에 대한 '착시' 현상이 부각되고 있어 적극적 조치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켜 그 시행을 정체시키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

■ 숫자적인 대표성을 넘어 실질적인 여성 대표성 문제 점검 필요성 대두

- 여성 대표성 지표는 성평등 수준을 수치화하여 성과를 측정하기 용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성평등을 특수하고 부분적인 지표로 제한할 위험성이 있음. 적극적 조치를 통하여 의사결정직에 진입한 여성들이 실제 정치, 경제, 행정 분야의 남성중심성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지역의 성평등 이슈를 발굴하여 의제화하고 있는지 등 실질적으로 여성을 대표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견됨

■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정책 도구들의 제도적 정착과 추진력 강화

- 성주류화조치를 위한 정책도구의 실행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지방재정법 등)를 토대로 제도적 정착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추진이 강화될 것임
-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성평등 달성이 독자적인 목표로 추진되는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총남의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모색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3) 과제

■ 의사결정 영역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수립·이행 필요

-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는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충청남도는 분야별 여성 과소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적극적 조치)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의무 명시

■ 『2015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충청남도는 관리직 비율 하락 원인분석, 의사결정 분야 수준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시행으로 성평등 수준 개선 필요성 제안

- 모든 공직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및 주요 부서여성 공무원 비율 목표치 설정, 관리 등), 기업과 공공부분 여성의 권한과 의사결정 정도를 알 수 있도록 성별 통계 자체 생산, 여성 관리직 비율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의 연계 등 적극적인 조치 마련이 필요
- 여성 대표성 확보는 남성과 평등하게 의사결정직에 참여할 권리를 확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되었음을 인식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중심 의제로 가져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음. 여성 과소 대표성이 조직 내 비공식적인 성차별적 규범이 누적된 통계적 결과라는 점을 여성리더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과 더불어, 여성 리더들이 성 차별적인 정책과 제도, 가치에 도전하면서 성평등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요구됨

■ 여성·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젠더거버넌스 구축

- 여성들이 실제 지역의 삶터에서 가지는 문제의식을 공론화하고 정책 의제로 만드는 젠더 거버넌스는 여성·시민사회 영역을 활성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 작업과 여성·시민사회와 행정이 협력하는 상시적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는 전략이자 과정임
- 충남은 여성단체의 활동력이 미약하여 다양한 의제와 활동력을 가진 여성단체 발굴과 육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최근 농업, 먹거리,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개입하는 여성풀뿌리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포착하여 기존에 행정이 파악하고 있는 여성단체 범위를 확장하고 여성·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참여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위상 부여

- 충남 도정의 성평등 목표 수립, 성주류화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체계 구축과 이에 부합하는 위상부여가 필요함. 우선 여성가족정책관실 내에 성평등 정책 추진팀 신설과 인력 보강, 이후 성주류화 정책을 총괄 추진할 수 있는 부서 신설, 추후 성평등 뿐만 아니라 인권증진과 형평성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행정조직 마련의 단계적 재편이 필요
- 도정의 정책전반에 대한 젠더 전문성 담보와 업무의 연속성 위한 개방형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

■ 성주류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의 구체화

- 「양성평등기본조례」를 「성평등기본조례」로의 조례명 개정을 비롯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성인지예·결산, 성인지통계 구축, 공무원 교육 시행관련 내용의 구체적 명시 등의 보완 필요

■ 성주류화정책의 추진 점검 체계 구축

- 모든 정책사업의 성평등적 기여방식으로의 예산편성을 점검하는 성인지예산 관리와 2013년 회계연도부터 '16년까지 누적 관리된 성인지예·결산서의 성과목표 반영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

■ 충남 성인지 통계 구축

- 모든 정책 산출을 위한 기초정보와 근거로서 성인지 통계 생산 및 정책수행과정에서의 모든 행정통계의 성별분리통계 생산과 구축

■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 실행역량 강화 방안 마련

- 공무원의 직위 및 직책 별로 특성화된 성별영향분석평가 공무원 교육 실행을 위한 매뉴얼과 실행 방식에 대한 계획수립 필요
- 현재 공무원 법정 의무교육 과정 내에 성평등 교육을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하여 공무원의 성인지력제고와 정책실행력 강화 필요

6. 가족

1) 현황

■ 결혼을 기반으로 한 ‘가족 형성-확대-축소’의 가족구조 틀 해체

- 충남의 혼인건수는 2015년 12,331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나타내며, 전국 혼인건수 302,828건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음. 혼인연령도 점차 만혼화의 경향을 나타내어 2015년에는 30세로 늦춰짐(통계청, 2015, 인구동향조사)
- 충남의 혼인건수 발생 대비 이혼건수를 살펴보면, 43.8%(2015년)로 전국비율(36%)보다 높게 나타남. 부부의 이혼연령은 남성의 경우 1990년대에는 30대에 50%가 집중되었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30대 이혼이 30%로 낮아지고, 40대와 50대에 점차 집중되고 있음. 이는 여성의 경우에도 유사함. 또한 60대 이상 황혼이혼의 비율이 1990년대 2%미만에서 2015년 여성 5%, 남성 10%로 증가하였음(통계청, 2015, 인구동향조사)

<표 2-21> 충남의 이혼율 현황

■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 비율 변동 추이
- 전국 11.4(1990) → 36.0(2000) → 40.7(2005) → 35.8(2010) → 36.0(2015)
- 충남 6.7(1990) → 35.4(2000) → 44.0(2005) → 42.5(2010) → 43.8(2015)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90~2015)

■ 결혼관의 유연화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

-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충남의 경우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1998년 전체 79.0%에서 2014년 58.6%로 급격히 감소함. 여성(55.9%)이 남성(61.3%)에 비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더 큼(충청남도, 2014, 2014 충남사회지표)
- 충남의 동거 및 이혼에 대한 허용적 태도도 증가하였음.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라는 동거 허용에 대해서 2014년 48.0%가 찬성해 전국 평균(46.6%)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이혼에 대해 반대하는 의식이 1998년 68.7%에서 2014년 49.7%로 완화되었고, 부정적 의식도 크게 완화됨(충청남도, 2014, 2014 충남사회지표)
- 충남은 국제결혼을 통한 가족형성에 대해서도 수용성이 높아짐. 외국인과의 결혼해도 괜찮다는 의식이 2014년 63.7%로 전국 평균(63.2%)보다 높음. 충남의 다문화가족 증가추세와 함께 다문화가족 및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음(충청남도, 2014, 2014 충남사회지표)

■ 가족 내 성평등한 역할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불일치

- 가족 내 대표적인 성역할이 나타나는 가사분담에 대한 사회조사 결과, 충남 남성의 45.6%가 가사분담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으나, 실제 가사분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고 있는지의 실태에서는 부인 20.1%, 남편 19.1%로 격차가 발생(통계청, 2014, 사회조사)
- 사회환경의 변화에도 아직까지는 가족 내에서도 가부장적 문화가 잔존하고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은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남성 중심적인 인식과 성역할을 사회화함. 성평등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가족에서부터 성평등한 문화조성이 이루어져야 함

<표 2-22> 충남의 가족 내 성평등 역할에 대한 인식

■ 가사분담의식(공평분담)
여성 37.2%(2010) → 40.8%(2012) → 56.7%(2014)
남성 28.2%(2010) → 30.3%(2012) → 45.6%(2014)
■ 가사분담실태(공평분담)
부인 8.7%(2010) → 8.9%(2012) → 20.1%(2014),
남편 10.8%(2010) → 10.2%(2012) → 19.1%(2014)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0~2014)

2) 미래전망

■ 다원화된 가족, 비전형적 가구 및 가족구조의 유동성 증가

- 미래사회 실제 가족의 모습은 동거, 독신, 정기적 격리부부, 선택적 무자녀 가족, 역할전 이 부부, 동성부부, 제도적 혼인관계에서 벗어나 있거나 제도적 혼인관계를 넘나들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 부모가족, 미혼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공동체가족, 그 밖에도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등장 등 매우 다양해질 것임

■ 가족중심성에서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는 개인화 확산

- 미래사회의 구성원들은 가족 중심성 보다는 개인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개인화 경향이 확산되고 성별, 계층별, 세대별로 ‘가족’이라는 개념을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인식할 것으로 예상됨
-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이익보다는 개인의 자아성취와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보편화되면서 일정한 연령이 되면 반드시 결혼하여야 한다는 보편적 결혼관이 약화되고, 미혼기간이 길어지고 결혼보다 독신이나 동거를 선택하는 등의 유연적인 결혼관이 확산될 것임

■ 평균수명 증가와 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족보호와 부양의 사회적 부담 증가

- 가족의 보호와 돌봄의 요구를 오랜 기간 묵묵히 수행하던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보호기능과 부양 기능은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임. 이는 가족 내 큰 갈등과 긴장을 제공하며,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음
- 보건수준의 향상, 영양 및 환경개선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향상은 평균수명의 지속적 상승을 야기하였고 이는 가족주기 및 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고령가족의 증가, 노인 1인 가구의 급증 및 돌봄 문제 등을 낳음
-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충남의 노인가구 및 노인 1인가구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향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노인돌봄을 가족 내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가족부양관의 변화와 함께 이와 같은 노인가구 및 노인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돌봄의 제공주체와 역할정립 등에 관한 이슈 제기가 더욱 활발해질 것임

<표 2-23> 충남의 노인가구 및 노인 1인가구 증가 추계

■ 노인가구(65세이상) 비율	
- 전국	11.9(2000) → 17.8(2010) → 24.0(2020) → 35.4(2030) → 40.5(2035)
- 충남	19.4(2000) → 23.7(2010) → 28.1(2020) → 38.6(2030) → 43.8(2035)
■ 노인 1인가구 비율	
- 전국	25.4(2010) → 29.7(2020) → 39.8(2030) → 45.0(2035)
- 충남	31.4(2010) → 34.0(2020) → 43.1(2030) → 48.1(2035)

*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0~2035)

■ 친밀함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형성과 돌봄의 공유 가능성 확산

- 지금까지는 주로 가족 내에서 정서적 지지나 실질적 돌봄 지원 등이 수행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가족을 통해 공유하던 친밀감, 만족감, 안정감, 소속감 등을 다른 형태의 다양한 집단을 통해 추구할 가능성이 높음
- 삶을 추구하는 방식 및 태도, 가치관 및 세계관의 지향점을 함께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공동체와 이웃을 형성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많아질 것임. 이에 따라 친밀함을 기반으로 하는 느슨한 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지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전망이 요구됨

3) 과제

■ 가족 내 성평등 의식의 실천 및 확산 노력 필요

- 남녀의 동등한 가족 내 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확산되었으나, 여전히 가사양육 부담은 여성에게 편중되며, 가족 내 의사결정시 가부장 중심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인식이 행동을 수반하지 않고 있는 현상의 개선이 필요
- 가족 내에서 성평등 의식이 실천을 수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성들의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역할 정립에 대한 인식개선을 포함하여 가족 내 평등한 성역할 및 가족 내 동등한 의사결정문화와 과정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족구성원의 평등한 소통 역량강화와 성역할 실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 가족 내 돌봄 책임, 생계부양형태의 변화를 감안한, 가족부담의 최소화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뒷받침 필요

- 가족형태의 다양화,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인해 가족의 자녀 및 노인 돌봄의 기능이 약화됨. 기존에는 가족 내에서, 여성에게 집중되었던 돌봄 역할을 가족 구성원 뿐 아니라 사회가 함께 분담해야 함. 일·생활균형 강화를 통한 일상적 돌봄 보장,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공동체 활성화 등 돌봄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확대와 정책 개입 필요

- 개인화의 진전으로 인해 개인들이 전 생애에 걸쳐 혼인, 출산, 돌봄의 시기나 조건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되고, 정형화된 가족모델은 해체되며, 가족형태의 분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부부관계 내에서 비교적 연속적으로 수행되던 안정적인 자녀 돌봄이 수행 가능한 사회 환경의 재편을 요구
- 가족의 개념이 집단중심이 아닌 개인들 간의 유연성을 가진 다양한 관계로 변화되어가며, 이에 다양한 가족들의 수요에 기반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

7. 문화

1) 현황

■ 문화 및 여가활동 경험에서의 차이와 격차

-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 등 주된 여가활동 경험 차이는 성별 전체로 보면 크게 차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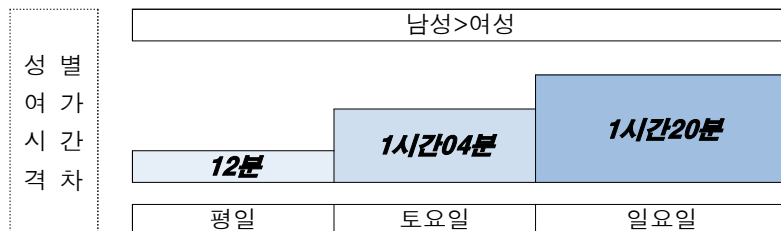
나지 않지만 남녀 모두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지난 1년 간 주된 여가활동 경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충청남도, 2015, 2015 충남사회지표)

- 특히 연령과 직업에서, 60대 이상 고연령층과 농림어업직은 절대다수가 주된 여가활동 경험을 하지 않은 문화소의 집단이고, 이 집단 안에서 성별 격차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이러한 차이는 일차적으로 도농 지역 간 문화기반 시설과 접근성에서의 격차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농어업인, 주부의 여가활동 경험률이 낮은 것은 여가시간의 부족 때문이기도 함
- 성별 간 여가시간의 차이는 주말에 특히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충남의 남성과 여성의 평균 여가시간의 차이는 평일의 경우 12분에 불과하지만, 토요일은 1시간 09분, 일요일은 1시간 20분에 이르고 있음(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보고서)

<표 2-24> 충남도민의 주된 여가 활동 경험 여부

여성	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46.7%가 1년동안 문화향유 및 여가 활동경험 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 47.0%가 1년동안 문화향유 및 여가 활동경험 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로는 50대 여성의 54.1%, 60대이상 여성의 86.4%가 주된 여가활동 경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로는 50대 남성의 56.6%, 60대이상 남성의 81.8%가 주된 여가활동 경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직의 85.2%, 주부의 61.5%가 주된 여가활동 경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직의 81.8%가 주된 여가 활동경험 없음

* 자료: 충청남도(2015). 『2015 충남 사회지표』 원자료 분석.



* 자료: 통계청(2014). 생활시간조사보고서에서 재구성

<그림 2-2> 충남도민의 성별 여가시간 격차

■ 문화예술 창작, 지역 내 문화프로그램 기획 운영에서의 참여 현황

- 충남 지역에는 국악, 문학, 미술, 무용, 연극, 음악, 사진 등 약 440여개의 문화예술 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고(충청남도, 2014, 충남 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 한국예총충남연합회 소속 회원이 4,545명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충청남도, 2015, 2015 도정백서), 단체 회원의 규모나 성별 현황에 대한 자료는 전무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움

- 문화창작 및 생산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전통문화, 공예, 관광, 공연, 문화기획, 출판, 디자인 등 문화예술과 관련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로 문화예술 창작·생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6년 현재 충남의 인증사회적기업 65개, 예비사회적기업 81개 중 문화 예술 관련 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 10개, 예비사회적기업 11개이며, 이 중에서 여성이 대표자로 기업을 이끌고 있는 수는 총 7개임(충청남도 경제정책과 내부자료)
- 독서, 문화를 매개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촉진하는 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을 들 수 있으며, 충남 지역에는 2016년 현재 57개의 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과 270개의 작은도서관(공립 및 사립)이 운영되고 있음(충청남도 2016년도 문화정책과 내부자료)
- 특히 작은도서관은 개인, 단체가 설립한 소규모 도서관으로 지역주민과 밀착된 소수의 운영자가 운영하며, 정확한 성별 현황을 파악할 수 없으나 운영자의 상당수가 여성임

■ 문화를 매개로 한 마을재생 및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

- 최근 문화산업은 지역특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성'을 문화자원화 하고, 지역재생 사업의 틀 안에서 문화창작 공간을 형성하고, 문화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증가
- 도시나 농촌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창조하거나 마을의 문화유산을 브랜드화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연결하여 지역 활성화를 시도하는 사례도 증가
- 이러한 사업들의 성공여부는 주민이 문화의 창조자로서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필요로 하며, 주민참여의 과정에서 성별간의 평등성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필요
- 현재, 지역문화특화사업, 문화콘텐츠 발굴 사업에서 여성의 참여와 여성문화 자원의 발굴이 어느 정도인지 수치로 확인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정부의 행복 문화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농어촌 문화콘텐츠 진흥사업'(2012~2014) 결과 3개 마을이 선정되어 마을별 대표 콘텐츠를 발굴·육성하였는데, 여기에 마을 내 문화커뮤니티로 청양 광금리 마을의 할머니스마트패드연주단, 태안 중장리 마을의 갯벌아줌마 염색공예단과 같은 여성들이 주도하는 커뮤니티 및 문화 콘텐츠 발굴의 예를 들 수 있음(충청남도, 2015, 2015 도정백서)

■ 충남 남성의 성평등 의식 수준 현황

- 충남 남성의 성평등 의식조사에 따르면, 충남 남성의 성평등 의식 점수는 4점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높음)로 구분하였을 때, 가정생활 영역은 2.59점, 학교생활 영역은 2.77점, 직장생활 영역은 2.58점, 사회생활 영역은 2.54점으로 사회생활 영역의 성평등 의식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김종철, 2015, 충남 남성의 성평등 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 충남도민의 성평등 의식 교육 확대에 대한 욕구

- 도민의견조사에서 충남도민의 양성평등 의식 교육 확대에 필요성 인식은 10점 척도에서 남 성 6.99점, 여성 7.41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성평등 의식 교육의 확대가 필요성을 인지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의식 교육의 필요성 인식 정도가 높음.

2) 미래전망

■ 여성의 시간빈곤층 증가에 따른 여가와 문화 권리에서의 성별격차 심화

-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으로 '시간빈곤'(time poor)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문제가 새로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 특히 여성들에게 편중되어 있는 가사노동,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의 역할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시간빈곤층의 다수를 여성이 점하게 될 것이고, 이는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가난한 삶'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가와 문화적 권리 수준에서의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여성의 삶에 기반한 대안문화 및 다양한 생활문화의 형성과 확산

- 환경, 생태, 교육, 인권, 소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대안적인 생활문화운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대안가치의 확산과 사회변화를 기획하는 대안생활문화 운동의 주요한 주체가 될 것으로 보임
- 여성들의 삶에 기반한 대안문화의 형성과 확산은, 여성을 지역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시키고, 여성의 관점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보임

■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문화·여가 생산, 소비의 변화, 정보 불평등 심화

- 유비쿼터스, 사물인터넷의 발전, 새로운 디지털 융합매체의 개발과 확산은 문화예술 및 문화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 방식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디지털 기술혁신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기호에 기반 한 문화와 여가의 향유 기회를 증폭시킬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에서는 디지털 매체의 소유 및 접근, 활용과 관련하여 '문화적 소외' 계층을 양산하고, 정보격차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음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성평등 환경 조성

- 인터넷 이용률이 상승하고 ‘손 안의 컴퓨터’로 불리는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스마트 폰을 통한 정보획득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비하, 폭력적 내용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사전점검과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높아짐
- 온라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성평등 의식 제고,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웹 사이트, SNS 운영 등 성평등한 온라인 문화조성 가능성 높아짐

3) 과제

■ 문화예술과 여가 향유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 필요

- 문화적 권리로서 문화예술과 여가 향유에서의 성불평등의 개선은 충남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임
- 전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성별 격차는 크지 않으나, 농어업인과 고령자 집단을 교차하였을 때, 여성농업인·여성고령자의 문화소외는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여성의 주체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 필요

- 문화를 매개로 한 지역재생사업,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의 기획에서 여성들의 관점과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점검과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성평등 관점에서의 주민 커뮤니티 활동 지원이 필요
- 향후 충남 여성들의 생활에 기반 한 관심사를 문화적으로 접목하여 지역문화 및 거주공간을 재창조하는 사례를 많이 창출해낼 때, 지역 활성화의 성과뿐만 아니라 풀뿌리 여성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여성 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의 발굴·개발 필요

- 충남의 미래 문화산업의 동력 창출과 발전을 위해서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시각에서의 문화콘텐츠 발굴이 필요함. 여성의 관점에서 지역의 문화유산, 여성의 생활문화와 관련한 문화콘텐츠 발굴과 개발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정보화 활용과 역량 수준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 필요

- 정보 접근성의 불평등과 디지털 정보기기의 활용 역량에서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특히 여성 고령자·여성농어업인·여성장애인·이주여성 등 정

보취약집단의 불평등성을 개선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함

- 정보 접근성에서의 불평등, 정보격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보 소외집단의 주민 참여 기회뿐만 아니라 이들의 주민참여 역량을 낮추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충남의 도정 홍보와 도정참여 채널의 운영에 있어 정보접근성 등의 정보 불평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성평등 의식의 향상과 생활 속의 실천 문화 확산 필요

- 다양한 문화 활동의 평등한 참여와 향유는 일상에서의 성평등한 문화의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도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성평등 실천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교육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8. 환경과 농업

1) 현황

(1) 농업

■ 충남 여성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 현상 증대

- 20세 이상 충남 농가인구 중 60세 이상이 58.6%를 차지해 농가인구의 고령화현상이 나타남. 성비를 보면 여성 59.7%, 남성 57.4 %로 여성의 고령화 경향성이 나타남. 농가 인구 중 40대 이하 연령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높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통계청, 2015, 농림어업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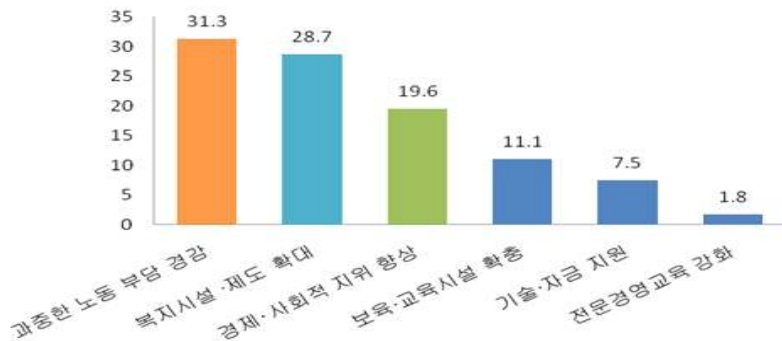
<표 2-25> 20세 이상 충남 농가 인구 성별 현황

구분	계	남자	여자	남성대비 여성비율
20-29세	15,290(5.4)	8,257(6.0)	7,033(4.9)	42.3%
30-39세	14,877(5.2)	8,442(6.1)	6,435(4.5)	43.3%
40-49세	26,185(9.3)	13,479(9.7)	12,706(8.8)	48.5%
50-59세	60,467(21.5)	28,829(20.8)	31,638(22.1)	52.3%
60-69세	73,122(26.0)	36,050(26.1)	37,072(25.9)	50.7%
70-79세	65,022(23.1)	31,627(22.9)	33,395(23.3)	51.4%
80세 이상	26,629(9.5)	11,603(8.4)	15,026(10.5)	56.4%
계	281,592(100.0)	138,287(100.0)	143,305(100.0)	

* 자료: 통계청, 2015, 농림어업총조사 재구성

■ 여성농업인의 농사일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이중부담 증가

- 여성농업인 가운데 농사일 중 50% 이상을 담당하는 비중은 66.2%로 나타남. 연령별로 농사일 비중을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농업노동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30대 이하 32%, 40대 58.0%, 50대 65.9%, 60대 70.1%, 70대 이상 75.8%).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 담당비율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지고 있음(30대 이하 75.7%, 40대 78.1% , 50대 81.4%, 60대 88.1%, 70대 이상 82.9%)(농림축산식품부, 2013, 여성농업인실태조사)
- 여성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의 심화되고 있음
- 여성농업인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과중한 노동 부담 경감’이 가장 높게 나타남(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4.4.3)



<그림 2-3> 여성농업인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 여성농업인의 낮은 농지 소유율과 공동 경영주/경영주 인식

-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농업인이 본인 명의의 농지를 소유하는 비율은 27.4%로 나타남. 연령별 농지소유 규모를 보면, 30대 이하 0.11ha , 40대 0.16 ha, 50대 0.2 ha, 60대 0.21 ha, 70대 이상 0.19 ha 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농지소유 비율과 평균 소유면적이 넓음. 그러나 소유 농지 규모는 남성과 비교해 소규모임
-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은 평균 42.0%로 나타났음.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17.3%, 40대 37.6% , 50대 38.7% , 60대 45.4% , 70대 이상 49.8% 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공동경영주/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 농가주 중심의 농업 정책 및 농촌사회 남성 중심의 뿌리 깊은 의사결정 관행

- 대부분의 농업정책이 가구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구 중에서도 농가주(농지 등에 대한 소유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농업 정책 대다수의 대상자 혹은 수혜자는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음
- 농촌사회 내의 의사결정 주요행위자는 남성임. 농촌사회에서 자원 배분의 권력을 가진 마을 이장 뿐 아니라 마을의 개발사업 등을 주도하는 마을개발위원회의 구성원도 대부분 남성임. 여성의 대표자격인 부녀회장은 음식 만들기 및 서비스 제공 등 부수적이거나 주변적인 역할에 국한되어 있음

(2) 환경

■ 산업시설 입지 및 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증가

- 충남의 제조업 및 에너지 산업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충남 지역 제조업 부문의 최종 에너지소비량 중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것(82.5%, 전국은 71.1%, 2011년 기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은 충남의 미세먼지 증가 등 대기오염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충남의 시군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2005년 2,704개소에서 2014년 2,747개소로 약 1.6% 증가. 이전 10년간의 증가율이 비하면 상당히 둔화되는 추세이나 배출시설이 천안·아산, 서산·당진 등에 집중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음. 2014년 현재 천안시에 593개소(2005년 560개소), 아산시에 506개소(2005년 353개소)가 입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40.0%(2005년 33.8%)가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산, 당진지역도 배출업소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점차로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음(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내분비계 장애물질, 발암우려물질, 화학물질을 포함한 충남의 유해화학물질 배출 및 이동량은 2014년 약 81,956톤으로 전국 합계 993,260톤의 8.3%를 차지함. 충남에 소재한 화학물질배출 사업장은 174개소로 전국 사업장(총 2,741개소, 2005)의 6.3%이나 화학물질발생량은 8.3%로 배출 영향이 사업장 수 대비 높음.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농도의 경우 정유 3사가 위치하고 있는 서산 대산공단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 배출·이동량은 약 119톤으로 전체 배출·이동량 약 1,058톤의 11.3%, 발암우려물질은 5,212톤으로 전체 배출·이동량(약 57,480톤)의 9.1%가 충남에서 발생(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농·어촌 지역 도민들의 물 복지 취약

- 수자원과 관련하여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상·하수도 보급으로 2014년 말 충남의 상수도 보급률은 92.2%로 전국 일반상수도보급률 97%, 지방 및 광

역상수도 보급률은 96%, 급수보급률은 99%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 충남지역에서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지역은 태안(76.3%), 공주(87.1%), 당진(89.0%), 예산(89.8%) 등으로 평균 미만을 보임. 충남의 하수처리율(하수도보급률)은 72.7%로 전국 평균(72%)과 유사하나 부여·서천은 하수처리율이 49% 수준, 청양과 태안은 50% 수준으로(국가통계포털) 하천 및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높음. 농·어촌지역의 상·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물 복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 환경오염 및 위해요소에 따른 환경성 질환자 증가

- 전국 폐석면 광산 38개소 중 65.7%인 25개소가 충남지역에 소재해 환경보건의 취약하며, 보령,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지역 폐석면 광산 지역주민 8,823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진행('09~11)한 결과 581명(6.6%)이 석면질환 유소견자로 판명됨(충청남도, 2015, 충남환경보전종합계획)
- 126개소 충남 소재 폐금속 광산 지역 중 중금속 오염도가 높은 37개소에 대하여 3년간('09~11)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583명 중 13명(2.2%)이 납·카드뮴·비소가 WHO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토양오염도 조사 361개 지점 중 96개 지점(26.6%)에서 우려기준 초과, 23개 지점(6.4%)이 대책 기준을 초과함(납 카드뮴 아연 수은 비소)(충청남도, 2015, 충남환경보전종합계획)
- 전 국민의 환경성 질환자(알레르기비염·아토피피부염·천식 환자) 중 중부권 환경성질환 진료환자 수는 총 510만여 명 중 93만여 명으로 지역인구의 약 18% 수준을 차지함(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2003년 대비 2009년의 인구증가율은 6.0%인데 비해 환경성질환자 증가율은 52.8%로 급속하게 증가해 환경보건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집행 필요성을 보여줌

■ 환경관련 계획이나 행정에서 성별 접근 부재

-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환경정책 및 보전계획이 수립·이행되고 있음. 보편적 인간과 생태계 전반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통합적 전략이 핵심이며, 환경보건 관련해 취약계층으로서 아동, 노인 등 연령별 접근이나 멸종위기나 보호 생물종 등에 대한 예외적 보호대책이 존재함. 환경정책에서 성별접근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음에 따라 환경통계나 부문정책에서 성별 접근은 일반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음

2) 미래전망

(1) 농업

■ 농촌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및 여성 농업인 비중의 확대

- 농업 인구의 고령화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에 비해 높은 평균 수명으로 인하여 고령 여성 농업인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농업 정책은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한 농업정책이 주류를 이룸. 여성 고령자 농업인을 위한 특화된 정책이 미흡한 현실임

■ 여성 농업인의 전문 농업 경영인으로서의 활용 필요성 증대

- 점차 고령화되는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조건을 형성하는 것 뿐 아니라 실제 농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농업경영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6차 산업의 수요 증가 및 여성 참여 증대

- 충남 6차 산업의 여성참여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에 의하면 6차 산업 대표자 85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여성의 비율이 39명으로 45.88%를 차지하여 여성의 6차 산업 참여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5, 충남 6차산업의 여성참여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 6차 산업이 생산(1차), 가공(2차), 유통/판매/체험(3차)의 융복합적 사업으로 기존의 농업에 종사하는 남성 보다는 여성들의 참여 가능성이 더 높고, 농산물 가공 시 농산물로 음식을 만드는 핵심적인 노하우(예를 들면 고추장 담기, 김치 담기 등)를 여성들이 더 많이 갖고 있어 여성이 6차 산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 기반 조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2) 환경

■ 환경오염의 복합화와 확산에 따른 도민환경의식 개선

- 천안·아산, 서산·당진 등 충남 서북부지역의 제조업 및 에너지산업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논산, 금산 등 청정지역으로 확대돼 충남 지역의 환경오염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폐광이나 석면광산의 오염, (구)장항제련소 등 특정오염지역의 환경개선이 지체되고 석

유해화학단지 등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도민의 환경보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며 아동과 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환경성 질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객관적 환경여건의 악화로 인한 도민들의 환경인식은 향상돼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친수성, 자연환경과 생태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진될 것임. 또한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하천·호소·연안 등이 친수공간으로 활용가능성이 주목되면서 수질문제 뿐만 아니라 물 생태계의 건전성과 경관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임

■ 기후변화 취약성에 따른 도민의 삶의 여건 악화와 안전 요구 확대

- 충남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많고 지속적으로 증가해 기후변화 영향을 촉진하는 내부요소를 안고 있음. 기후변화는 충남의 농업과 수산업 등 1차 산업에 가시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서 충남도민들은 농업 분야의 가장 큰 문제로 폭염·한파·가뭄에 의한 농작물 피해(37.4%), 풍·수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25.2%)를 인식하고 있으며, 병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14.0%), 기온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성 약화(14.3%)를 꼽고 있는데(지역기후변화보고서, 2011) 기후변화진전에 따라 농업 영향이 더욱 심화될 것임
-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폭염, 폭설, 집중호우 등 기후재해의 발생이나 강·빈도 증가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정책 요구로 이어질 것임

3) 과제

(1) 농업

■ 여성 고령 농업인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

- 마을 급식센터를 설치하여 여성들의 이중노동 부담 경감

■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군 단위로 확충될 필요가 있음

- 충남에는 도 차원에서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8개 시군에 한해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 여성농어업인 조례 제정시 지역 마다 여성 농업인들이 처한 특성이나 정책적 요구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여성농어업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 특화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

<표 2-26> 충청남도 및 시군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지역	조례명	제정	소관부서
충청남도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09.4.15	농정국 농업정책과
천안시	천안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08.6.10	주민지원국 농정과
공주시	공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11.7.4	기획담당관 농업과
아산시	아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3.9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서산시	서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11.12.12	농정과
서천군	서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11.12.5	친환경농림과 농업정책담당
청양군	청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09.10.9	농업지원과
홍성군	홍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09.4.24	농수산과 농정담당
예산군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10.12.30	농정유통과

■ 소농·고령농·여성농을 고려한 농업정책의 개발과 비중의 확대

- 여성 고령농의 경우 주로 밭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밭작물 재배에 필요한 소형 농기계의 보급이나 밭일로 인한 허리 운동의 부족 등에 대한 건강 지원 서비스 등 개발 필요
- 로컬푸드에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의 실제적인 참여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존의 로컬 푸드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소농과 고령농을 배려한 새로운 지역사회 로컬 푸드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남성 중심적 농업 행정 및 농촌 지역사회 관행의 변화 추진

- 농업 행정 및 정책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지도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 구축
- 농업정책 대상자나 수혜자를 농가주 1인으로 하는 기존의 방법을 대체할 수 있도록 부부 공동 참여(공동경영주 제도) 혹은 신청을 의무화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대안 마련
- 마을의 여성이장 육성과 함께 마을 개발위원회, 발전 위원회, 총회 등 마을의 주요 의사 결정 기구에 여성 참여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는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음

■ FTA, 기후변화, 생활의 웰빙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 전문 능력의 개발

- 농업기술센터 소속의 생활개선위원회, 혹은 마을 단위의 부녀회의 기능과 역할을 새로운 농촌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으로 육성
-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품목별 소규모 시범 재배, 우리나라 토종 종자 보존 활동 등에 여성 농업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농촌 체험마을의 여성 사무장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사무장의 권한과 역할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여성 농업인의 전문 농업 경영인으로서의 역량 강화

- 각종 작목반 운영 등 실질적인 농업 경영 관련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여성 참여 비율을 40%로 의무화하거나 여성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여성주도 6차 산업 추진 기반 구축

- 6차 산업에서의 가족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및 6차 산업 여성 연대 등을 결성하여 6차 산업 여성들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환경

■ 환경정책의 성별 관점 도입 및 성별 자료 구축

- 대기와 토양, 수자원 등 지역적 환경오염이 정주민의 건강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아동·노인 등 연령 특성에 따른 환경건강영향이 확인되고 있으며 성별 영향도 미미하지만 나타나고 있음. 이에 환경보건을 비롯한 환경문제의 성별 특성을 확인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성별 분리통계 작성 및 사후관리에 성별 관점 도입 필요

■ 재해·재난 안전정책 수립에 성별 관점 도입

- 가뭄과 폭우, 폭설 등의 기후재해와 지진 등 자연재난,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 사회재난이 그 자체로서나 대응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성별 영향과 정책욕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련 정책수립 및 이행과정에 성별 관점 도입 필요

9. 특별 분야(이주여성·청소년·장애여성)

1) 현황

(1) 이주여성

■ 충남 이주민 수 전국 5위, 인구 대비 전국 2위

- 2015.11 기준 충남 외국인 주민 수는 88,189명으로 비율로 보면 4.2%임. 인구수로 보면 전국 5위, 비율로 보면 전국 2위(전국 평균 3.4%)에 해당

<표 2-27> 외국인주민 현황(2015.11. 기준)

구분	총인구 ('15.11.1.)	인구 대비 (%)	외국인 주민수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자녀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 적동포	기타	소계	혼인 귀화	기타 사유	소계	외국인 부모	외-한국 인부모	한국인 부모
합계	51,069,375	3.4%	1,711,013	1,363,712	573,378	144,912	82,181	216,213	347,028	149,751	93,249	56,502	197,550	6,001	183,181	8,368
서울	9,904,312	4.1%	408,083	337,116	102,081	27,573	31,129	80,707	95,626	40,520	20,439	20,081	30,447	1,963	27,068	1,416
부산	3,448,737	1.7%	58,080	44,070	16,424	6,527	6,163	3,688	11,268	4,853	3,443	1,410	9,157	91	8,640	426
대구	2,466,052	1.6%	38,899	29,282	11,701	4,549	2,852	2,330	7,850	3,194	2,352	842	6,423	68	6,084	271
인천	2,890,451	3.1%	89,515	67,850	27,507	8,732	2,423	9,888	19,300	9,820	5,901	3,919	11,845	540	10,822	483
광주	1,502,881	1.9%	29,131	21,592	7,445	3,154	3,406	1,690	5,897	2,449	1,911	538	5,090	54	4,861	175
대전	1,538,394	1.7%	25,886	19,080	3,313	3,365	5,149	1,758	5,495	2,245	1,605	640	4,561	28	4,338	195
울산	1,166,615	3.2%	36,953	29,860	13,806	3,042	1,004	4,936	7,072	2,717	1,986	731	4,376	84	4,120	172
세종	204,088	2.7%	5,570	4,471	1,923	524	522	495	1,007	370	261	109	729	9	686	34
경기	12,479,061	4.4%	549,503	452,632	213,808	39,769	9,933	77,605	111,517	46,558	27,678	18,880	50,313	2,366	45,725	2,222
강원	1,518,040	1.8%	27,253	18,306	6,255	3,666	2,057	1,595	4,733	2,905	2,185	720	6,042	33	5,717	292
충북	1,589,347	3.3%	52,073	40,758	19,075	4,900	2,304	5,155	9,324	4,226	3,000	1,226	7,089	100	6,740	249
충남	2,107,802	4.2%	88,189	71,082	33,720	7,836	4,159	9,429	15,938	6,199	4,323	1,876	10,908	171	10,335	402
전북	1,834,114	2.4%	44,184	29,930	11,168	5,727	2,737	1,993	8,305	4,510	3,576	934	9,744	89	9,291	364
전남	1,799,044	2.8%	50,864	34,611	16,824	6,773	1,227	2,209	7,578	4,729	3,689	1,040	11,524	96	10,961	467
경북	2,680,294	2.8%	74,919	57,565	29,045	7,407	4,393	4,224	12,496	5,579	4,160	1,419	11,775	97	11,243	435
경남	3,334,524	3.4%	112,387	90,361	52,900	9,249	1,671	7,040	19,501	7,550	5,883	1,667	14,476	170	13,731	575
제주	605,619	3.2%	19,524	15,146	6,383	2,119	1,052	1,471	4,121	1,327	857	470	3,051	42	2,819	190

※ 자녀는 '결혼이민자'와 '국적취득자'의 자녀

* 자료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지방행정실 사회통합지원과 보도자료(2016. 11.)

■ 충남 결혼이주여성의 낮은 지역 사회 참여

- 대표적인 정주 이주민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충남 지역사회 참여는 낮은 수준으로, '지역 주민모임 참여'는 30% 정도 수준임(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6, 충남 결혼이주여성 생활 실태와 정책방향)

<표 2-28> 결혼이주여성 사회 참여 현황

문항	2015 전국 응답	2015 전북 응답	2016 충남 응답
모임·활동 참여 여부 (복수응답)	모국인친구모임 58.5% 학부모모임 42.6% 종교활동 22.2% 지역주민모임 13.9%	모국인친구모임 70.1% 학부모모임 54.2% 봉사·취미·문화활동 36.9% 지역주민모임 25.7%	모국인친구모임 77.5% 학부모모임 50% 봉사·취미·문화활동 50.3% 지역주민모임 31%
모임·활동 참여 어려움 유무	어려움 있음 70.6% 어려움 없음 29.4%	어려움 있음 78.4% 어려움 없음 21.6%	어려움 있음 78.2% 어려움 없음 21.8%
모임·활동 참여 어려운 점 (복수응답)	일을 해야 하므로 42.6% 한국어를 잘 못해서 31.8% 가족을 돌봐야 하므로 22.1% 참여하고 싶은 모임 없어서 14.8% 모임 같이할 사람 없어서 11.1% 한국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8.7% 배우자 및 가족의 반대로 3.7% 기타 1.8%	한국어를 잘 못해서 39.3% 일을 해야 하므로 22.7% 가족을 돌봐야 하므로 15.7% 모임 같이할 사람 없어서 7.9% 참여하고 싶은 모임 없어서 4.9% 한국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4.5% 배우자 및 가족의 반대로 3.8% 기타 6.2%	한국어를 잘 못해서 36.4% 일을 해야 하므로 10% 가족을 돌봐야 하므로 8.7% 모임 같이할 사람 없어서 5.7% 참여하고 싶은 모임 없어서 4.2% 한국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6.1% 배우자 및 가족의 반대로 3.9% 기타 3.1%

* 자료: 여성가족부, 2016,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전라북도, 2015, 『전북형 다문화가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우북남, 2016, 『충남 결혼이주여성 생활실태와 정책방향』,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충남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어려움

- 충남 국제결혼가정 가구소득 수준은 100만원 미만이 약 8.9%로 전국과 비슷하며, 전국과 유사하게 200~300만원 수준의 가구가 가장 많지만 300만원 이상 가구는 전국 보다 적은 편

<표 2-29> 결혼이주여성 가구소득 현황 비교

2015 전국	2015 전북	2016 충남
100만원 미만 8.8%	50만원 미만 3.5% 50~100만원 미만 6.6%	50만원 미만 4.0% 50~100만원 미만 4.9%
100~200만원 미만 23.8%	100~200만원 미만 38.6%	100~200만원 미만 31.5%
200~300만원 미만 30.4%	200~300만원 미만 28.8%	200~300만원 미만 32.4%
300~400만원 미만 20.5%	300~400만원 미만 13.1%	300~400만원 미만 13.8%
400~500만원 미만 9.4%	400~500만원 미만 4.7%	400~500만원 미만 5.4%
500~ 7.1%	500만원 이상 4.7%	500만원 이상 7.9%

* 자료: 우복남, 2016, 『충남 결혼이주여성 생활실태와 정책방향』,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충남 결혼이주여성 중에 직업이 있는 여성 58.3%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31%에 불과함. 결혼이주여성들은 구직의 어려움이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 한국에서의 경력부족, 적합한 일자리 부족,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에서 비롯된다고 봄

<표 2-30> 충남 결혼이주여성 현재 직종

구분	빈도	%	
해당 없음(직업이 없다)	277	41.7	
현재 직업 있음	소계	387	58.3
	상용직	120	31.0
	임시직	99	25.6
	일용직	62	16.0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38	9.8
	종업원이 없는 자영자	49	12.7
	무급가족종사자	19	4.9
합계	664	100.0	

* 자료: 우복남, 2016, 『충남 결혼이주여성 생활실태와 정책방향』,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한국어를 잘하지 못함		32.3
한국에서의 경력 부족	13.2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부족함	11.4	
출신국에서의 학력과 자격증을 인정받지 못함	3.6	
출신국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함	2.3	
취업을 도와줄 가족이나 친구가 없음	2.9	
외국인에 대한 차별	10.9	
일자리 정보 부족	9.1	
나에게 맞는 취업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함	6.3	
기타	2.1	
어려움 없음	6.0	

* 자료: 우복남, 2016, 『충남 결혼이주여성 생활실태와 정책방향』,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그림 2-4> 충남 결혼이주여성 구직의 어려움

■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의 증가

- 노동이주여성은 결 내국인 남성 중심 산업·노동구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차별적 요인 이외에도 이주여성이기에 노출되는 위협들이 존재함(내국인 여성에 비해 더 쉬운 성희롱·성폭력, 임신·출산으로 인한 해고와 미등록 신분 추락, 고위험 존재). 특히 지방의 고립된 농촌에서 농업분야에 고용된 노동이주여성은 폭력으로부터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음

◆ 충남 이주여성 동료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 * 국내 농업분야 이주여성 노동자의 30.8%는 본인이 직접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50.0%는 같은 농장이나 지인의 성폭력 피해를 직접 목격했거나 그런 경험을 들은 적이 있었다고 응답
- ** 충남 아산 거주 이주여성 동료 성희롱·성폭력 피해사례 경험 19.7%로 응답

* 자료: 「농축산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2013)

** 자료: 「이주여성의 노동의 현실과 대안」 (아산이주여성연대 토론회, 2016.3.6.)

(2) 청소년

■ 청소년의 정신 건강 취약

- 학교밖청소년의 경우 정신건강 측면에서 남자 청소년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충남 위기청소년실태조사(2015) 결과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질문에 ‘1번 이상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에 청소년은 45.3%로 남성(20.9%)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 정신건강이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내적으로 학대 및 무기력증 같은 상태에 머물다가 비행 혹은 성매매와 같은 외적행동으로 표출되기 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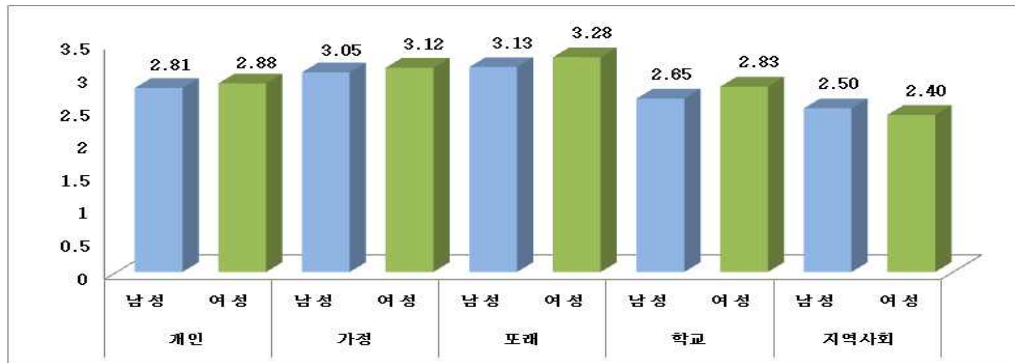
<표 2-31> 충남 학교밖청소년의 자살충동 현황

학교 밖 청소년	지난 1년동안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적이 있다					전체
	0. 전혀없다	1. 1번	2. 2~3번	3. 주1~2회	4. 거의매일	
남 자	34(79.1)	5(11.6)	4(9.3)	0(0)	0(0)	43(100.0)
여 자	17(54.8)	3(9.7)	6(19.4)	3(9.7)	2(6.5)	31(100.0)
전 체	51(68.9)	8(10.8)	10(13.5)	3(4.1)	2(2.7)	74(100.0)

* 자료: 충남여성정책개발원·충남청소년진흥원, 2015, 충남 위기청소년실태조사

■ 지역사회의 낮은 청소년 위기보호수준

- 충남 여성청소년/남자청소년이 지각한 위기보호수준에서의 성별차이를 보면, 개인·가정·또래·학교 부분에서는 여자청소년(1,962명)이 남자청소년(1,802명)보다 위기보호수준이 높게 나타남. 반면에 지역사회 부분에서는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의 위기 보호수준이 통계적으로 낮게 나타남(충남청소년위기실태조사, 2015).



* 자료: 송미영, 2016, “성별 위기보호요인 수준의 차이”,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젠더브리프

<그림 2-5> 청소년 성별 위기보호요인 수준의 차이

(3) 장애여성

■ 장애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 충남 여성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20.2%로 남성장애인 66.4%에 비해 매우 낮음
- 여성장애인이 겪는 어려움 1순위는 경제적 자립(28.8%)임. 한편 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 할 수 없을 것 같아서'(38.1%, 1순위)와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로로 인한 건강문제'(20.5%, 2순위)로 나타남(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 실태조사)

<표 2-32> 성별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단위 : %)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충남 ¹⁾	전체 인구	46.0	3.7	44.3
	남성장애 인구	66.4	3.4	64.1
	여성장애 인구	20.2	5.1	18.9
전국 ²⁾	전체인구	63.3	3.8	60.9
	남성장애 인구	48.7	8.1	44.7
	여성장애인구	22.6	7.1	21.0

자료 1) 충남: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남 장애여성경제활동활성화방안」, 2015

2) 전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5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5

■ 충남 장애여성의 낮은 학력 수준

- 전국 고졸 이상 남성 장애인은 54.7%인데 반해 여성 장애인은 27.6%로, 남성의 절반 수준(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 2015 장애인통계)
- 충남의 고졸 이상 장애여성(15세 이상) 비율은 13.8%로 전국 24.5%에 비해 낮음(최은희, 2015, 충남 장애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방안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표 2-33> 충남 장애인의 학력구성비

(단위 : %)

구분		전체	중졸이하	초졸이하	중졸	고졸이상	고졸	대졸이상
전체인구 ¹⁾	계	100.0	27.4	17.1	10.2	72.7	36.9	35.8
	남성 인구	100.0	20.4	10.9	9.5	79.6	38.3	41.3
	여성 인구	100.0	33.7	22.9	10.8	66.2	35.6	30.6
장애인구 ¹⁾	계	100.0	56.6	40.4	16.2	43.4	28.1	15.3
	전국 남성장애인구	100.0	45.4	27.7	17.7	54.7	34.5	20.2
	전국 여성장애인구	100.0	72.0	57.8	14.2	27.6	19.3	8.6
여성장애인구 ²⁾	전국 여성장애인구	100.0	75.5	-	-	24.5	18.2	6.3
	충남 여성장애인구	100.0	86.2	-	-	13.8	10.1	3.7

* 자료 1)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 2015 장애인통계」, 2015.

- 전체인구는 25세 이상, 2010년 기준

- 장애인구는 미취학자 6세 미만 제외, 2014년 기준

- 초졸이하는 무학을 포함한 수치이며 대졸이상(대학(3년제 이하)에서 대학원까지 모두 포함)

* 자료 2)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 장애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2015.

- 여성장애인구는 15세 이상, 2014 추정치 기준

■ 장애인의 낮은 사회참여

- 평생교육참여율을 기준으로 사회참여 정도를 살펴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격차가 직업능력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체육·예술분야 교육 부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남. 직업능력교육의 경우 20~30배를 넘는 차이를 보임

<표 2-34> 평생학습 참여율

단위 : %

구 분		학력보완	기초문자해독	직업능력	인문교양	문화체육예술	시민참여
전체인구 ¹⁾	계	0.4	0.1	26.1	8.4	10.8	1.4
	남성인구	0.2	0.0	32.4	5.4	8.0	1.0
	여성인구	0.5	0.3	19.7	11.4	13.5	1.7
장애인구 ¹⁾	계	0.3	0.4	1.4	0.8	2.6	0.3
	남성장애인구	0.3	0.3	1.5	0.9	1.7	0.3
	여성장애인구	0.4	0.5	1.4	0.6	3.8	0.3

* 자료 1) 통계청, 「비형식교육 영역별 참여율」 2015

* 자료 2)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실태조사」 2014

■ 장애인의 연령에 따른 욕구 차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 총남의 장애인은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과 경제적 어려움이 컸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15세~19세는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이 29.1%로 가장 높았고, 20대 이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제적 어려움(42.5%)’이 가장 높았음(50대 51.1%, 60대 51.2%). 60대 이상에서는 ‘건강문제’가 31.4%로 가장 높았음(충청남도, 2013, 충남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수립연구)

2) 미래전망

(1) 이주여성

■ 증가하는 다양한 이주여성·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사회적 배제의 지속은 사회통합 저해

- 국제이주가 증가하며 전 세계적 현상이 되는 가운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는 이주민을 신규 아젠다로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 강조
- 신규 아젠다는 지위와 상관없이 이주민의 기본적 자유보장, 인권보호와 증진의 수호, 성평등과 성격차 감소, 취약한 이주민에 대한 고려, 기회활용과 사회참여에 필요한 이주민의 평생교육기회 접근, 성장과 발전에 있어 이주민의 기여 인정과 이의 홍보를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

-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를 비롯한 다양한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의 편견, 무시와 차별, 배제가 지속된다면 사회의 통합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평등과 비차별, 사회·노동·교육 통합을 통해 다양성을 발전의 긍정에너지로 전환하는 시도 필요

■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 대우의 지속은 미래 국제사회 평화 위협

- 이주노동자, 특히 노동이주여성에 대한 현재의 대중적 시각과 비인간적 대우가 지속된다면 국제사회 한국위상 추락 및 지역경제 위기 초래 가능
-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비인간적 대우 지속은 국제사회 한국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범죄를 불러올 것이며, 이에 대한 상호증오 확대 시 미래 국제사회가 폭력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 존재

(2) 청소년

■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된 위기청소년 증가

-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우울·자살위험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가해 청소년, 사이버중독 청소년, 외국인주민의 자녀,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등 다양한 위기 청소년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이와 같은 다양한 위기 청소년들의 증가는 자살, 성문제, 사회부적응문제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며, 개인, 가정, 지역 사회 등의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

■ 위기 청소년의 증가에 대한 위기단계별 성별 지원체계 확대

- 향후 위기 청소년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지역사회 차원에서 위기 청소년의 위기단계별 성별 지원체계를 지역별 수요·공급분석을 통하여 강화해야 함. 첫째, 위기예방 인프라 확대를 통한 안전한 환경조성이 필요함. 둘째, 초기긴급체계 구축을 통하여 위기보호 서비스를 확충해야 함

■ 정신건강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높은 경제적·심리적 정책 지원

- 정신건강이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내적으로 학대, 무기력증 같은 상태에 머물다가 비행 혹은 성매매와 같은 외적행동으로 표출되기 쉬움. 예컨대 남자 청소년의 경우, 잠자는 장소에 대한 결정정도가 약하여 쉼터 적응도가 높음. 반면에 청소년의 경우, 불편감으로 쉼터 적응도가 낮거나 잠자는 장소에 대한 결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이는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특성 때문일 것임. 따라서 경제적 및 심리적 자립 지원정책 확대 필요

(3) 장애여성

■ 장애 개념의 변화 : 신체의 기능적 맥락에서 사회·환경적 맥락으로

- WHO는 2001년도에 기능 및 장애와 관련된 세계적인 공통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를 제시하였으며 많은 국가들이 이를 따르고 있음. ICF는 장애의 개념을 사회적 맥락에서 폭넓게 정의하고 있음. 즉 신체적 장애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넘어서 개개인의 기능적·사회적·환경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를 분류하고, 이를 위해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적 개입과 사회참여 향상을 위한 환경요인 개선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ICF 개념은 국내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

■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적 노력 확대

- 인권에 대한 이슈는 전 세계 공통 관심사로 UN의 주도하에 장애인 인권강화 노력은 이미 국제적 규약이 되어 왔음. 한국 또한 장애인인권선언 등에 기반하여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행사항에 관한 평가는 높지 않음. 향후 장애인 인권 및 인식 증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은 보다 확대될 전망

■ 장애인 지원 패러다임 변화 : 치료적 지원에서 자립생활 지원으로

- 장애인 지원 패러다임은 예전의 치료적 지원에서 현재 자립생활 지원으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패러다임은 향후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자활 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개인 역량 향상이 지원의 초점이 될 것임

3) 과제

(1) 이주 여성

■ 이주여성 정책참여 활성화 및 정책파트너 위상 강화

- 충남은 이주민 수가 많고,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을 위해 이주민 사회 참여 확대 필요
- 이주민 정책결정 참여는 사회통합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영국, 독일, 일본 등 다문화사회 및 서울 등 타 지자체에서도 이주민 대표자기구 운영 및 정책파트너 위상 부

여를 통한 통합 시도

- 충남 대표적 정주 이주민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들의 실질적 정책 결정과정 참여 보장을 위한 대표자 회의 기구 운영 필요

■ 결혼이주여성 취·창업 지원 체계화

- 충남 이주여성 대다수를 구성하는 결혼이주여성은 노동이나 유학이 목적인 이주여성과 달리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한국 정주가 예상되지만 그 가구의 소득은 낮은 편으로 결혼 이주 여성의 경제적 참여 확대 필요
- 경제적 자립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자존감 향상과 사회통합의 핵심으로 체계적 취·창업지원으로 실효성 있는 실질적 경제적 자립 지원 필요

■ 위기 이주여성 모국어 상담·보호 등 지원의 체계화

- 폭력피해 등 인권침해를 당한 위기 이주여성의 체류와 귀화, 장애대응지원 등 이주여성 상담 및 보호 조치 등 체계적 지원이 필요
- 인도주의적, 인권적 관점에서 기존 법규의 사각지대에 처한 이주여성 지원 포함 필요

(2) 청소년

■ 위기청소년의 경제적·심리적 자립지원 강화

- 특히 이혼, 가정폭력가정 등으로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빈곤 청소년에 대한 지역적 관심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소 마련, 빈곤한 청소년의 학원 수강(춤, 성악 등 배우고 싶은 것) 지원, 비용이 저렴한 도립형 청소년 대안학교, 다양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직업체험관,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정책이 요청됨

■ 지역사회 위기보호요인의 강화전략 모색

- 위기보호에서 성별차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청소년의 경우, 지역사회 보호수준에서 남자 청소년보다 낮게 나타남. 예컨대, 청소년의 경우, 동네에서 마음 놓고 의지하는 사람,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적다고 인식하였음
- 그리고 청소년은 개인적인 보호요인, 학교 보호요인, 지역사회 보호요인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음. 따라서 충남에서는 개인, 학교, 지역사회에 대한 위기보호요인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개입전략이 필요

(3) 장애 여성

■ 장애여성 임파워먼트

- 장애여성의 기초 학력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 장애여성의 교육 및 사회참여에 제한이 되는 경제적, 환경적 요인들을 완화하는 지원
- 장애인 관련 각종 위원회의 장애여성 참여율 확대 및 이에 대한 이행 점검

■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 장애여성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장애여성 특화 사업장 모델 개발
- 장애여성에 의한 사업장 운영과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여성 CEO 집중 육성
- 장애인 전문직업교육시설 설치 및 취·창업 매칭, 시설의 성별 이용률 관리
- 민간부분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을 위한 도차원의 지원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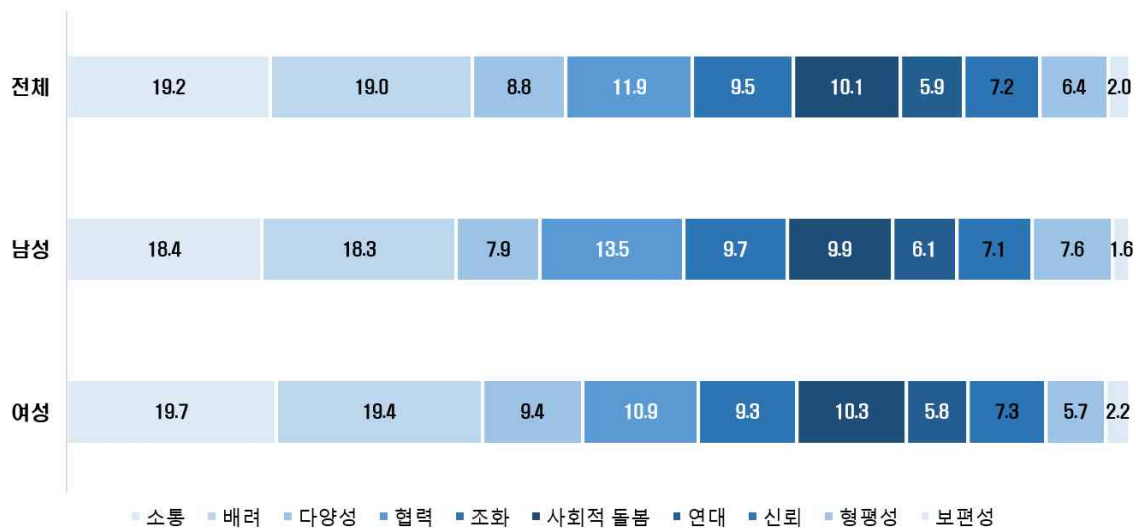
■ 장애여성 폭력예방

- 지적장애여성 폭력예방을 위한 교재 및 교구 개발 보급

1. 도민의견조사를 통해 살펴본 정책 욕구와 미래상

1)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에 담아야 할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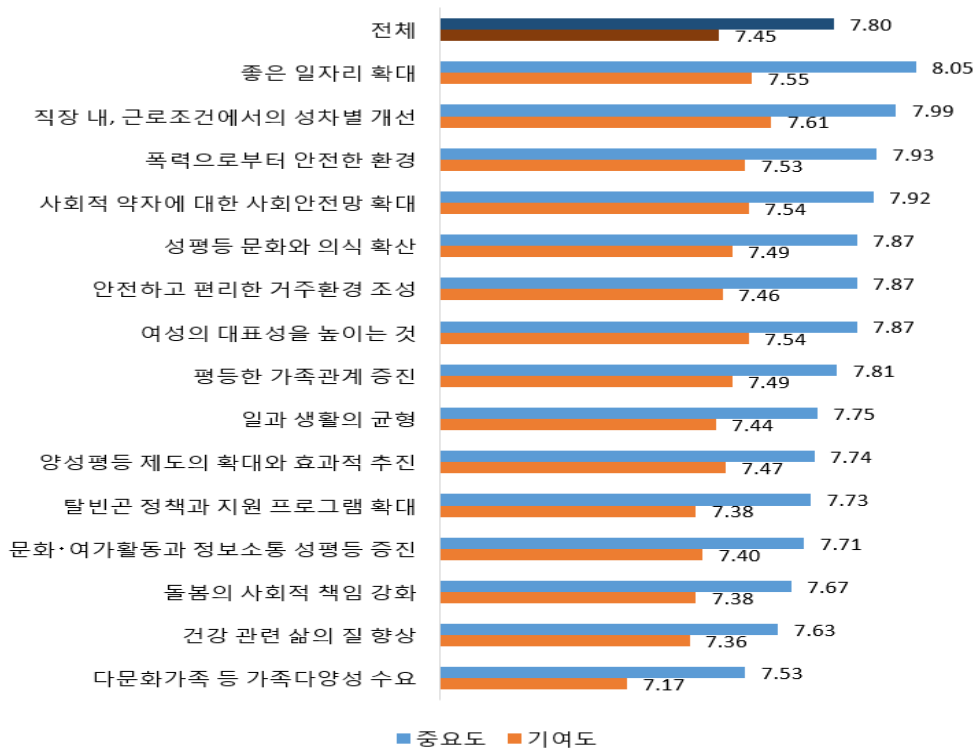
-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을 만들 때, 비전에 담아야 할 가치에 대해 우선순위로 조사한 결과 1순위로 '소통(32.4%)'을, 2순위로는 '배려(28.4%)'를 선택함



<그림 2-6> 충남의 양성평등 비전 2030에 담아야 할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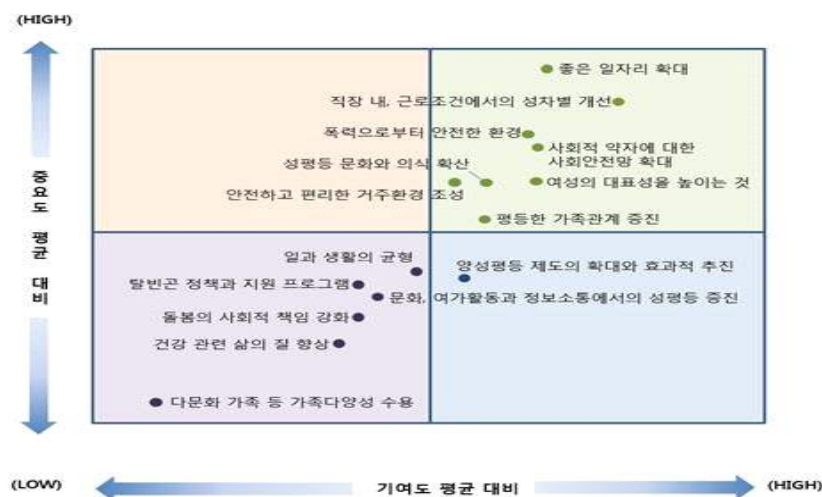
2) 성평등 충남을 만들기 위한 여건(중요도 및 기여도)

- 성평등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여러 여건들 중, 중요도와 기여도가 높은 여건들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선 중요도 측면에서는, '좋은 일자리 확대'가 8.0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직장 내 근로조건에서의 성차별 개선' 7.99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7.93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7.92점의 순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기여도의 측면에서는, '직장 내 근로조건에서의 성차별 개선' 7.99점, '좋은 일자리 확대' 7.55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와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 7.54점으로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7> 성평등 충남을 위한 제반 여건들의 중요도와 기여도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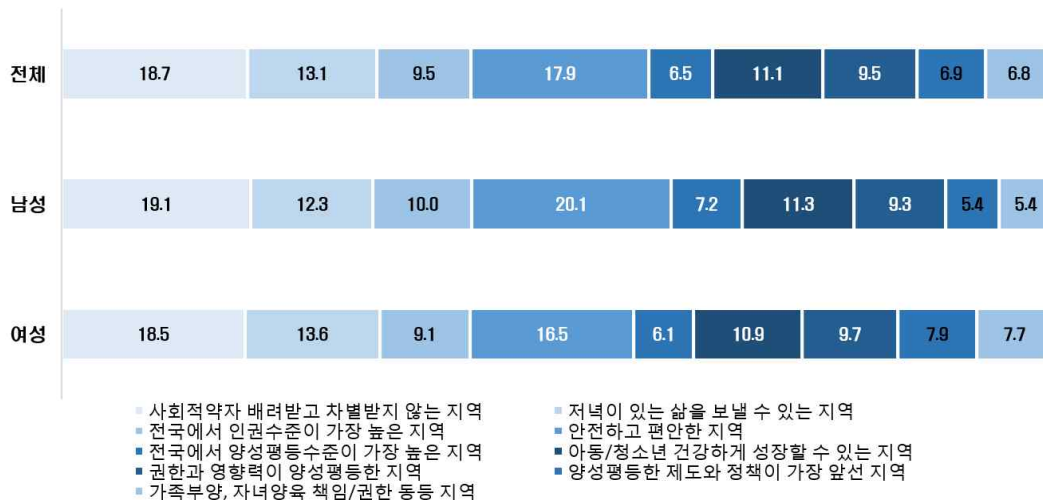
- 한편, 성평등을 위한 제반 여건의 중요도와 기여도에 대한 상대적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은 분포도를 나타냄



<그림 2-8> 성평등 충남을 위한 제반 여건들의 중요도와 기여도 평가의 분포

3) 성평등 충남의 미래상에 대한 기대

- 도민들이 바라는 '2030년 남녀가 평등하게 살기 좋은 충남의 모습'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순위로 '사회적 약자가 배려받고 차별받지 않는 지역(25.6%)'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 24.2%, '저녁이 있는 삶을 보낼 수 있는 지역' 13.2% 순으로 나타남. 2순위로는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이 1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1순위에서 3순위까지 합산한 전체 비율로는 '사회적 약자가 배려받고 차별받지 않는 지역' 18.7%,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 17.9%, '저녁이 있는 삶을 보낼 수 있는 지역' 13.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배려받고 차별받지 않는 지역' 18.5%,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 16.5%, '저녁이 있는 삶을 보낼 수 있는 지역' 13.6%의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 20.1%, '사회적 약자가 배려받고 차별받지 않는 지역' 19.1%, '저녁이 있는 삶을 보낼 수 있는 지역' 12.3%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9> 도민들이 바라는 2030년 성평등 충남의 모습

2. 집담회와 시군토론회에 반영된 도민의 정책 욕구

1) 집담회 결과 : 성평등 현실과 정책욕구

연령	불평등한 점에 대한 생각	주력해서 추진하고 싶은 성평등정책 (내가 도지사라면?)
1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은 책임감, 경제권 등 남성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 특히 남성은 돈을 벌지 못하면 결혼도 못할 것 같고, 돈을 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 두려움이 있음 ▷ 여성은 밤길, 낮에도 외딴길, 엘리베이터 안, 교실에서 교사와 단둘이 있는 상황 등 일상의 모든 장소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낌 ▷ 가정 안에서 아들은 잘되어야 한다는 기대감이 딸보다 더 큰 경향이 있음. '집안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학업성취 등에서 부모관심이 더 높고 성취에 대한 압박이 심함 ▷ 체육시간에 교사가 남녀학생들의 수업참여에 대한 기대가 다름. 남학생은 무조건 적극적 참여를 하게 하고, 여학생은 쉬게 함 ▷ 생리 등 생물학적 차이로 인하여 불편함과 활동에 제약이 존재 ▷ 여학생의 역할을 보조하는 역할로 제한하는 (회장보다는 부회장) 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의 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편견, 고정관념을 없애는 정책 ▷ 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성폭력 등 각종 불안감을 없애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20•3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이 소수자의 위치에 있을 때 오히려 불평등에 대해 말하지 못함. 문제제기 자체가 남자답지 못하거나 약한 남자로 비춰짐 ▷ 직장에서 여성과 남성의 일이 구별이 되어있고 불합리함. 여성들은 직장에서 대체로 높은 위치에 있지 않다보니 생리휴가 같은 것도 눈치를 보느라 쓰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점들에 대해 포기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음 ▷ 기업에서 나이 어린 여직원을 채용하여 단순 업무를 시키고 낮은 연봉을 유지, 여성은 경영지원, 남성은 엔지니어 등 성별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음 ▷ 직장에서 여성들의 업무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문화가 존재 ▷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특히 소규모 조직은 대체인력을 쓰기 어려움 ▷ 대학에서 교수들이 여학생에 대한 편견과 비하가 여전히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을 사회적으로 해결 ▷ 일반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을 마음놓고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의 제재 필요 ▷ 엄마들의 일자리 마련 정책 ▷ 당장 가시적이지 않더라도 성평등 교육부터 시작
40•5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은 감정표현을 감추어야 하고, 잘 하지 못함 ▷ 회의석상에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의견이 무시당함 ▷ 자신보다 늦게 들어온 신입사원이 먼저 승진 ▷ 남편과 똑같이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부인이 집안일을 도맡아하는 현실 ▷ 출산 후 아이를 키우느라 일을 그만두고 경력 단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과 여성이 역지사지를 체험하는 교육 ▷ 학교교육, 교사교육부터 성평등 교육 실시 ▷ 남성 대상 지속적인 성평등 교육 실시 ▷ 남성 여성 동일임금 지급 ▷ 범죄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정책 추진
60대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에는 불평등했으나 지금은 별로 불평등하지 않다고 인식 ▷ 과거에는 여자들이 괘세 받고, 학교 교육도 별로 받지 못했음 ▷ 명절 때 아들이 부인의 가사일을 돕는 것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문제, 부부갈등과 자녀의 방치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중요 ▷ 가정내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집담회 시사점

시사점

10대

- ▶ 학교생활, 교사 및 부모와의 관계에서 성 불평등한 경험을 제시
- ▶ 여성의 경우, 학교와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이에 대한 정책욕구가 높음
- ▶ 여성과 남성 모두 부모의 역할기대, 관계에 있어 전통적인 관념에 순응적인 측면이 있어, 미래세대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10대에서부터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의 확대가 필요
- ▶ 장기적으로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체계를 약화시키고,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책임과 권한의 분담과 공유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정책 필요

20/30대

- ▶ 결혼·육아의 문제, 직장 내에서의 불평등, 성차별적인 노동구조에 대한 문제의식 강함
- ▶ 직장 내에서의 성차별적 직무수행 관행, 차별적이지 않은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필요 있음
- ▶ 남성도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불합리함,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편, 육아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확대될 경우 향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정 내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공유의 문화확산 가능성 높음

40/50대

- ▶ 여성의 경우 가정 내에서 가사분담의 불공평함이나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불평등을 경험
- ▶ 남성은 남성으로서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기대에 대한 부담감 등을 경험
- ▶ 여성은 직장 내에서의 승진, 유리천장 등의 경험을 통해 불평등함에 대한 문제의식 느낌
- ▶ 과거에 비해 남성들이 가정 내에서 일부 가사분담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인식
- ▶ 사회, 정치 영역에서의 대표성 부분에서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과 정책욕구가 높으며, 이에 대한 정책 강화 필요

60대 이상

- ▶ 주로 과거와 비교하여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 일부 남성노인들의 경우, 예전과는 달리 일상에서 배우자의 가사일을 조금씩 돕는 실천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도 함
- ▶ 자녀세대의 달라진 모습들(아들이 가사일을 하거나 며느리가 아들에게 가사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나 부분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측면도 있음
- ▶ 노년층, 특히 초기 노인세대의 성평등한 배우자와의 관계, 의사결정, 가사분담 등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학습과 훈련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확대해갈 필요가 있음

3) 시군 순회 토론회 의견과 시사점

주요의견 및 정책욕구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 인식변화가 매우 중요. 이를 위한 의식교육 실시 ●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교육 필요 ● 남성의 성평등교육 참여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교육 의무 이수 확대 - 소수자(결혼이민자, 장애인) 남성배우자 교육 강화 -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교육 - 남성농업인교육(농업기술센터 등 활용) 확대 ● 성평등교육 조기교육의 강화, 의무화, 제도화 ● 육아 문제의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육아에 대한 지역별 불평등 해소 -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 농촌에 맞는 보육, 돌봄서비스 정보 빈약 -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지원과 강력한 추진 ●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 채용 및 배치 ● 여성관리직 증대 ● 여성의 정치적 역량강화 ● 의사결정 여성 참여 확대. 여성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위원회 위원 선정대상 재검토 - 관련 조례, 규칙 등 정비 필요 ● 성평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필요 ● 여성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 ● 여성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 확충 - 폭력관련 예방교육 확대(초등학교부터 시작, 농촌지역으로 확대) - 업무중사자 처우개선 ● 공공장소의 안전 강화 필요 ● 여성 일자리, 취업기회 확대, 취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의 확실한 재취업을 위한 정책 필요 - 농산물 가공 창업 등 규제를 풀어 여성들도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 ● 여성취업 관련 채용의 불평등, 기업이 인식 변화 필요 ● 일-가정 양립 정책의 인식, 재평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가정 양립정책이 여성에게 수퍼우먼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 필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10px;"> 실질적 인식개선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강화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양성평등교육 강화, 제도화 필요 ▶ 도민들이 골고루 양성평등교육을 접하고, 성평등 의식수준 향상이 일상생활에서 체화될 수 있도록 교육의 장 확대, 교육체계 확립 필요 ▶ 농촌지역으로 교육확대 ▶ 기업, 공공부문 외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남성들의 교육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확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10px;"> 돌봄의 공공성 강화 필요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의 확대,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드라이브(국가정책) ▶ 돌봄서비스 수혜의 지역적 불균형(접근성 등) 해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10px;"> 여성의 참여 활성화, 젠더 거버넌스 강화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권한에서의 동등성과 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한 인력의 배치, 채용, 점검 필요 ▶ 거버넌스 차원에서 여성들이 행정, 정책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강화 필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10px;">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피해 지원 인프라 확충 ▶ 폭력예방교육의 확대 ▶ 공공장소, 일상생활공간의 안전성을 높이는 환경으로 바꾸어나가는 정책 필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10px;"> 노동시장, 일자리에서의 불평등 해소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의 효과성 제고 ▶ 창업지원에서의 성인지 관점에서의 정책 ▶ 기업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 현재의 일-가정 양립정책의 한계,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의 구성체계

제1절 핵심가치와 영역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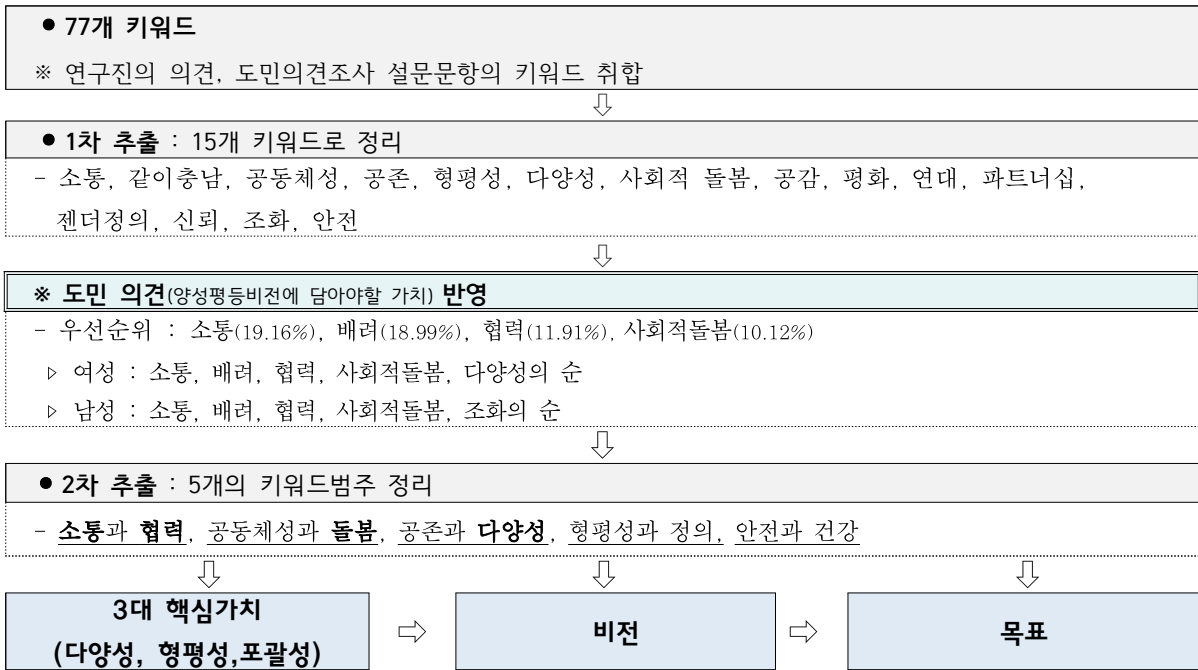
1. 비전 키워드와 핵심가치

■ 비전의 지향성 설정

-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은 미래지향적, 도전적, 보편적, 지역적이라는 4가지의 지향성에 바탕을 두고 수립하는 것으로 설정함
- 첫째, 미래지향적 지향성은 현재의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 목표 설정과 과제를 제시하려는 것이고, 둘째, 도전적인 지향성은 비전계획을 통하여 현재 주류의 가치와 틀을 바꾸는 것을 지향하는 것임
- 셋째, 보편적 지향성은 특정 대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도민의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 걸친 성평등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며, 넷째, 지역적 지향성은 충남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계획 수립을 지향하는 것임

■ 비전 키워드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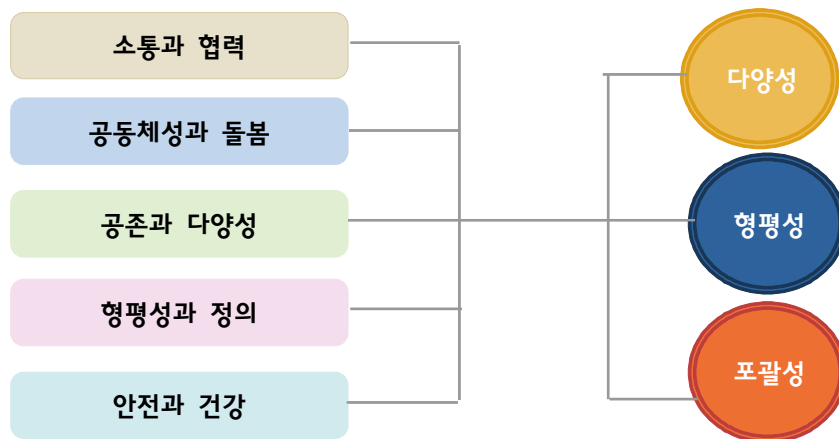
-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소통과 협력’, ‘공동체성과 돌봄’, ‘공존과 다양성’, ‘형평성과 정의’, ‘안전과 건강’의 5가지로 설정
- 비전 키워드 설정은 비전의 핵심가치와 주요 목표 도출의 방향성을 잡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이 작업을 위하여 우선 도민의견조사 결과와 연구진의 의견을 바탕으로 총 77개의 키워드를 추출하고, 연구진 워크숍에서 1차와 2차에 걸쳐 키워드를 추출·정리하는 과정을 거침
- 1차 추출에서는 ‘소통’, ‘같이 충남’, ‘공동체성’, ‘공존’, ‘형평성’, ‘다양성’, ‘사회적 돌봄’, ‘공감’, ‘평화’, ‘연대’, ‘파트너십’, ‘젠더정의’, ‘신뢰’, ‘조화’, ‘안전’의 15개의 키워드로 정리하고, 다시 2차 추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5개의 키워드로 정리함



<그림 3-1> 비전 키워드의 추출과정

■ 핵심가치의 설정

- 핵심가치는 비전계획이 지향하는 가치를 공통적,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5개의 비전 키워드와 연계하여 다양성, 형평성, 포괄성의 3개를 설정
- 다양성은 차이의 인정과 다름의 수용, 차이를 차등화하지 않는 가치를 의미하며, 형평성은 젠더 정의(gender justice) 실현의 기본적 가치로서, 조건, 과정, 결과에서의 평등성을 지향하는 것이고, 포괄성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비전계획 수립에 있어 인간의 삶과 관련한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연결하는 것을 지향함을 의미



<그림 3-2> 비전 키워드와 핵심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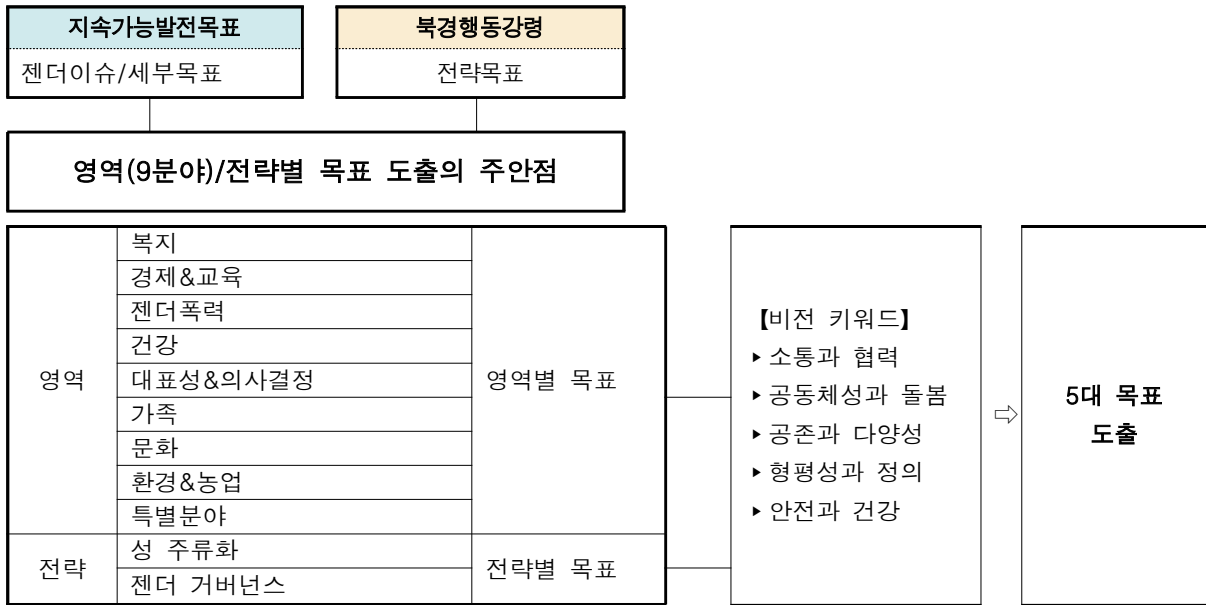
2. 영역별 목표 도출

- 비전체계를 구성하는 목표, 추진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비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포괄하고 있는 9개의 영역과 2개의 전략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목표 설정의 주안점에 대하여 정리
- 영역별 목표설정의 주안점은,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의 지침이라 할 수 있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17개 목표)와 북경여성행동강령(12개 영역)을 상호교차하여, 젠더 이슈와 전략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도출
- 목표설정의 주안점을 정리한 이후, 다시 도민의견조사 결과와 1차 전문가위원회의 자문에 기반하여 최종적으로 영역별 목표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침
- 이 영역별 목표는 비전계획의 전체 목표의 도출과 추진과제 설정을 위한 기본 틀로서 활용

<표 3-1> 비전체계 구성을 위한 영역별 목표 설정

영역/전략	목표설정 주안점 (SDGs-BPA와 연계)	영역별 목표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대응, 여성노인 의 취약성 해소 ▶아동양육, 돌봄 공공 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친화적 복지생태계 조성 ○사회적 돌봄 지원 강화
경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양질의 평생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사람을 키우는 튼튼한 경제 ○평등하고 좋은 일자리 ○지역민이 공감하는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 관점의 건강증진 정책강화 ▶건강서비스 접근권의 형평성 ▶보건정책에서의 젠더관점 통합을 위한 인력훈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주기별 성인지적 건강정책 강화 ○성평등 건강인프라 구축
젠더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젠더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강화 ▶폭력취약집단에 대한 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폭력 감수성을 키우는 인권사회 ○젠더폭력 대응력 power up!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좋은 사회
대표성&의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결정 참여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의 추진 ▶청소년, 이주여성, 장애여성 등 소수집단 여성의 사회적 권한과 참여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동수 참여 실현 ○실질적 성평등 대표성 제고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내 책임과 권한 분담과 공유 유도 ▶일과 생활의 조화와 균형을 꾀할 수 있는 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름을 수용하는 열린 공동체 ○어울림과 휴식이 있는 삶 ○동등하게 참여하고 협력하는 가족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화/미디어에서의 성평등 진작 ▶관습과 인식의 영역에서의 성평등 인식 제고와 생활 속 실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한 문화활동 활성화 ○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환경&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재난대비 등 환경 정책에서의 젠더 관점의 통합 ▶ 환경정책에서의 성별 관련성에 대한 점검, 관리 체계 강화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여성농업인의 지원과 육성 ▶ 농업자원, 영농활동에서의 여성의 실질적 인권한, 자원배분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적 환경보전 정책 강화 ○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 및 대표성 증진
특별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이주여성, 장애여성 등 소수집단 여성의 사회적 권한과 참여 촉진 ▶ 장애여성, 이주여성의 이중적 차별을 없앨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의 인권보장과 다문화 수용성 증대 ○ 이주여성의 당당한 사회참여 ○ 청소년 역량함양 및 지원 강화 ○ 장애여성의 권리 강화
성 주류화 (전략)	▶ 성주류화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 시스템과 점검관리 체계 강화	⇒	○ 도정의 성 주류화 실현
젠더 거버넌스 (전략)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의 확장	⇒	○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그림 3-3> 영역별 목표와 비전체계의 목표 연계

1. 비전

- 비전체계의 최상위인 비전 슬로건은 비전계획의 실현을 통하여 충청남도가 2030년에 도달할 모습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임
-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의 비전 슬로건은 “즐거운 변화, 성평등 충남”임. 이는 성평등한 충남으로의 변화가 충남을 활력있게 변모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며, 그 변화의 결과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수준이 향상될 수 있음을 표방한 것임
- 또한, 성평등한 충남으로의 변화 과정은 도민들이 삶의 과정에서 많은 즐거움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한 것이기도 함
- 즉, 성평등의 실현은 충남 도민의 삶을 보다 즐겁게 만드는 힘이자 주요한 요소가 되며, 충남이 도민의 행복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으로 변화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
- 그 외 비전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비전 슬로건으로,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지속가능한 충남”, “함께하는 양성평등, 지속가능한 충남”, “양성평등의 으뜸, 모두가 행복한 충남”, “같이 만드는 성평등, 즐거운 충남”이 제안됨

즐거운 변화, 성평등 충남

- ▶ 성평등한 충남으로의 변화가 충남을 활력있게 변모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강조
- ▶ 성평등한 충남으로의 변화 과정은 도민들이 삶의 과정에서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
- ▶ 성평등 실현이라는 변화의 결과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수준이 향상될 수 있음을 표방

<그림 3-4>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의 비전 슬로건

<p>【2안】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지속가능한 충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의 성평등 미래상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지속가능 발전의 동력임을 강조 ▶ 성평등의 과정과 결과가 궁극적으로 도민 모두에게 이로움을 표방
<p>【3안】 함께하는 양성평등, 지속가능한 충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의 성평등 미래상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지속가능 발전의 동력임을 강조 ▶ 성평등 미래를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 도민 모두의 협력과 참여에 의미가 있음을 강조
<p>【4안】 양성평등의 으뜸, 모두가 행복한 충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충남의 지역성평등지수가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탈피하여 전국적으로 최상위 수준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표방 ▶ 성평등을 통하여 도민 모두의 삶의 질과 행복수준이 향상될 수 있음을 강조
<p>【5안】 같이 만드는 성평등, 즐거운 충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의 실현에 있어 남녀 모두, 도민의 주체성을 강조 ▶ 도민의 자기주도적 참여에 기반한 성평등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충청남도를 활력있게 만들 수 있음을 강조

<그림 3-5> 기타 비전 슬로건(안)

2. 5대 목표와 10대 추진전략

-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의 5대 목표로 ‘젠더기반 혁신과 동등한 참여’, ‘돌봄 생태계 조성’, ‘차이를 인정하는 열린 지역사회’, ‘자원배분의 성별격차 해소’,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터전’을 설정

■ 목표 1 : 젠더기반 혁신과 동등한 참여

- 젠더기반 혁신과 동등한 참여는 성평등의 실질적인 추진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적, 행정적 기반과 사회·경제·정치 등 영역에서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을 확대·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목표 1의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❶ 젠더혁신 시스템 구축과 ❷ 여성 임파워먼트의 2개 전략을 설정

■ 목표 2 : 돌봄 생태계 조성

- 돌봄 생태계 조성은 돌봄의 사회적 역할이 여성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문화를 바꾸고, 공·사적 영역에서 남녀 모두의 균형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목표 2의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③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④ 일과 생활의 균형의 2개 전략을 설정

■ 목표 3 : 차이를 인정하는 열린 지역사회

- 차이를 인정하는 열린 지역사회는 다양한 삶의 여건이 차별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의 실천과 문화의 측면에서 성평등이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함
- 목표 3의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⑤ 가족의 다양성 인정과 지원과 ⑥ 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2개의 전략을 설정

■ 목표 4 : 자원배분의 성별격차 해소

- 자원배분의 성별격차 해소는 일자리, 소득 등 경제적 자원과 관련하여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목표 4의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⑦ 평등한 일터, 좋은 일자리와 ⑧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른 자원 배분의 2개 전략을 설정

■ 목표 5 :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터전

-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터전은 폭력, 환경, 재난 등에서 젠더 관점을 통합한 정책 확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성평등한 생활환경 조성 and 도민의 행복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목표 5의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⑨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와 ⑩ 모두가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2개의 전략을 설정



<그림 3-6>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의 체계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추진과제

제1절 추진과제

추진전략 1. 젠더혁신시스템 구축

- 성평등 충남 실현을 위한 도정과 여성·시민사회 영역의 성주류화 추진 환경조성과 시스템 구축
-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행정체계 구축과 위상 강화
- 민·관 협치를 위한 시민사회 환경 조성 및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1)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추진과제	세부과제
1-1 성평등 정책 환경 조성	1-1-1. 젠더 행정시스템 혁신
	1-1-2. 공무원 성평등 정책 실행력 강화
1-2 젠더거버넌스 강화	1-2-1. 젠더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
	1-2-2. 여성·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1-1 성평등 정책 환경 조성

1-1-1. 젠더 행정시스템 혁신

❶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핵심】**

- ▷ 여성가족정책관실 성주류화 추진력 강화
 - 성평등 정책 추진팀 구성 및 인력보강
 - 실·국별 성평등 정책 총괄 및 성주류화 전략 추진 허브로서의 역할

- ▷ 성주류화 전략 추진 부서 신설 (성평등 담당관)
 - 젠더행정 추진을 위한 기획·조정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
 - 성주류화 전략 추진 정책 총괄 기능
 - 개방형 임기제 젠더전문가 임용
- ▷ 「양성평등기본조례」를 「성평등기본조례」로 전면 개정 및 내용보강
- ▷ 성인지결산서 성과지표관리체계 구축
 -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관리
 - 성인지예산 편성비율 관리

② 성평등·인권증진국 신설

- ▷ 성평등·인권 등 형평성 관련 정책 기획·조정 등 총괄국 신설

③ 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 강화

- ▷ 의회 성평등 전문가 행정 인력 보강
 - 의원 성인지연구모임 운영

1-1-2 공무원 성평등정책 실행력 강화

① 성인지 정책 공무원 역량강화 계획 수립·운영

- ▷ 공무원 대상별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콘텐츠 개발·교육운영
 - 고위정책과정, 주무관리자 과정, 업무담당자 특성화 과정, 여성리더과정 등 특성화
- ▷ 공무원 법정 의무교육시간 중 성평등 교육 필수 이수과목 지정
- ▷ 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 성인지 정책 추진력 강화

② 성인지 행정통계 시스템 구축

- ▷ 부서별, 사업단위별 성별분리통계 생산 및 구축

1-2

젠더거버넌스 강화

1-2-1. 젠더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

① 젠더거버넌스 전담 행정조직 신설

- ▷ (현)여성가족정책관실 내 젠더거버넌스팀 설치

- ▷ 젠더거버넌스 관련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개방형 전문직위제 운영
 - 주요업무
 - 충남도 젠더거버넌스 정책 총괄 기획·조정 기능 수행
 - 젠더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충남여성인재DB 구축 및 운영 총괄

② 젠더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핵심】**

- ▷ 충남 젠더거버넌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분야별 도민, 의회 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 참여
 - 양성평등비전2030 실현을 위한 시민협약 추진, 의제별 이행점검, 공감대 확산
- ▷ 행정부서 공무원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각 부서 젠더거버넌스 추진 실무자, 여성정책 전문가
 - 분야별 양성평등비전2030 추진 의제 검토, 조정 등 내부협력체계
- ▷ 도 및 시군 행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도 및 시군 여성정책 담당자
 - 도 및 시군 성평등 정책 관련 제도·사업 공유, 개선방안 논의 등
 - ※ '17년 광역단위 운영 → '18년 시군단위 시범운영 후 확산

③ 충남 여성인재DB 구축-도 인재풀관리시스템 활용

- ▷ 충남도 인재풀관리시스템 내 여성인재DB 구축 및 관리기능 강화
 - 수집대상: 위원회, 공공기관, 대학, 전문가뿐만 아니라 각 부서 민관협치 사업 참여자
 - 성별 분야별 DB수록 비율 관리(※특별: 이주여성, 장애여성, 여성농업인 비율 관리)
 - 여성인재정보 활용: 위원회, 민관협치기구 등 여성인재 추천
 - 도-시군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1-2-2. 여성·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① 시군 단위 여성·시민사회 활동 발굴 및 활성화 지원

- ▷ 여성 풀뿌리소모임 대상 공모사업 신설 운영
 - 등록단체가 아닌 작은 풀뿌리소모임 활동 지원 사업 신설
 - 마을단위 성평등 관점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 ▷ 시군단위 '작은' 젠더거버넌스 사업 개발, 운영
 - 성평등 정책 의제 발굴 및 제안, 사업반영, 환류 일련의 과정
- ▷ 여성단체·풀뿌리소모임 활동가 역량강화
 - 핵심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실시(대학과 연계한 장기교육)

- ▷ 여성단체·풀뿌리소모임 DB 구축
 - 각 부서 보조금, 공모사업 참여 여성단체·소모임 DB 구축
- ▷ 여성·시민사회 네트워크 조성사업
 - 교류사업 운영: 양성평등주간사업 참여, 공익활동지원센터 교류사업 참여 연계
 - 충남 여성단체·소모임 대표 연대회의 구성, 광역/시군/분야별 협력사업 실시

② 여성·시민사회 활성화 허브(Hub) 조직 설치 및 운영 【핵심】

- ▷ 여성·시민사회 참여역량 강화 전담 지원
 - 여성·시민사회 성평등 리더십, 성평등 의제개발 능력 강화
 - 성평등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모델 개발 및 추진
- ▷ 시군 단위 여성·시민사회 활동 발굴 및 활성화 지원 전담 지원
 - 여성·시민사회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밀착형 사업 추진
 - 분야별, 지역별 여성·시민사회 협력 네트워크 조성 사업 추진
 - ※ '18년 광역단위 운영 → '19년 시군단위 시범모델 운영, 확산 → 민간 여성단체 이관

2) 주요지표

주요지표	현재	2020	2025	2030
성인지결산 성과목표 달성률	-	매년 2%상승	매년 2%상승	매년 2%상승
공무원 성평등 교육 이수율 ¹⁾	-	60%	80%	100%
성인지예산 비율	5.9%	10%	15%	20%

* 현재 50% 정도로 추산

3) 추진과제의 단계별 추진 개요

전략	단기(~2020)	중기(2021~2025)	장기(2026~2030)
젠더 혁신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 정책 추진팀 구성 및 인력보강 ■ 「성평등기본조례」 로 전면개정 및 내용보강 ■성인지결산서 성과지표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지예산 편성비율 관리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주류화전략추진 총괄부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젠더전문가 임용(성평등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인권증진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 성평등 전문가 행정인력 보강 ▶의원 성인지연구모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성인지연구모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역량강화 계획 수립·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대상별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공무원 성평등 교육 필수이수과목 지정 ■ 성인지 행정통계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별 공무원 교육 참여 지속 확대 ■성평등 교육 이수 공무원 비율 지속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젠더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 행정조직 신설 ▶젠더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충남여성인재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젠더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점검, 우수사례 발굴, 시군 확산 ■여성인재DB 도-시군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젠더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 확산 지속 ■여성인재DB 도-시군 통합운영시스템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시민사회 활동 발굴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풀뿌리소모임 발굴 공모사업 ▶‘작은’ 젠더거버넌스 사업 개발·운영 ▶‘여성단체·풀뿌리소모임 DB 구축 ▶여성·시민사회 네트워크 조성 ■여성·시민사회 활성화 허브조직 설치 (광역, 시군 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시민사회 활동 발굴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활동가 역량강화(대학연계 교육) ■충남 여성단체·소모임 대표자 연대회의 구성 ■여성·시민사회 활성화 허브조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확산, 민간 여성단체에 운영 위탁 ▶이행현황 문제점 등 점검/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여성단체·소모임 대표자 연대회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시군/분야별 협력사업 운영 ■여성·시민사회 활성화 허브조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확산, 민간 여성단체에 운영 위탁

추진전략 2. 여성 임파워먼트

- 행정, 공공,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 추진으로 남녀동수 참여실현
- 여성 관리자 육성 및 정책참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수립 및 시행
- 여성농업인 경영지위 향상, 이주여성 정책과정 참여확대, 장애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강화

1)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추진과제	세부과제
2-1 남녀동수 참여 실현	2-1-1. 여성 참여비율 제고
	2-1-2. 여성 참여역량 강화
2-2 여성농업인·이주여성·장애여성 임파워먼트	2-2-1. 여성농업인의 경영지위 향상
	2-2-2. 이주여성의 정책참여 활성화
	2-2-3. 장애여성의 사회참여 역량 강화

2-1 남녀동수 참여 실현

2-1-1. 여성 참여 비율 제고

① 공공부문 관리직 성별비율 형평성 제고 **【핵심】**

- ▶ 5급(상당) 이상 공무원 성별비율 관리 및 이행점검
 - 공무원 인사제도 성인지적 분석 및 개선계획 수립
 - 5급(상당)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및 육성계획 수립, 이행점검
 - 기획-인사-감사-예산 등 주요부서 우수 여성공무원 전략적 배치
- ▶ 공공기관(출연기관 등) 관리직 성별비율 관리 및 이행점검
 - 공공기관 인사제도 성인지적 분석 및 개선계획 수립
 - 매년 공공기관 여성 대표성 부문 성별통계 생성 및 공시를 통한 자발적 개선 유도
 - 최고직 성별현황, 고위직(임원) 성별 현황, 관리직 성별 현황, 주요 위원회 성별 현황
 - 공공기관 대표성 부문 성별 균형성 확보실적 경영평가에 반영

② 민간부문 관리직 성별비율 조사 및 공시

- ▶ 민간기업 관리직 성별통계 생산, 공시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 충남형 고용평등 지표 개발(여성 대표성 부문 포함), 현황조사 및 공시(연1회)
 - 최고직 성별현황, 고위직(임원) 성별 현황, 관리직 성별 현황
 - 충남형 고용평등 우수기업 지정, 인센티브 제공

③ 민관협치기구 성별비율 관리 및 이행점검

- ▷ 민관협치기구 위촉직 여성비율 확대
 - 매년 민관협치기구 성별통계 생성 및 이행점검
 - 대상: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도민이 참여하는 모든 협치기구
 - ※ [특별] 성별 비율, 장애여성, 이주여성 참여비율 별도 표기
- ▷ 도 소관 위원회 관련 조례 전반적 검토 및 개정
 - 위촉직 위원 비율 적정성 및 자격기준 개정을 통하여 여성참여 확대 법적 기반 조성
- ▷ 여성농업인 참여비율 특별관리 지표
 - 정책과정: 농업회의소, 농협임원, 3농혁신 등 농정관련 위원회
 - 지역개발: 마을개발위원회, 마을이장
 - 경영지위: 여성 공동경영주, 후계농업경영인
 - 3농혁신 5개분야 사업(생산혁신, 유통혁신, 소비혁신, 지역혁신, 역량혁신)

2-1-2. 여성 참여역량 강화

① 여성 관리자 성평등 리더십 교육체계 수립·운영

- ▷ 공무원/공공기관/민간기업 여성 관리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 분야별 여성 관리직 성평등 리더십 함양
 - 관리직 후보 육성, 여성 관리자 선후배 멘토링
 - 여성 관리자 네트워크 조성사업

② 여성 정책참여역량 강화 교육체계 수립·운영

- ▷ 여성 성평등 정책 참여 리더십 교육 활성화
 - 분야별 여성리더교육, 여성풀뿌리자치학교
 - ※ [특별] 장애여성, 이주여성, 여성농업인
 - 차세대여성리더학교(대학과 연계한 장기교육 운영)
- ▷ 여성 농업인 농업경영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
 - 다양한 6차산업 · 농업기술전문과정의 개발과 여성 참여 확대
 - 귀농귀촌 이주 여성의 농업 경영전문능력 개발 지원
 - 후계 여성 농업 경영인 육성
 - 여성 농업인 전문 인력 DB 구축

2-2-1. 여성농업인의 경영지위 향상

①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대 **【핵심】**

- ▷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조례의 정비
 - 「충남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에 공동경영주 제도에 대한 내용 보완
- ▷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등록 제도의 홍보강화
 - 공동경영주등록에 대한 안내 팸플렛 및 신청서 양식의 배포 및 배치
 - 공동 경영주 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교육
- ▷ 부부농가 공동 협약 추진 확대
 - 부부(가족)농가 공동협약을 위한 워크숍 실시
 - 부부(가족)농가 공동협약 추진 지원
- ▷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관리 및 이행 점검
 - 공동경영주 등록 현황에 대한 관리 및 이행 점검
 - 부부농가 공동협약에 대한 관리 및 이행 점검

②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여건 개선

- ▷ 여성 소농·고령농의 농산물 판로 지원
- ▷ 발작물 직불제 지급 기준의 현실화
- ▷ 소형 농기계 및 편의 장비 개발 및 보급 확대
 - 농작업 편의장비 개발 아이디어 경진대회
- ▷ 농업인력지원 بانک 운영

③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지원 시스템 강화

- ▷ 농업경영 기술 상담 지원 확대
- ▷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법적 기반 포함)
- ▷ 여성 농업인 정책 추진 전담인력 배치
- ▷ 여성 농업인 비전 리더 양성과정 운영

2-2-2. 이주여성의 정책참여 활성화

① 이주여성의 정책 파트너 위상 강화

- ▷ 충남 이주민(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설치 및 운영
 - 추진단 구성(전문가, 관계자, 당사자 등으로 구성)
 - 성별, 유형(결혼, 노동, 유학 등), 출신국가, 종교, 거주기간 등 고려
 - 이주민 당사자 대표자 공개 모집·선발
 - 국제 이주민 통합 지표(MIPEX) 지방정부 이주민자문기구 국제기준 충족
 - 정기적 대표자회의 개최, 정책자문과 환류 등 도정 파트너로 인정

2-2-3. 장애여성의 사회참여역량 향상

① 장애여성 학력수준 향상

- ▷ 장애여성 검정고시반 운영
 - 학업수행이 가능한 젊은 장애여성을 중심으로 적극적 조치
 - 평생교육원 등 접근성 용이한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 동료상담가 지원
 - 동료상담가를 통한 자존감 향상 지원 병행
 - 도 장애인복지과 동료상담가 양성 인력 확대

② 장애여성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 지원

- ▷ 장애여성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 개설 및 운영
 - 장애유형·등급 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도 장애인복지과의 '여성장애인 역량교육강화 사업'을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연계 고려
 - 장애여성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 도 평생학습체계에 장애여성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 개설 및 운영

③ 장애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

- ▷ 장애여성 교육 바우처 도입
 - 장애여성의 교육선택권 강화
 - 장애여성이 원하는 교육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장애여성의 사회참여 장애요인 완화
 - 교육 참여 장애여성이 아이돌봄, 이동권 확보, 동료상담가 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범위 확대
- ▷ 장애여성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

2) 주요지표

주요지표	현재	2020	2025	2030
의사결정분야 지역성평등지수 ¹⁾	14.4	20.0	30.0	40.0
도·시군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²⁾	24.6%	40%	45%	50%

1) 의사결정분야 지역성평등지수: '14년 충남 14.4(14위), 전국평균 22.9, 전국1위 39.8(자료: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 도·시군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15년 충남 24.6%(14위), 전국평균 30%, 전국1위 39.2%(자료: 여성가족부, 2016, 201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조사결과)

3) 추진과제의 단계별 추진 개요

전략	단기(~2020)	중기(2021~2025)	장기(2026~2030)
여성 임파워먼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참여비율 제고 자발적 참여 유도 ▶ 5급이상 공무원/공공기관 관리직 성별비율 관리-이행점검 ▶ 민간기업 관리직 성별통계 생산 및 공시 ▶ 민관협치기구 여성참여 법적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참여비율 제고 평가 반영 ▶ 5급이상 공무원/공공기관 관리직 성별비율 관리-이행점검, 경영평가 반영(공공기관) ▶ 충남형 고용평등우수기업 시상 ▶ 민관협치기구 여성참여비율 지속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동수 참여 전국 상위수준 실현 ■ 여성 참여비율 이행현황 지속점검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참여역량 강화 ▶ 여성관리자 성평등리더십 교육체계 수립·운영 ▶ 여성 정책참여역량 강화 교육체계 수립·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참여역량 강화 지속 ▶ 여성 관리자 성평등리더십 교육 지속 ▶ 여성 관리자 네트워크 조성사업 ▶ 여성 정책참여역량 강화 교육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참여역량 강화 확대 ▶ 여성 관리자 성평등리더십 교육 확대 ▶ 여성 관리자 네트워크 조성사업 지속 ▶ 여성 정책참여역량 강화 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농업인의 경영 지위 향상 ▶ 여성 농업인의 농업 경영체 등록 확대 ▶ 여성 농업인의 경영여건 개선 ▶ 여성 농업인 전문 인력 DB 구축 ■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지원 시스템 강화 ▶ 소규모 식품·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 여성 농업인 비전 리더 양성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농업인의 지역사회 참여 환경 조성 ▶ 농촌지역 시민사회 육성 ▶ 농업회의소 여성참여확대 ▶ 여성 농업인 전문 인력 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농업인 리더 역량 강화 ▶ 여성 농업인 전문 인력 DB 완료 ▶ 여성 농업인 주요의사결정 과정 참여 성별 형평성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이주민대표자회의 설치 ▶ 추진단 구성 ▶ 대표자 선발(이주여성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구성 확대(이주여성 15명) ▶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참여 정책 발전 ▶ 이주민 인권존중사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여성의 학력수준 향상 ▶ 성별·장애수준별·학력별 충남통계자료 구축을 통한 교육수요 및 지역 인프라 파악 ■ 장애여성 맞춤형 자격증 취득 지원 ▶ 장애유형 및 등급별 교육과정 개발→시범교육 실시 ■ 교육바우처 도입 ▶ 교육바우처 제공을 위한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여성의 학력수준 향상 ▶ 장애여성 고졸 비율 지속 관리 ▶ 검정고시과정 개설 및 운영 ■ 장애여성 맞춤형 자격증 취득 지원 ▶ 교육과정 확대 ■ 교육바우처 지급 확대 ▶ 저소득 장애여성부터 순차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여성의 학력수준 향상 ▶ 검정고시과정 지속·장애여성 고졸을 장애남성과 같은 수준으로 향상 ■ 장애여성 맞춤형 자격증 취득 지원 ▶ 교육과정 지속 ■ 교육바우처 지급 확대 ▶ 교육참여율 100% 지원

추진전략 3. 돌봄의 공공성 강화

- 지역 간 돌봄격차 해소와 공공 인프라 확대를 통한 돌봄 공공성 확립
- 안심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아동 양육지원 체계 강화

1)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추진과제	세부과제
3-1 노인 돌봄 공공성 확립	3-1-1.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3-1-2. 공동체 돌봄 확대
	3-1-3. 노인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대
3-2 아동 양육지원정책 확대	3-2-1. 수요자 중심 아이돌봄 지원 체계 강화
	3-2-2. 아동 돌봄 네트워크 구축
	3-2-3. 총남형 공공 어린이집 인프라 확대

3-1 노인 돌봄 공공성 확립

3-1-1.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① 도시-농촌 간 돌봄 격차 해소

- ▷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공급의 양적 및 질적 확대
 - 돌봄 서비스 인력의 교육 및 품질 관리 (농촌지역 돌봄 인력 처우개선비 지원)
 -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지역의 이동지원서비스(택시비지원, 대상자통합콜택시 운영 등)
- ▷ 지역 단위 돌봄 서비스(등급 외 농촌노인 포함)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지역 케어(마을단위 혹은 생활권 단위)시스템 구축
 - 돌봄 서비스 수요와 공급 관리·감독

② 지역 내 돌봄 접근성 확대

- ▷ 보건소, 병원,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농촌 농업노인) 확대
- ▷ 스마트 노인 돌봄 시스템 구축

3-1-2. 공동체 돌봄 확대

① 따로 그리고 같이 사업

- ▷ 충남형 노인공동주거 모델
 - 보급형 실버타운 개발·확산주택
 - * 개인의 사생활 보호되는 원룸, 아파트 형태

②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도 확대 【핵심】

- ▷ 마을회관, 경로당, 빈집 등을 활용하여 독거노인이 공동생활 함으로서 안전도모 및 자살예방을 지원할 수 있음. 장기적으로 빈곤노인뿐만 아니라 빈곤하지 않은 노인까지 안전 및 고독사를 예방지원 확대하여 충남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지 위한 전략으로 전환
 - 자연부락 단위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등을 개보수
 - 독거노인의 공동취사숙박지원으로 고독사 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
 - 공동생활에서 사생활 보호되도록 환경개선
 - 2015년 31개소(225명)에서 2020년(41개소), 2025년(52개소), 2030년(60개소) 확대

③ 성별 특성을 고려한 여가프로그램 확대

- ▷ 노인의 건강, 성별,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한 다양한 노인여가 교육도구 보급
- ▷ 노인전문 프로그램(건강, 취미, 운동놀이 등) 전문 강사 파견

3-1-3. 노인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대

① 공공형 노인요양기관 확대를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

- ▷ 충남형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노인 돌봄 모델 개발 및 확산

3-2

아동 양육지원정책 확대

3-2-1. 수요자 중심 아이돌봄 지원 체계 강화

① 보육(육아)품앗이, 공동육아 나눔터 등 모델 개발 및 확산

- ▷ 마을단위 지역공동체를 통한 돌봄 모델 개발 및 확산
 - (세대 간 통합모델) 어르신 육아도우미 활용모델
 - 육아도우미(틈새시간 2~3시간 지원) 일정교육(아동학대 등 교육) 이수 후 활동(육아도우미 교육은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이수과정 참조)

② 아이 돌봄 공백(틈새)시간 지원체계 확대

- ▶ 돌봄 및 맞벌이 부부(20~30대층)의 틈새시간 지원서비스 확대
 -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활용(야간, 주말, 휴일 등에 교사 4인이 교대로 근무하며 휴일 보육서비스 제공)
 - 아이 돌봄 사회적 기업(시군 협조로 돌봄 공간 제공하면 사회적 기업이 공간 리모델링 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예. 내 품에 아동쉼터_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 여성농업인 농번기 주말 돌봄방 확대

③ 총남형 아동수당 신설

- ▶ 아동의 양육에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가 없도록 지원하는 아동인권정책인 아동수당 신설 (아동의 양육의 사회적 분담 차원)
 - 1안 : 소득에 무관하게 만5세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현금 지급(기존 보육제도 유지)
 - 2안 : 일정소득 기준이하 가구의 두 번째 아동부터 아동(만5세이하)에게 바우처 형태(만0~2세 월 10만원, 만3~5세 20만원)로 지원
 - * 현재, 전 세계 90여개(2010) 국가에서 아동수당 도입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35개) 중 아동수당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 미국, 터키, 멕시코.
 - * 참조 : 스웨덴은 16세까지 매월 117유로(약145,080원) 아동수당 지급. 16세에서 18세까지 117 유로를 학생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제공)

3-2-2. 아동 돌봄 네트워크 구축

① 총남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연계 및 협력

- ▶ 총남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영유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 유사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조직 등) 간 연계 및 부모지원 기능 강화
 - 도, 지자체, 관련 기관 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기능 및 역할 중복 조정

② 방과 후 초등 돌봄 네트워크 강화

- ▶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연계 및 협력 확대
 - 방과 후 초등 돌봄 이용자격(지역아동센터) 완화 (맞벌이, 귀농인 등)
 - 도, 지자체, 관련 기관 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기능 및 역할 중복 조정

3-2-3. 총남형 공공 어린이집 인프라 확대

①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핵심】

- ▶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통하여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보육의 공공

성 확대를 통한 일과생활의 조화여건 마련

- 평가인증 후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인건비 지원)
- * 공공형 어린이집 : 정부에서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1년 7월부터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② 신규 아파트(300세대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유도·확충

-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설신축(개소당5억원), 리모델링(5천만원, 시설매입전환(5억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군 수요조사(분기별), 2016(76개소)

③ 산단형 직장어린이집 확충

- ▷ 충남도 산단형(지자체 협업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확충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여성 및 근로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 해소 및 설치비 지원 확대로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단지에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주단체 등에게 시설 건립비 및 시설전환비, 교재교구비 등 지원
-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국비 공모사업 2개소 유치(2016) → 장기목표(2030년)
: 산단형 등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20개소 이상 설치

2) 주요지표

주요지표	2020	2025	2030
공공형 어린이집 비율 (공공형어린이집개소 수/전체어린이집개소 수)	7% (138개소)	10% (197개소)	12% (243개소)
충남형 아동수당 지원율	준비	90%	95%

* 공공형 어린이집(2016년 12월 기준) 105개/전체어린이집 1,969개 (5.4%) / 공공형어린이집홈페이지 (<https://www.kcpi.or.kr/thebcc/main/>)(2016. 10월말 기준 전국 6위, 전국1위(27.2%))

* 아동수당 : 소득에 무관하게 만5세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현금을 지급(기존제도 보육제도 유지)

3) 추진과제의 단계별 추진 개요

전략	단기(~2020)	중기(2021~2025)	장기(2026~2030)	
3. 돌봄의 공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농촌 간 돌봄 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서비스 인력의 교육 및 품질 관리 -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지역의 이동 지원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농촌 간 돌봄 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단위 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돌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도 지원 ▶ 성별 특성을 고려한 여가프로그램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로 그리고 같이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도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형 사회적 경제 노인 돌봄 모델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형 사회적 경제 노인 돌봄 모델 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중심 아이돌봄 지원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 돌봄 공백(틈새)시간 지원체계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육아)품앗이, 공동육아 나눔터 등 모델 개발 ▶ 아이 돌봄 공백(틈새)시간 지원체계 확대 ▶ 충남형 아동수당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돌봄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연계 ▶ 방과 후 초등 돌봄 네트워크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 방과 후 초등 돌봄 네트워크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형 공공 어린이집 인프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 신규 아파트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유도·확충 ▶ 산단형 직장어린이집 확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 신규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유도·확충 ▶ 산단형 직장어린이집 확충 	⇨

추진전략 4. 일과 생활의 균형

- 도민 모두가 자기 돌봄 뿐 아니라 가족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는 돌봄 사회 기반 마련
- 여성 근로자가 가족 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평등한 노동 환경 조성
- 가족 내 성평등한 역할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불일치를 개선할 수 있는 성평등 가족문화 실현

1)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추진과제	세부과제
4-1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4-1-1. 자기 돌봄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
4-2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4-2-1. 고용의 지속성 강화
4-3 성평등한 가족생활 조성	4-3-1. 성평등 가족문화 실현

4-1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4-1-1. 자기 돌봄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

- ① 자기 돌봄을 위한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 ▷ 쉼과 네트워크 형성의 복합기능 공간 설치 및 운영
 - 공공기관이나 지역 내 유휴 공간 활용·설치
 -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 설치 시범 사례 선정 후 모델 확대
 - 지역구성원의 공동 작업을 통한 공간 조성
 - 전문가 및 민간 주체 참여형 워크숍을 통한 지역별 컨셉 및 기획 추진
 - ▷ 다양한 정서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
 - 자기돌봄과 쉼을 주제로 하는 소모임 활동 지원 및 공간 제공
 - 프로그램 설계 지원 및 운영 관련 전문 인력 파견
 - 소모임 활동 공모를 통한 활성화비 지급
 - 평생교육기관 및 담당부서 연계
- ② 가족 돌봄자의 자기 돌봄권 보장
 - ▷ 타인 돌봄의 일상에서 벗어나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및 기회 제공
 - 재가 중증 환자 및 장애인 가족돌봄자 신청 자격 부여, 바우처 제공
 - 신청자 대상 문화·여가활동 및 상담 기회 제공

- 평생교육원, 문화원, 상담소, 공공스포츠시설 등과 연계
- ▷ 돌봄 대체 인력 제공
 - 돌봄 대체 인력뱅크 설치 및 운영
 - 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과 연계
 - 장기 가족돌봄자 대상 월 1회 대체인력 파견
 - 군 단위 실시 → 시 단위로 확대

4-2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4-2-1. 고용의 지속성 강화

① 가족친화경영 확산

- ▷ 가족친화기업 인센티브 확대
 -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가점부여,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할인, 근로자 복지 확대 등
- ▷ 중소기업 조직문화 혁신 코칭

② 남녀가 평등한 기업문화 확산

- ▷ 충남도 일가양득 캠페인 실시

③ 일·생활 균형 지원 인프라 확대

- ▷ 직장맘·직장대디센터 확대 : 찾아가는 고충상담, 커뮤니티 지원 등
- ▷ 산단형 공동어린이집 확대 : 설치비·운영비 지원(근로복지공단 수탁 시행)
- ▷ 일·생활 정보제공 서비스 확대 : 일·생활 근로복지 정보 앱(App) 개발·보급
 - 구인·구직 정보, 취업지원기관 링크 제공, 육아·보육정보, 정책사업, 생애건강정보 등

4-3

성평등 가족생활 조성

4-3-1. 성평등한 가족문화 실현

① 성평등 가족문화 인식 확산

- ▷ 성평등 가족문화 콘텐츠 생산 및 보급

- 성평등 가족 문화 콘텐츠 생산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 강의안 등 콘텐츠 생산
 - 학교 및 상담소, 협회, 평생교육기관 등에 강의안 제공
 - UCC, 슬로건, 포어 등 공모전을 통한 홍보 및 캠페인
 - 공공 홍보·인쇄물에 활용
- ▷ ‘성평등 충남 가족이야기’애니메이션 시리즈 제작·보급
- 가족 내 성평등 실천 사례 공모
 - 우수사례 콘텐츠화 → 도청 홈페이지, 도정신문 등에 연재
 - 수상작 초·중·고등학교 대상 시청각 교육 자료로 보급
 - 지역 청년 문화콘텐츠 인력 활용·제작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연계

② 성평등 가족문화 확산의 남성참여 확대 **【핵심】**

- ▷ 자녀출산 아버지 교육 이수자 출산장려금 지급 시 인센티브 지급
- 출산 (전)후 아버지 교육 이수자 인센티브 지급
 - 각 지자체별로 지급되는 출산장려금 지급금액의 10% 인센티브 제공
 - 단기적으로 (현)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 강의 수수료 인증서 발급
 - 의료원, 보건소,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등 출산 관련 기관으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
- ▷ 성평등 교육 이수의 직장 내 교육·훈련 의무 시간 인정
- 가족친화인증기관 시범실시 추진
 - 가족친화인증 공공기관 우선 실시, 점차 민간으로 확대
 - 도입기업 가족친화 경영 우수사례 선정 추진
 - 도내 기업 대상 홍보 및 참여 확대 추진
 - 기업의 사내 연수원 등 교육·훈련 기관 및 교육·훈련 위탁 전문 기관 연계
 - 강의 개설 및 강사 지원

2) 주요지표

주요지표	현재	2020	2025	2030
가족친화기업(기관) 수	59개소	120개소	135개소	150개소
가사노동 공평한 분담비율	19.6%	25%	50%	75%

주1 : 가족친화인증기업('15년) 59개소('20년 충남도 목표: 120개소), 도내 사업체 0.1%('14년 도내 사업체 수: 150천개)

'16년 신규인증기업(기관) 수 : 충남 전국 4위(33개 업체) / 전국 1위(132개 업체)

주2 : 공평한 가사노동분담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비율 전국평균 16.2%

3) 추진과제의 단계별 추진 개요

전략	단기(~2020)	중기(2021~2025)	장기(2026~2030)
일과 생활의 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돌봄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돌봄을 위한 휴식 및 소통 공간 (시범) 설치 ▶ 가족돌봄자의 자기돌봄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자 문화·여가 활동 및 상담 바우처 제공 ● 돌봄 대체 인력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돌봄을 위한 휴식 및 소통 공간 확대 ▶ 가족돌봄자 문화·여가 활동 및 상담 바우처 제공 확대 ▶ 돌봄 대체 인력 파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돌봄을 위한 휴식 및 소통 공간 확대 (지속) ▶ 가족돌봄자 문화·여가 활동 및 상담 바우처 제공 확대 (지속) ▶ 돌봄 대체인력 파견(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의 지속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경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 확대 ▶ 남녀가 평등한 기업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 일가양득 캠페인 실시 ● 고용지원사업 참여교육 성평등 노동교육 ▶ 일·생활 균형 지원 인프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맘·직장대디센터 확대 ● 일·생활 정보제공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경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 확대 ▶ 남녀가 평등한 기업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 일가양득 캠페인 확대 ● 고용지원사업 참여교육 성평등 노동교육 ● 직장맘·직장대디센터 확대 ● 일·생활 정보제공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경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기업 및 지원 확대 ▶ 남녀가 평등한 기업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 일가양득 캠페인 지속 ● 고용지원사업 참여교육 성평등 노동교육 ● 직장맘·직장대디센터 확대 ● 일·생활 정보제공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가족문화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가족문화 콘텐츠 생산 및 보급 ▶ 성평등 충남 가족이야기 애니메이션 시리즈 제작·보급 ▶ 성평등 가족 문화 확산의 남성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교육 이수자 직장 내 교육훈련 의무 시간 인정 (가족친화인증기관 시범실시) ● 아버지교육이수자 출산장려금 인센티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교육 직장 내 교육훈련 의무 시간 인정(확대) ▶ 아버지교육 이수자 출산장려금 인센티브 지급(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교육 직장 내 교육훈련 의무 시간 인정(지속) ▶ 아버지교육 이수자 출산장려금 인센티브 지급(지속)

추진전략 5. 가족의 다양성 인정과 지원

- 혼인과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문화로부터, 개인의 선택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가족의 포용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 가족환경 변화에 따르는 다양한 가족의 정책적 고려
- 지역자원과의 다양한 가족과의 연계·협력 지원망 강화

1)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추진과제	세부과제
5-1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수용성 증진	5-1-1. 다양한 가족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
	5-1-2. 다양한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5-2 가족 지원 기반강화	5-2-1. 가족환경 변화에 따르는 정책개선
	5-2-2. 가족지원 정책 주요 전달체계 개선

5-1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수용성 증진

5-1-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① 가족의 다양성 존중과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 ▶ 가족의 다양성 이해 교육 실시
 - 가족·인권·젠더 분야 전문가 참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 가족 관련 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에 활용
 - 관련 기관 사업수행자 대상 직무기초/심화 의무 교육과정에 포함
 - 국공립 어린이집, 초중고 각 급 학교 다양한 가족의 이해 의무교육 확대

② 다양한 가족의 정책욕구 반영

- ▶ ‘충남가족실태조사’ 실시 (격년)
 - 다양한 가족 관련 지표 발굴 및 ‘사회지표조사’연계
 - 가족의 변화 관련 이슈별 지표 발굴 및 통계 생산
 - 분석결과 활용을 통한 정책적 수요 예측 및 반영
- ▶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충남 가족 이야기’(격년)

- 가족 관련 통계의 인포그래픽 생산·보급
-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도정 신문 등 각종 공공 인쇄홍보물 콘텐츠로 제공
- 가족의 변화에 따르는 가족구성원들의 의식 및 역할 변화 유도

5-1-2. 다양한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①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정보망 확대

- ▶ 다양한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정보 확산
 - 지역별 맘카페 등 파워 커뮤니티 운영자 서포터즈 위촉
 - 다양한 가족 지원 정보 서비스 제공 활동 협약
- ▶ 다양한 가족 대상 지원 정책 정보 서비스 제공 앱(App) 개발·보급
 - 여성가족부, '일가족 톡톡'과 연계 또는 충남형 앱(App) 개발

5-2

가족 지원 기반 강화

5-2-1. 가족환경 변화에 따르는 정책 개선

① 총괄적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가족 전담부서 기능 확대

- ▶ 여성가족정책관실 내 가족지원팀의 업무 확대
 - 취약가족, 가족친화, 일·생활양립 등 현재 타 부서 관련 업무 통합
 - 장기적으로 가족정책 전담부서(과)의 신설

5-2-2 가족지원 정책 주요 전달체계 개선

① 충남형 가족지원 기관 모델 개발

- ▶ 충남형 가족지원 기관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
 - 시군·권역별 가족 특성 및 정책수요 분석
 - 다양한 가족 관련 지표의 지역별 교차 분석
 - 시군·권역별 가족지원 중점 분야 발굴
- ▶ 지역별 정책수요에 적합한 전문화 방향 및 운영모델 모색

② 가족지원 기관의 특성화 및 중점기능 수행 **【핵심】**

- ▷ TFT 구성을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별 특성화 사업 필요성 도출 및 지원 방안 모색
 -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의 지역별 이용자 특성 및 정책욕구 파악
 - 특성화 사업의 내용, 사업별 달성 목표와 방향, 운영방식, 성과 기준 마련
- ▷ 각 지역별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의 특성화 및 중점사업 기관으로의 기능 확대
 - 동일대상 사업에 대한 중복성 검토 및 조정
 - 센터별 다양한 가족의 현황과 정책욕구 반영하여 특성화 사업 선정 추진
 - 센터별 특성화 분야 선정 과정에 전문가 컨설팅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조손가족지원, 1인가구지원, 재혼가족지원, 노년기(어르신)가족지원, 비혼(동거)가족지원 등 지역별 수요가 높은 분야 특성화 사업 추진 유도
 - 특성화 사업별 중점 기능 수행 센터 선정
 - 특성화 사업별 리더 전문화 및 역량 강화 교육

2) 주요지표

주요지표	현재	2020	2025	2030
가족 구성방식 수용도 ¹⁾	36.6%	40%	50%	60%
가족 구성방식 수용도 ²⁾	50%	55%	60%	70%

* 가족구성방식 수용도¹⁾ : 통계청, 『사회조사』 ('16) 5개 문항(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같이 살 수 있다,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재혼에 대한 견해, 입양에 대한 견해)의 긍정응답 평균치. 16년 전국 1위는 43.9%

** 가족구성방식 수용도²⁾ : 전국조사('11)

3) 추진과제의 단계별 추진 개요

전략	단기(~2020)	중기(2021~2025)	장기(2026~2030)
<p>가족의 다양성 인정과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인식 개선 ● 다양성 존중과 편견 해소 교육 ● 교육프로그램 개발 ▶ “충남가족실태조사” 및 ‘통계로 보는 충남 가족 이야기’ 3년 주기 생산 (지속) ● 공공인쇄홍보물 콘텐츠화 ▶ 다양한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다양한 가족 권리 홍보 캠페인 확산 ● 가족 간 경계를 넘는 지역 사회 정보망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성 존중과 편견 해소 교육(확대) ● 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 어린이집, 각급 학교 의무교육 확대 ▶ “충남가족실태조사” 및 ‘통계로 보는 충남 가족 이야기’ 3년주기 생산 (지속) ▶ 다양한 가족 권리 홍보 캠페인(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성 존중과 편견 해소 교육(지속) ● 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 어린이집, 각 급 학교 의무교육 확대 ▶ 다양한 가족 권리 홍보 캠페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지원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환경 변화에 따르는 가족정책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전담 부서 설치 ● 사례관리 실무협의체 운영 ● 네트워킹 강화 ▶ 가족지원 정책 주요 전달 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형 가족지원 기관 모델개발 연구 ● 가족지원 기관의 특성화 모색 ● 헨건강가정지원센터 특화(중점) 사업 기관으로의 기능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전담 부서 기능 확대 ▶ 다양한 가족의 취약위기 사례 발굴 및 관리 (지속) ▶ 법률, 의료, 복지서비스 등 지역자원의 개별 가족과의 연계·협력 지원망 구축 ▶ 특성화·전문화 가족 기관으로의 기능전환(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가족의 취약위기 사례 발굴 및 관리 (지속) ▶ 지역자원의 개별 가족과의 연계·협력망 활성화 ▶ 시군별 특성화·전문화 가족지원 기관 기능 전환 (완료)

추진전략 6. 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 지역여성 주체의 여성 문화자원 발굴 및 성평등 문화생태 네트워크 구축
- 성평등 교육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한 도민의 성평등 의식 강화
-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1)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추진과제	세부과제
6-1 성평등 문화생태 네트워크 구축	6-1-1. 지역 여성 문화자원 발굴
	6-1-2. 성평등 문화 마을 인큐베이팅
6-2 도민의 성평등 의식 강화	6-2-1. 생애주기별 양성평등 교육
	6-2-2. 성평등 콘텐츠 및 활용능력 확대

6-1

성평등 문화생태 네트워크 구축

6-1-1. 지역 여성 문화자원 발굴

① 여성 문화자원 발굴 네트워크

▷ 여성 문화자원 발굴 기획단 구성 및 운영

- 여성 문화자원 발굴
 - 여성 문화전문가(문화기획자), 여성 문화운동단체 활동가, 문화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등 유관기관 종사자로 구성된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 기획단에서 발굴한 자원은 전시, 출판, 문화예술 창작 공모 등과 연계 생산
- 여성 문화자원 발굴 네트워크 활동
 - 역사, 문화예술, 관련 산업 분야 전문가들의 연계, 상호 교류
 - 분야별 자료 수집 및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
 - 충남 여성 관련 역사, 생활문화의 자원화 가능성 탐색 및 발굴

② 여성 문화자원의 콘텐츠화 【핵심】

▷ 충남 대표하는 여성문화 콘텐츠 개발

- 여성 문화자원의 원형 발굴 및 개발
 - 역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콘텐츠로 활용

- 관광 및 여가 프로그램과 연계
 -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체험관광(먹거리 상품, 걷기 좋은 길 조성 등) 프로그램
- 충남 여성의 삶과 문화유산 가치의 브랜드화
 - 상징물 개발, 디자인 등 고유 상품화

▷ 충남 여성사 발간

- 충남 여성인물 발굴 및 여성의 삶에 대한 스토리텔링
 - 분야별, 시기별 충남 여성 인물사의 시리즈 발간
 - 발간 자료는 충남학 관련 사업의 콘텐츠, 여성 문화 관련 사업의 콘텐츠로 활용
- 여성 문화자원 발굴 네트워크와 연계 추진(18년~)
- 충남 여성사 발간(17년~)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사업 수행과 연계

③ 충남여성문화 정보공유창고(아카이브) 구축

▷ 충남여성 문화 아카이브 코너 신설

- 충남의 여성 인물, 문화를 스토리와 연계
 - 충남여성문화인물 및 생애 구술사 등 수록
 - 문화예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자 및 강사, 문화행정가, 문화예술 활동가 등 인물 확보, DB화
 - 충남의 숨은 역사문화 유산과 가치 향유하고 브랜드화

6-1-2. 성평등 문화 마을 인큐베이팅

① 여성 동네문화기획자 양성

▷ 여성 동네문화기획자 양성 (17년~)

- 여성주의 관점에서 지역 여성들이 마을의 공연예술, 마을축제, 전시 기획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문화인력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성
 - 집합 강의 및 워크숍, 현장 학습 프로그램 포함
- 기존 문화기획자 양성 사업과 연계
 - 문화기획 양성 프로그램에 성인지 관점의 문화 활동 내용 포함
 - 여성 주도 문화기획 및 활동 국내외 사례 소개
 - 충남문화재단의 문화기획 양성 관련 사업과 연계 추진

▷ 농촌 여성노인 페미니즘 문화기획단 (20년~)

- 농촌 할머니 페미니즘 문화기획단 양성
 - 농촌지역 여성노인들이 주체가 되어 여성주의 관점에서 마을단위의 문화기획과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 공모방식으로 여성노인 중심의 여성주의 문화기획단 사업 추진

② 여성문화인력 네트워크

▷ 여성 문화인력 인프라 구축

- 여성 문화인력 확보 및 DB화
 - 문화예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자 및 강사, 문화행정가, 문화예술 활동가 등 여성문화인력 풀 확보해 DB화
 - 여성 문화기획자들을 활용한 문화인력 인프라 구축

③ 마을단위 소규모 문화창작 공간(사랑방) 확대

▷ 여성들의 문화창작 공간에서의 문화창작, 활동 활성화

- 마을별 문화창작 공간(사랑방) 마련
 - 마을회관, 경로당, 폐교 등 활용방안 모색
 - 각 시군의 생활문화센터, 유희공간 조성사업 등과 연계 활용
 - 여성들이 소규모로 모여 문화창작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 플랫폼으로 조성

6-2

도민의 성평등 의식 강화

6-2-1. 생애주기별 성평등 교육

① 성평등 교육 추진체계 구축

▷ 성평등 교육 추진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성평등 교육 관련 기관들의 실무협의체 운영
 - 여성가족정책관실 주관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운영
- 연도별 성평등 교육의 시행계획 수립
- 성평등 교육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 성평등 교육 강사 양성 및 인력풀 구성

- 성평등 교육 강사 양성
 - 교육 수료 후 강사인증제도 운영
 - 강사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매년 보수교육 실시
-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
 - 성평등 교육 추진 단체·기관에 강사인력풀 정보 제공
 - 강사인증, 인력풀 구성, 관리 : 여성가족정책관실

② 성평등 교육 확대 **【핵심】**

▷ 대상별 교육 추진

- 학교, 공공기관, 기업 등 교육
 - 각급 학교, 도내 공공기관, 기업체 등 교육 확대
 - 공무원, 교사 대상 교육 확대
- 주민대상 서비스 지원 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확대
 - 사회복지기관, 민간단체 등
- 주민대표 조직 대상 성평등 교육
 -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대표조직의 자체 연수 프로그램과 연계
- 농어촌 마을 단위 성평등 교육
 - 주민대상 찾아가는 방문 성평등 교육

▷ 교재 개발

- 초등학교(저학년-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용(청년 및 중년/노년) 교육 콘텐츠 (PPT 자료) 제작
- 강의 교안 및 가이드라인 제작
- 교육자료 개발 전문가그룹 구성
 - 성평등 연구 및 교육 전문가, 초등교사, 중등교사 등

▷ 평가 및 분석

- 교육결과 평가(만족도) 분석 및 평가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 교육청, 경찰청과 성평등 교육 관련 업무협약체결
 - 교육청, 경찰청 등 기관의 성평등 교육 계획 수립과 추진
 - 각급학교 학생 교육 및 교사연수의 강사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 강사비 등 교육운영 예산은 교육운영 기관에서 부담
 - 교육청, 경찰청, 민간기업, 민간단체 등
 - 농어촌 마을단위 성평등 교육은 도에서 부담

6-2-2. 성평등 콘텐츠 및 활용능력 확대

① 평생교육 성평등 콘텐츠 활용 및 확대

▷ 평생교육 성평등 콘텐츠 활용 및 확산

- 지역 평생학습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성평등 교육과정 운영
- 관련 기관과 협약체결 및 실무협의체 운영

- 충남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 협력 추진
- 도 성평등교육 추진 체계에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참여
- 평생교육진흥원 주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성평등 교육 내용 포함
- 평생학습기관의 평생학습 콘텐츠 재구조화
 - 프로그램의 성인지성 제고 및 진단지표 개발, 점검

②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 및 콘텐츠 공모전

- ▷ 충남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단(가칭) 구성·운영
 - 시군 공모를 통해 충남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단 구성
 - 시군 여성정책 부서와 협력, 연계 추진
 - 도청 및 시군청에서 제작, 생산한 미디어 텍스트(신문, 홍보물, 영상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의견 제시
- ▷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 성평등 문화 및 의식 확산을 위한 콘텐츠 공모
 - 성평등을 주제로 한 UCC 등 공모 및 우수작 선정
 - 도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홍보, 도의 각종 행사, 성평등 교육에 시연, 활용
 -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연계 추진

③ 시니어 성평등 미디어 인큐베이팅

- ▷ 성평등 관점에서의 시니어 미디어 활동 지원 (25년~)
 - 미디어를 통한 실버 세대와 젊은 세대 간 소통 확대
 - 노인 영상 미디어 문화예술교육, 영화 읽기 프로그램, 스마트폰 교육, 신문 읽기, 영상촬영 편집, 광고의 이해 등 미디어 교육과 연계
 - 성평등 미디어 텍스트 제작 및 소통 활동 지원
 - 공모전 형태의 시니어 미디어 활동 지원
 - 성평등을 주제로 한 시니어 미디어 제작 및 활동 지원
 - 인큐베이팅한 팀은 노인 정보화교육 등 미디어교육 강사, 기타 성평등 모니터링 사업 등과 연계하여 전문 강사로 성장 지원 및 활용

2) 주요지표

주요지표	현재	2020	2025	2030
여가 만족도 성비	81.1	90.0	95.0	97.0
남성의 성평등 의식 평균 수준	2.62	2.70	2.85	3.00

※ 여가만족도 성비 : 남성 100 기준, 여성의 점수. 현재, 전국 평균은 92.1(2015년)

※ 남성 성평등 의식 수준 : 2015년 현재 4점 척도에 2.62. 인천을 대상으로 동일한 척도를 활용한 유사연구 결과(2014)에서 인천의 남성 성평등 의식 평균 수준은 2.67임(2014).

3) 추진과제의 단계별 추진 개요

전략	단기(~2020)	중기(2021~2025)	장기(2026~2030)
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문화자원 발굴 ▶ 여성 문화자원 발굴 네트워크 구성 ▶ 여성 문화자원 발굴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문화자원의 콘텐츠화 ▶ 여성 문화자원 콘텐츠화 및 문화산업 연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문화자원 콘텐츠 활용 확산 ▶ 여성 문화자원 콘텐츠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 ▶ 충남 여성문화 아카이브(공유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문화 인큐베이팅 ▶ 여성동네문화기획자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문화 인큐베이팅 ▶ 여성 문화인력 네트워크 ▶ 마을단위 소규모 문화창작공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단위 성평등 문화활동 활성화 ▶ 농촌 여성노인 페미니즘 문화기획단 ▶ 마을단위 소규모 문화창작공간 확대 - 여성주도 문화기획 및 생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교육 추진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성평등 교육 대상 확대 ▶ 성평등 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교육의 확대 ▶ 연령별, 지역별 교육 확대 ▶ 성평등 교육 강사 인력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교육의 일상화 ▶ 성평등 교육의 상시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미디어 생산 확대 ▶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단 운영 ▶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미디어 생산 및 활용 제고 ▶ 미디어 모니터링 및 개선 ▶ 성평등 미디어 콘텐츠 생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미디어 생산 및 활용 확대 ▶ 성평등 시니어 미디어 인큐베이팅 ▶ 다양한 연령층, 집단의 성평등 미디어 경험 확산

추진전략 7. 평등한 일터, 좋은 일자리

- 지속가능한 여성 일자리 참여 확대와 노동 권익 강화
- 평등하고 공정한 일터 조성 및 노동시장의 차별 개선

1)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추진과제	세부과제
7-1 일자리의 고용평등 강화	7-1-1. 일터 혁신 프로젝트 추진
7-2 좋은 일자리 확대	7-2-1. 지속가능한 여성 일자리 확대

7-1

일자리의 고용평등 강화

7-1-1. 일터 혁신 프로젝트 추진

① 성별고용평등지표 관리

- ▷ 성별고용평등지표 생산 및 공시, 민간 확산
 - 충남도 일자리공시 목표제 성별 관리·공시
 - 민간부문 확산 : 민간 위탁사업 선정심사에 지표 반영

②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 확산 성별 모니터링

- ▷ 산업별 임금실태조사 성별 특성 분석
- ▷ 동일노동 동일임금정보 성별 공시 실시
 - 근로시간 유형(전일제·시간제 근로자), 최저임금근로자 성비 공시 포함

③ 여성노동자 노동인권 강화 **【핵심】**

- ▷ 충남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 노동정책협의회 구성·운영 : 성비 균형 조향
 - 성별에 따른 차별해소 조향
 - 여성, 초단기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노동약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 포함
- ▷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 마련

-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 조례 제정(실태조사, 토론회 등)
- 민간부문 실천 협약 체결
- ▷ 충남노동권익센터 내 여성고용상담실 운영
 - 전담인력 배치
 - 노동교육 및 노무상담, 고충처리(근로조건 차별, 힘희롱·성희롱, 모성휴가 및 직장복귀 고충 등), 분쟁해결 지원, 사례집 발간
- ▷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확대
 - 계약·입찰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등

7-2

좋은 일자리 확대

7-2-1. 지속가능한 여성 일자리 확대

① 충남도 여성일자리지원 시스템 강화 **【핵심】**

- ▷ 여성일자리기관 기능 강화
 - 광역 인프라 구축 및 권역별 운영 특성화
 - 광역 인프라 구축
 - 새일센터 간 협업사업 추진 및 현장형 컨설팅
 - 충남도 새일센터 공동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
 - 수요 밀착형 고용서비스 강화 및 전문직종 훈련 확대
 - 사업체 및 구직여성 인력 수급조사 실시
 - 새일센터 직업훈련 프로그램 전문화 및 유망직종 발굴
 - 고용지원 인력의 고용안정 및 역량 강화
 -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기회 확대
- ▷ 여성일자리 협업 네트워크 강화
 - 시·군 여성일자리 실무협의체 운영·확대

② 충남도 취·창업사업 여성 참여 확대

- ▷ 충남도 취·창업사업 개편 및 다양화
 - 여성 친화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 발굴 및 훈련 확대
- ▷ 취·창업자 사후관리 체계 강화
 - 취·창업사업 참여자의 성별 고용유지 및 생존을 파악

③ 커뮤니티 비즈니스 일자리 확대

- ▷ 사회적경제 여성 창업 성장 지원 : 여성창업 특성화 패키지 운영
 - 지역 공동체 발굴, 창업초기 컨설팅 및 공간제공, 프로보노 연계 강화 등
- ▷ 지역 일자리기관과의 고용연계 서비스 강화

2) 주요지표

주요지표	현재	2020	2025	2030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68.0	70.0	75.0	80.0
성별 임금격차	59.8	61.0	62.0	64.0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75.7	76.0	77.0	78.0

* 경제활동분야 성평등 지수 : '14년 충남 67.8(전국 11위)

* '14년 분야별 전국1위 : 경제활동참가율 79.9, 성별 임금격차 63.6, 상용근로자 성비 77.5

3) 추진과제의 단계별 추진 개요

전략	단기(~2020)	중기(2021~2025)	장기(2026~2030)
<p>평등한 일터, 좋은 일자리</p>	<p>■ 일자리의 고용평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고용평등지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고용평등지표 공시·민간 확산 ▶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 확산 성별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별 임금실태조사 성별 특성 분석 ▶ 여성노동자 노동인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 마련 ● 여성고용상담실 설치 ●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확대 	<p>▶ 성별고용평등지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고용평등지표 공시 </p> <p>▶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 확산 성별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노동 동일임금정보 성별 공시 </p> <p>▶ 여성노동자 노동인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 민간 확산 ● 여성고용상담실 운영 ●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확대 </p>	<p>▶ 성별고용평등지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고용평등지표 민간 확산 </p> <p>▶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 확산 성별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노동 동일임금정보 성별 공시 </p> <p>▶ 여성노동자 노동인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 민간 확산 ● 여성고용상담실 운영 지속 ●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확대 </p>
	<p>■ 지속가능한 여성 일자리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 여성일자리지원 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일자리기관 기능 강화 ● 여성일자리 협업네트워크 강화 ▶ 충남도 취·창업사업 여성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 취·창업사업 개편 및 다양화 ● 사업 참여자 성별 고용유지 실태분석 ▶ 커뮤니티 비즈니스 일자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여성 창업 성장지원 ● 고용연계 서비스 강화 	<p>▶ 충남도 여성일자리지원 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일자리기관 기능 강화 ● 여성일자리 협업네트워크 강화 </p> <p>▶ 충남도 취·창업사업 여성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 취·창업사업 개편 및 다양화 ● 사업 참여자 성별 고용유지 실태분석 </p> <p>▶ 커뮤니티 비즈니스 일자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여성 창업 성장지원 ● 고용연계 서비스 강화 </p>	<p>▶ 충남도 여성일자리지원 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일자리기관 기능 강화 ● 여성일자리 협업네트워크 강화 </p> <p>▶ 충남도 취·창업사업 여성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 취·창업사업 개편 및 다양화 ● 사업 참여자 성별 고용유지 실태분석 </p> <p>▶ 커뮤니티 비즈니스 일자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여성 창업 성장지원 ● 고용연계 서비스 강화 </p>

추진전략 8.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른 자원배분

-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여성·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빈곤해소 정책 확대
- 이주여성과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위한 지원의 체계화
- 위기 청소년의 위기보호와 자립지원 강화

1)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추진과제	세부과제
8-1 빈곤탈출 성인지 정책 강화	8-1-1. 사각지대 빈곤 발굴 및 지원 확대
	8-1-2. 저소득층 주거 빈곤 해소
8-2 이주여성·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8-2-1. 이주여성의 취·창업 지원 체계화
	8-2-2. 장애여성 취·창업기반 강화
8-3 위기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8-3-1. 청소년 위기단계별 성별 지원체계 강화

8-1

빈곤탈출 성인지 정책 강화

8-1-1. 사각지대 빈곤 발굴 및 지원 확대

① 숨겨진 노인빈곤 지원 확대

- ▶ 빈곤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굴하여 지원함.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빈곤한 여성노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부족하여 외로운 남성노인 등과 같이 다차원적인 빈곤 발굴하여 사회적 지원확대

② 생활임금 민간부문 확대

- ▶ 2017년 공공기관‘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2015. 12. 30제정) 시행예정, 2020년부터 민간기관 확대 홍보하여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도록 장려.

③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핵심】

- ▶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모자, 부자, 청소년모자, 청소년부자, 조손가족이 포함됨. 제도적으로 지원받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강화 및 지원기준 중위소득 52% 이상(한부모와 조손), 청소년한부모(60%)에 대한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유형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확대(중위소득 65%(2020), 중위소득 70%(2025), 중위소득(75%))
- ▷ 도차원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지원근거 마련 필요
 - 충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정 필요
 -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계획, 지원사업, 실태조사 등의 내용 포함

④ 빈곤여성 생애설계 지원 확대

- ▷ 빈곤 여성에 대한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자립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훈련 제공
 - 시군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와 연계 추진
 - 자활근로(1단계) → 자활기업(2단계) → (예비) 사회적 기업 (3단계)

8-1-2. 저소득층 주거 빈곤 해소

① 주거의 질적 지원 강화

- ▷ 주택개량 및 건축사업 지원
 - 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령자 장애인 주거환경서비스’ 및 주거급여 제공시 여성(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 취약성, 욕실, 주방, 성별이 다른 가구원에 따른 방 개수 등 고려 개량 및 공간 구획(컨설팅 제공) 및 건축 지원
 - 공동밀집지역의 공동화장실 남녀분리, 환기, 상수도 설치 등을 위한 리모델링 확대
 - *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이하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하여 자가(집수리: 정해진 금액 내에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비자가(임차료지원)
 - * 충남도(지자체)와 한국헤비타트에서 자기 땅을 제공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하여 건축 지원

② 충남형 공동체 주거모델 확산

- ▷ 세대(노인 자가 주거, 청년 주거빈곤, 아이돌봄) 간 문제 해결 모델 (대도시 중심)
-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충남형 공동체 주거’ 모델 확산
 - 주거취약계층은 자기 집이 없는 경우, 주거급여로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있음. 집이 없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자기 집처럼 살 수 있도록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해주려는 시도.
 - * 청소년, 한부모 가족, 노인 등 대상자 구분 없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가능. 현재 주거취약계층은 여성이 많으므로 여성에 대한 지원율이 높을 것임
 - *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 헤비타트’에서 건축을 함. 공동주택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고, 관리비는 지자체에서 주거급여(임차료지원)로 제공
 - * 주거급여 대상자는 건축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방안 검토

8-2-1. 결혼이주여성 취·창업 지원 체계화

❶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취·창업 지원 전문성 강화

- ▷ (충남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등) 결혼이주여성 지원기관에 이주여성 특성 고려 취·창업 전문 직업상담사 배치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일자리지원기관 연계와 협력 강화, 결혼이주여성 특화 일자리사업 발굴과 취업연계, 고용유지 등 사후관리 전문화

❷ 사회적경제 분야 결혼이주여성 공동체 일자리 확대

- ▷ 지역별 결혼이주여성, 지역 공동체의 자원과 특성 분석
- ▷ 지역사회 내 결혼이주여성 언어문화 특화 일자리 발굴, 이주민 공동체 내 특화된 창업 수요 발굴 등을 통한 다양한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확대 및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육성

8-2-2. 장애여성 취·창업 기반 강화

❶ 장애여성 특화형 사업장 모델 개발 【핵심】

- ▷ 충남형 장애여성 사회적기업 설치 및 운영 (18년~)
 - 장애여성 특화 사업모델 개발
 -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장애여성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업모델 개발
 - 시범사업장 설치 및 운영
 - 시범사업장은 일정 수준까지 도 직접 운영
 - 점진적으로 시군으로 사업장 설치 확대
 - 일정 수준까지 장애여성CEO전문과정 이수자에게 사업장 중간관리 업무 부여
 - 점진적으로 장애여성 CEO에게 사업장 경영 이양
- ▷ 장애여성 경영인 육성 (18년~)
 - 장애여성 CEO 전문과정 개설
 - 과정 이수자 가운데 장애여성 특화사업장 중간관리 및 경영권 부여
 - 장애여성 CEO 네트워크 조성
- ▷ 장애여성 사업장 지원 (21년~)
 - 장애여성사업장생산물 우선구매율 보장
 - 일정수준의 구매율 보장
 - 장애여성 사업장 운영 지원

- 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컨설팅 지원, 장애여성 경영자 역량강화 지속 지원 등

▷ 관련 근거 마련 (17년~)

- 장애여성 특화형 사회적기업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

② 장애여성 취·창업 지원 강화

▷ 충남 장애인 전문직업교육센터 설치

- 센터 여성장애인 이용률 50% 의무화
- 센터 역할은 전문직업교육과 취업매칭을 포함
 - 지역 내 장애인고용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 고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대전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장애인 특수학교 등)

▷ 관련 근거 마련

- 센터설치 또는 지역 인프라 연계를 위한 관련 근거 마련 : 실태조사 등

③ 민간부분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촉진

▷ 민간부분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표 관리

- 도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이행률’ 을 ‘민간부분 장애인 의무고용이행률’로 확대 관리
-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표에 성별 의무고용률 관리 포함

8-3

위기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8-3-1. 청소년 위기단계별 성별 지원체계 강화

① 위기에방 인프라 확대를 통한 안전한 환경조성

- ▷ 청소년 전용카페 확대(현재 천안시에 1개소, 1개소 추가 준비 중) → 매년 1개소씩 2030년까지 15개 시군에 설치·운영(3억, 40(도비), 60(시군비))
- ▷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예방지원센터 설치·운영 (2020년 이후 추진, 약 100억 예산추정)

② 초기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위기보호 서비스 확충 【핵심】

▷ 청소년 일시쉼터 및 증장기 쉼터 확대

- 천안 3, 공주 1, 아산 1, 홍성 2개소가 있으나 1지역에 1장소(충남 4지역)로 집중됨. 개소 수가 보다 권역별 분산이 중요함
 - * 서산태안당진 권역 2(일시 1 및 증장기 쉼터 1)신설, 보령 권역 2개소(일시 1 및

중장기 쉼터 1)신설 (1센터 국비와 시군비(3억))

* 대도시지역에 중장기 쉼터, 농촌지역에 일시(7일 이내) 및 단기 쉼터 형태로 설치

▷ 심리 정서적 지원 확대 (도 및 시군의 상담복지센터를 연계추진, 1센터 500만원*15시군)

③ 경제적 및 심리 정서적 자립 지원체계 구축

▷ (가출, 학교박청소녀 등 위기청소녀) 주거지원을 위한 자립관(기숙사 형태) 설치·운영

- 10대 또는 20대 초반에 독립해야 할 상황에 주거비 부담 완화하여 경제적 독립지원 (100억)

* 도 및 15개 시군의 꿈드림지원센터,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추진

▷ 학교밖, 위기 청소년을 위한 ‘충남형 직업체험센터(해봄센터) 설치 및 운영

- 위기청소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가출, 학교밖 청소년) 생활기술개발 및 직업탐색프로그램 확대

* 2017년 충남 시범운영, 6억, 직업체험 3개임. 2018년 건립 준비하여 2020년 건축 완료 (예산 300억)

* 전국에 성남시 ‘청소년 잡월드’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충남형 잡월드 구축 필요

▷ 심리 정서적 자립지원을 위한 상담서비스 강화

2) 주요지표

주요지표	현재	2020	2025	203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¹⁾	중위소득52%	중위소득65%	중위소득70%	중위소득75%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²⁾	68.4	76.4	85	90
장애여성 경제활동참가율 ³⁾	20.2%	30%	45%	60%

*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 현재 중위소득 52%(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0%(청소년한부모가족)

*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 ‘15년 전국 1위 91.0, 전국평균 76.4

* 장애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충남 남성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66.4(‘14), 충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2.1%(‘16)

3) 추진과제의 단계별 추진개요

전략 8	단기(~2020)	중기(2021~2025)	장기(2026~2030)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른 자원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각지대 빈곤 발굴 및 지원 확대 ▶숨겨진 노인빈곤 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임금 민간부문 확대준비 ▶빈곤여성 생애설계 지원 확대 ▶숨겨진 노인빈곤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숨겨진 노인빈곤 지원 확대 ▶생활임금 민간부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주거빈곤 해소 ▶주택개량 및 건축사업 지원(주거의 질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형 공동체 주거'모델 확산화(주거의 양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형 공동체 주거'모델 확산(주거의 양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주여성 취·창업지원 체계화 ▶결혼이주여성 전문 직업상담사 배치 ▶결혼이주여성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주여성 중심 사회적경제조직 확대 ▶결혼이주여성 당사자 경영주체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주여성 중심 사회적경제조직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여성 특화 사업모델 개발 ▶관련조례제정 및 사업장모델 개발 ▶장애여성 CEO 육성 ■장애여성 취·창업 지원 강화 ▶도 취업상담서비스사업 보완강화 ▶전문직업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관리지표 검토 ▶장애인 의무고용률 성별 관리지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여성 특화 사업모델 개발 ▶도: 광역단위 시범사업장 설치 및 운영 ▶장애여성CEO육성자: 중간관리자 역할 ■장애여성 취·창업 지원 강화 ▶도 직업교육 및 취·창업 매칭서비스 지속 ▶전문직업교육센터 설치 또는 기존 자원 연계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도 관리지표 민간부분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여성 특화 사업모델 개발 ▶시군으로 사업장 확대설치→안정된 사업장은 장애여성CEO육성자에게 이양 ▶사업장 운영전반에 관한 지속 지원 ■장애여성 취·창업 지원 강화 ▶전문직업교육센터를 통한 직업교육 및 취·창업 매칭서비스 지원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민간부문의무고용률 전국 상위수준으로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위기단계별 성별 지원체계 강화 ▶위기예방 인프라 확대를 통한 안전한 환경조성 ▶초기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위기보호 서비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예방 인프라 확대를 통한 안전한 환경조성 ▶경제적 및 심리 정서적 자립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예방 인프라 확대를 통한 안전한 환경조성 ▶경제적 및 심리 정서적 자립 지원체계 구축 	

추진전략 9.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 젠더폭력에 대한 도민의 반폭력 감수성 향상과 일상적 실천 확대
- 젠더폭력 피해에 대한 다차원적 지원체계 확립과 지원 강화
-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방, 주민 주체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젠더폭력 발생의 원천적 감소 도모

1)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추진과제	세부과제
9-1 반(反)폭력 의식의 확산	9-1-1. 폭력예방교육 체계 구축
9-2 젠더폭력 예방과 피해회복 지원체계 강화	9-2-1.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9-2-2. 폭력 취약계층 인권보호 강화
	9-2-3. 성매매 클린 충남 만들기
9-3 촘촘한 폭력안전망 구축	9-3-1. 폭력범죄예방 시스템 강화
	9-3-2. 마을중심 안전네트워크 강화

9-1

반(反)폭력 의식의 확산

9-1-1. 폭력예방교육 체계 구축

① 생애주기별 교육콘텐츠 개발

- ▷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문가모임 구성
 - 생애주기별 폭력예방 교육 프로그램과 강의안 구성, 개발
 - 유아기, 아동기(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청소년기(중·고등학생),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 폭력예방교육의 표준 강의안으로 보급, 활용
 - 3년 단위 콘텐츠(강의안) 수정·갱신

② 폭력예방교육 액션플랜 수립

- ▷ 생애주기별, 직장,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교육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추진방법, 연계·협력 기관, 교육운영 모니터링 계획 등 도내 폭력 예방 교육의 가이드라인
 - 5개년 단위 연도별 목표 설정

③ 생애주기별 젠더폭력 예방교육 확대 【핵심】

▷ 생애주기별 젠더폭력 예방교육 확대

- 의무수행 기관(지자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외에 공공서비스 부문, 민간사업장으로 확대 추진
 - 각종 복지시설·기관(사회복지사협회 등과 연계)
 - 도 인권증진센터 연계(도내 인권교육과 연계)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 대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협력
- 농어촌 주민 대상 예방교육 추진
 - 주민대상 찾아가는 방문 폭력예방 교육
 - 농어촌 마을단위 성평등 교육(6-2-1-2) 사업과 연계(통합 운영 가능)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 교육수요에 맞추어 적정 인력 양성
 - ※ 현재, 폭력예방전문강사 양성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며, 이 과정을 수료하고 등록한 강사만이 사실상 교육 강의 가능
 - 장기적으로 도내 전문교육기관이 강사양성 운영 추진(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와 연계)
 - 교육강사 보수교육(학습회) 운영

▷ 강사연계 및 인력풀 구축

- 전문강사 인력풀 구축
- 초기단계(17~24년)
 - 도 관계부서에서 강사인력풀 구축 및 정보 제공
 - 장기적으로 폭력예방교육 사업단에서 운영, 관리(25년~)

▷ 폭력예방교육 사업단 운영

- 운영주체 : 민간위탁
 - 강사양성, 연계·파견사업, 교육운영 관리, 교육과정 모니터링, 연계·협력기관 네트워크운영 등

9-2

젠더폭력 예방과 피해회복 지원체계 강화

9-2-1.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① 공익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 ▷ 공익치유센터 운영
 - 기존 상담소 활용 심리치료 전문가 배치, 공익치유센터 기능 확대
 - 기존의 피해지원으로 회복이 어렵고 장기 치유와 개입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지원

② 폭력피해 초기대응 시스템 구축 【핵심】

- ▷ 초기대응 솔루션을 위한 협의체 운영
 - 시군 폭력피해 지원 기관, 의료기관, 경찰청 등
 - 아동지역여성연대 등 네트워크와 연계
 - 지원기관 간 체계적인 역할분담과 협력 모델 도출
- ▷ 지원기관 연계 가이드라인 제작
 - 대상별 특성, 피해유형별 특성에 따른 지원 연계 기본 매뉴얼 제작
 - 광역도 단위 특성을 반영한 연계 방법 및 사례 소개
 - 피해지원 종사자 워크숍, 연대회의 등에서 공유 및 활용
- ▷ 시군 폭력피해자 임시보호시설 확대
 - 시군, 경찰서, 병원 등 협약을 통하여 권역별 미설치 지역부터 단계별 확대
 - 장기적으로 남성전용 임시보호시설 1개소 설치
- ▷ 해바라기센터 증설
 - 아동지원 기능 해바라기센터 설치
 - 남부권역 및 서북부권역 의료시설 내 추가 설치(의료원 등)
- ▷ 가정폭력 가정 가족상담 지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위탁(법원) 부부상담 지원
 - 상담비 일부 지원(가정폭력상담소 연계)

③ 피해지원 종사자 역량강화

- ▷ 진술조력인 상근 배치 확대
 - 해바라기센터 증설과 연계하여 추진
- ▷ 폭력피해 지원기관 종사자 소진예방 지원
 - 종사자 대상 업무역량강화 워크숍 1회
 - 폭력피해 지원 관련 상담 기법, 정보의 제공과 공유
 - 종사자들의 여성주의 관점 제고
 - 폭력피해 지원기관 네트워크와 연계 추진
 - 종사자 대상 국외 연수 기회 제공
 - 우수 종사자 선정 및 국외 연수
 - 폭력피해 지원기관 평가와 연동하여, 우수기관 종사자 대상 국외 연수비 지원(18년 부터 격년, 3~4명)

9-2-2. 폭력 취약계층 인권보호 강화

① 이주여성 폭력긴급보호 체계 강화

- ▶ 이주여성 당사자 전문상담원 양성
 - 이주여성 당사자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및 당사자 상담 확대를 통한 상담지원 효과 증대
- ▶ 위기 이주여성 다국어 상담 지원
 - 위기에 처한 모든 유형의 이주여성 관련 전문상담역량을 갖춘 전문상담소 운영
 - 상담소에 주요 이주여성 모국어 구사 상담원 배치, 다국어 상담지원
- ▶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운영
 - 다양한 이주여성 동반아동(쉼터 경유) 그룹홈 운영
 - 주거 및 생계문제 해결, 동반아동 자녀돌봄, 학습활동 지원으로 자립·자활 기반 마련

② 여성장애인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 ▶ 폭력예방 교육 교재 제작
 - 지적장애인용 폭력예방교재 제작 및 활용(성인용)
- ▶ 지적장애인 폭력예방 교육
 - 고위험군(혼자 거주하거나 보호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재가 지적장애인 대상 방문 폭력예방 교육
 - 고위험군 재가 지적장애인 현황 파악(경찰서, 장애인단체, 장애인성폭력 상담소와 연계)
 - 주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소통 및 교육
 -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시설 지적장애인 대상 방문 폭력예방 교육
 - 장애인보호작업장 방문을 통한 성폭력예방 교육 실시(매주 1시간씩 총 4회)
 -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와 연계(장애인 성폭력상담소가 없는 시군은 일반 성폭력상담소와 연계)
- ▶ 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
 - 장애인 전용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 설치 운영
 -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등 연계
 - 단기 쉼터 1개소 설치(18년~), 중장기 쉼터(20년~)
- ▶ 장애인 부모대상 폭력예방 등 교육 확대
 - 부모대상 상담 및 폭력예방 교육 실시
 - 장애인부모회와 연계

③ 여성노인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 ▷ 농어촌 성폭력 예방교육 연계 찾아가는 노인 폭력관련 상담
 - 독거노인, 노인부부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상담 지원

9-2-3. 성매매 클린 충남 만들기

① 성매매 감시체계 및 집행력 강화

- ▷ 성매매특별사법경찰 신설
 - 특별사법경찰 내 전담팀 신설
 - 성매매 업소, 홍보물, 통신 연계 조직 적발, 감시활동
 - 경찰청, 관계부서 합동 단속 강화
- ▷ 성매매 업소 단속 및 폐쇄
 - 도내 성매매 업소 집결지의 단속, 폐쇄 유도
 - 해당 시군과의 도시재개발 계획 수립 등 협력,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

② 성구매 대상자 및 탈성매매자 자립 지원

- ▷ 자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성매매피해 상담소-자활지원센터-그룹홈의 유기적 자활 지원 강화

③ 위기 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

- ▷ 위기 청소년 일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카페 운영, 지원기관 정보제공
 - 위기 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일시지원센터 1개소 설치
- ▷ 위기 청소년 성매매 예방 네트워크 운영
 - 도 단위 위기 청소년 성매매 예방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관련부서, 관련 시설·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지원 관련 시설·기관, 경찰청, 교육청 등으로 구성
 - 성매매일시지원센터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가 네트워크 운영, 연합 현장상담, 통합 사례회의 등 총괄
 - 도 단위 아동여성지역연대에서 위기 청소년 성매매 문제의 의제화 및 성매매 예방 네트워크와 연계
 - 거리 통합 현장 상담 실시
 -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거리 등 지역중심의 연합 현장상담 실시(분기별 1회)
 - 성매매 예방 네트워크 참여기관 합동 워크숍

-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위기 청소년 이해와 성매매 유입방지 활동 역량강화

▷ 위기 청소년 지원 지역활동가 양성

- 신규 지역 활동가 양성
 - 격년 단위 20여명 규모로 양성
 -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 성매매일시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에서 활용
 - 지역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연계
- 기존 청소년상담사, 지도사 등 청소년 지원 관련 인력의 성매매예방 관련 업무 역량 강화
 - 성매매예방네트워크 운영과 연계하여 정례적으로 추진

④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인신매매 피해예방 시스템 구축

- 인신매매 우려 업소 등 감시·단속 강화
- 젠더폭력 관련 네트워크에서 인신매매 이슈에 대한 공유 및 예방활동 강화
- 관련 조례 개정(인신매매 예방, 피해 지원 포함)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이주여성 다국어 상담(9-2-2), 이주여성 인신매매 피해자의 법률, 의료 지원

9-3

촉촉한 폭력안전망 구축

9-3-1. 폭력범죄예방 시스템 강화

① 범죄예방디자인(CPTED) 환경개선 사업 확대

▷ 범죄취약지역, 여성인구밀집 지역 등 중심으로 사업지 선정

- 사업대상 지역의 환경 특성 분석,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기본설계 계획
 - 골목길 조명 확충,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설치, 공원·공터 정비,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 한국셉테드학회 등 전문가의 자문, 컨설팅 연계
-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
 - 설계 및 사업 추진 각 단계별 의견수렴

▷ 시범사업의 연차적 확대

- 16년 시범 1개소→20년 7개소→ 30년 15개소

② 빅데이터 범죄 대응시스템 구축

- ▷ 빅데이터 활용 시·군별(읍·면·동) 범죄발생지도 제작
 - 범죄발생빈도, 유형별 특성, 사고발생 징후 파악
 - 빅데이터 프로파일링(경찰청), 범죄대응전략 수립, 예방사업 활용(도-경찰청 협력)

③ 젠더폭력 통계 생산 및 구축

- ▷ 젠더폭력 관련 지표개발
 - 폭력유형별, 대상별(성·연령·내·외국인·장애여부 등), 주요 통계지표 개발
- ▷ 통계생산 및 활용
 - 자료분석 및 집계, 통계 생산
 - 연차별 통계자료 추이 분석
 - 주요결과에 대한 인포그래픽, 브리프 발간 및 배포
 - 관계부서, 경찰청 등 자료협력 공유
 - 전문연구기관(여성정책개발원)에서 통계활용·분석 연구

9-3-2. 마을중심 안전네트워크 강화

① 내가 만들고 지키는 폭력제로 마을만들기

- ▷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마을만들기 기획단 운영
 - 주민, 마을활동가, 젠더폭력 관련 전문가, 경찰서(파출소, 지구대), 자율방범대, 지역 복지 관련 시설·기관의 참여
 - 도내 시군별 가정폭력 피해자의 멘티 상담활동가 연결,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자조모임 운영
 - 가정폭력 피해자의 중복피해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자원 연계
 - 가정폭력 피해 우려가 있는 가정 발굴 및 자원 연계
- ▷ (현)여성가부 아동·여성지역 안전 프로그램 사업과 연계
 - ‘확인하Go! 움직이Go! 함께하Go! 동네 한바퀴’ 사업(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수행)
 - 기존 시행지역 외 미시행 지역 연차별 확대(8개 시군별 2개 지역씩)
 - 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서 활동 매뉴얼 제작, 멘티 상담활동 모집 및 교육

② 우리마을 안전·안심 사업 운영 **【핵심】**

- ▷ 시범지역 선정(읍면동 단위)
 - 단독,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1인 여성인구가 많은 지역, 슬럼화 등으로 방범 취약 지역 위주 선정

- ▷ 안전·안심마을 모니터링단 파견
 - 선정된 마을에 주민 참여 지원, 주민 참여 사업 기획 및 수행에 대한 컨설팅과 안내 제공
 - 젠더폭력 전문가, 도민 모니터링단으로 구성
- ▷ 사업 프로그램 운영
 - 마을안전도 점검, 폭력안전 자원 탐색, 주민 협업·참여 프로그램 운영
 - 주민대상 젠더폭력 이해 및 반(反주)폭력 의식 교육
 - ※ 범죄예방디자인 환경개선 사업(9-3-1-1)과 연계 가능
 - 공모 신청 후 선정
 - 공모 자격은 젠더폭력예방에 관심이 있는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 매년 2개소(18~20년)→3개소(21~24년)→5개소(25~30년)로 사업지역 단계별 확대
 - 선정마을은 2년 간 지원, 2년주기로 신규 마을 선정

③ 폭력안전지킴이 여성리더 양성

- ▷ 여성이 마을안전의 주체가 되어 안전취약 요소 발견·발굴
 - 파출소, 지구대의 순찰·치안업무, 관련 지원기관과 연결
 - 우리마을 안전·안심 사업(9-3-2-2)과 연계
- ▷ 시범지역(우리마을 안전사업)의 주요 활동가로 양성 및 활용
 - 선정마을 당 10~15명 규모 모집, 선발, 사전교육
 - 근무수당 지급 및 관리
 - 우수 활동가 포상

2) 주요지표

주요지표	현재	2020	2025	2030
전반적 사회안전 인식 성비	52.4	65.0	75.0	80.0
인구10만명당 성폭력 발생건수	39.7	35.0	32.0	30.0

※ 전반적인 사회안전 인식성비 : 2015년 충남 52.4(전국평균 62.3, 전국1위 79.7)
 ※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 성폭력 발생건수=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강간
 2015년 825건(충남), 21,286건(전국),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 전국=41.3, 충남=39.7

3) 추진과제의 단계별 추진 개요

전략9	단기(~2020)	중기(2021~2025)	장기(2026~2030)		
폭력으로 부터 안전한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예방 교육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교육콘텐츠 개발 ▶ 예방교육 액션플랜 수립 ▶ 생애주기별 예방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양성, 연계, 모니터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교육콘텐츠 개발(보완) ▶ 생애주기별 예방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예방교육 사업단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교육콘텐츠 개발(보완) ▶ 범도민 폭력예방 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대응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관 연계 가이드라인 제작 ● 권역별 임시보호시설 설치 ▶ 피해지원 종사자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소진방지 연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치유센터 설치 ▶ 초기대응 시스템 구축 ▶ 피해지원 종사자 역량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치유센터 운영 ▶ 초기대응 시스템 구축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바라기센터 증설 ▶ 진술조력인 상근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 취약계층 인권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 폭력긴급보호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 당사자 상담원양성 ● 이주여성 그룹홈 개소(1개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 폭력긴급보호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 전문상담센터 설치 ● 이주여성 그룹홈 확대(2개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 폭력긴급보호 체계 강화(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클린 충남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감시체계 및 집행력 강화 ▶ 탈성매매자 자립지원 ▶ 위기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 ▶ 성매매예방 네트워크 운영 ▶ 위기청소년지원 지역활동가 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감시체계 및 집행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업소 정비, 폐쇄 ▶ 위기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청소년 일시지원센터 설치 ▶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예방 시스템 구축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감시체계 및 집행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업소 정비, 폐쇄 ▶ 위기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 ▶ 성매매특별사법경찰 신설 ▶ 전문인력 지속 양성 ▶ 지원 인프라 확대 ▶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범죄예방 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 확대 ▶ 젠더폭력 통계생산 및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 확대 ▶ 빅데이터 범죄대응 시스템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완료 ▶ 젠더폭력 통계생산-분석-활용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중심 안전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제로 마을만들기 ▶ 우리마을 안전사업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제로 마을만들기 ▶ 우리마을 안전사업 운영(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마을 안전사업 운영(확대) ▶ 주민주도 폭력안전마을 확대

추진전략 10. 모두가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청소년기, 중년기, 노년기 성인지적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
- 보건의료 통합정보 시스템 및 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 환경통계의 성별 분리 작성과 그에 따른 환경정책의 성 인지력 향상
- 환경오염에 의한 주민건강영향 최소화 및 대응정책의 성별 접근성 강화
- 재난안전정책의 성 인지력 제고 및 성 평등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

1)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추진과제	세부과제
10-1 도민의 건강형평성 강화	10-1-1. 성인지적 생애주기별 건강지원
	10-1-2. 보건의료시스템의 수요자 접근성 강화
10-2 환경정책의 성인지적 관리체계 구축	10-2-1. 환경성 질환자 및 환경오염지역 성별 건강영향 자료 구축
	10-2-2. 환경분야 성별 분리통계 구축
10-3 재해재난 성인지적 대응체계 구축	10-3-1. 재해·재난 여성 안전 강화

10-1 도민의 건강형평성 강화

10-1-1. 성인지적 생애주기별 건강지원

❶ 건강관련 지표 성별통계 생산 및 관리 **【핵심】**

- ▷ 전반적 건강상태 측정
 - 건강관련 삶의 질 평가와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평가
 - 행복감, 우울, 정신 건강 등 평가
 -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 ▷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지표 관련 성별통계 생산 및 관리
 - 건강수명, 만성질환 유병률, 치매유병률, 흡연율, 사망원인 및 사망률 등

② 청소년 성별 건강관리 강화

- ▷ 청소년 신체활동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탈의실, 샤워장 설치 등)
 - 교육청, 교육기관, 유관기관과의 위원회 구성
 - 중·고등학교에 시설마련을 위한 예산확보 및 시설구축 및 장비 마련
 - 지속적인 시설 및 장비 점검 및 활용사항 등 평가
- ▷ 청소년 신체활동 강화 프로그램 확대
 - 교육과정 중 시간확보 및 비 교육과정 중 신체활동 증진방안 검토 및 적용
 - 청소년 신체활동 동아리 결성 및 지원
 - 교육청, 교육기관,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및 확대방안 강구
 - 청소년 신체활동 강화를 위한 홍보 및 발표대회 개최
 - 신체활동에 따른 건강상태 평가
-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 주기적 청소년 정신건강 평가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전문가 모임구성
 -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및 개발
 - 교육청, 정신보건센터 및 의료기관 의 전문가 활용 활성화
- ▷ 청소년기 흡연 문제 대응 관련 프로그램 확대
 - 청소년 대상 흡연문제 대응 캠프 실시
 - 보건소와 연계한 흡연학생 대상 금연상담 및 지도
 - 또래집단 강사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인력풀 구축

③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 ▷ 인근 도시와의 출산 관련 인프라 공동이용제도 확대
 - 인근도시 출산관련 인프라 조사
 - 인근도시 출산관련 기관과의 협약체결
 - 공동이용 방법 강구
- ▷ 분만취약지 보건의료인 지원 확대
 - 분만취약지 상황분석 및 대처방안 조사
 - 의료인단체, 의료보건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활용
- ▷ 출산관련 인력양성 확대(산모신생아관리, 산후우울증관리)
 - 출산관련 기관과 협의체 구축
 - 전문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인력풀 확보
 - 임신부 건강관리 전문가 투입 방안 강구

- 가임여성대상 출산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효과 평가

④ 중년기 성별 건강증진 강화

- ▷ 중년여성 신체활동 강화 프로그램 확대
 - 여성회관, 복지센터 등 기관에서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방안 강구
 - 중년여성 신체활동 동우회 결성 및 지원
 - 산업체에서 중년여성의 신체활동 강화 프로그램 구성
- ▷ 중년기 우울예방과 정신건강 강화 프로그램 확대
 - 중년기 성인의 정신건강 검사와 관리
 - 지역 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한 우울예방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 ▷ 중년기 노후준비 프로그램 확대
 - 전문강사 양성 및 인력풀 구축
 - 노후준비 교실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 동단위(면단위) 중년클럽 동아리결성 및 운영

⑤ 노년기 성별 건강증진 강화

- ▷ 독거노인 등 우울예방과 정신건강 강화 프로그램 확대
 - 대학 및 의료기관등 자원봉사자 모집
 -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인력풀 구축
 - 보건소, 복지관과 연계하여 노인 말벗 등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실시
 - 요양원, 요양센터의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개발, 지원
- ▷ 만성질환관리 및 예방교육 강화
 - 보건소, 대학, 의료기관 협의체 구성
 - 관리프로그램, 예방프로그램 확대운영
 - 건강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활용
 - 지속적 건강검진 및 평가

10-1-2. 보건의료시스템의 수요자 접근성 강화

① 보건의료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활용

- ▷ 도민 건강자료 보관 및 활용
 - 통계청 정보시스템 활용하여 도민의 건강정보 저장 및 활용
 - 보건복지부 건강관련 자료 중 도민건강 자료 활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련자료 활용

- 도민 건강관련 빅 데이터 분석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적용
- ▷ 보건의료 통합정보 센터 설치 및 활용
- ② 주민리더, 보건소, 보건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 ▷ 주민리더, 보건소, 보건의료기관 협의체 운영
 - 주민의 건강관련 요구도 검토
 - 기관 간 건강증진 및 관리위한 역할분담과 협력관계 모델 도출
- ③ 보건의료 인력의 성인지력 강화
 - ▷ 보건의료종사자의 성인지 교육 확대
 - 종사자의 의무적 교육기관 (지자체, 의료기관, 보건기관, 행정기관 등) 선정
 - 주기적 교육실시 및 평가
 - 행정 등 성인지 정책수립 및 반영사항 검토
 - ▷ 건강형평성 관점의 통계, 데이터 생산 및 활용역량 강화
 - 건강관련 정책 중 건강형평성 적용 검토 및 분석
 - 건강형평성 교육 및 평가

10-2

환경정책의 성인지적 관리체계 구축

10-2-1. 환경성질환자 및 환경오염지역 성별 건강 영향자료 구축

- ① 환경성 질환자 성별 모니터링 실시 및 통계자료 구축
 - ▷ 충남지역 환경성 질환자의 지역별/성별 자료 구축 및 모니터링 실시
 - 환경보건센터 및 보건소/지소와 연계 체계 구축
 - 자료구축 및 분석 통한 체계적 대응 정책 수립
 -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등은 민간영역과 협력
- ② 특정 환경오염지역 건강 모니터링 실시 및 성별 분리 통계 작성 **【핵심】**
 - ▷ 폐광지역, 화력발전단지, 화학·산업단지 등 특정오염원 밀집지역의 주민 건강모니터링 실시 및 성별 분리통계 작성
 - 기존의 주민 건강 모니터링 실시 및 자료 구축사업에 성별 관점 반영
 - 통합자료 구축 및 대응정책 마련 위한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 충청남도, 충남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유관기관의 연구조사 및 분석

- 데이터 공유와 관련 정책수립 위한 협력시스템 마련
- 성별 주민 건강영향 관련 민관공동 주민만족도 평가 시스템 도입

10-3 재난안전 성인지적 대응체계 구축

10-3-1. 재해·재난 여성 안전 강화

① 성인지적 재난안전 매뉴얼 정비 및 시행 【핵심】

- ▶ 충남 재난안전매뉴얼 성 인지 관점 재정비
 - 재난예방 및 발생 시 대처방법, 대피시설, 대피물품 기준 등 성인지적 매뉴얼 개발 및 적용
 - 여성과 당사자 참여에 의한 매뉴얼 및 대처방안(방법, 시설, 물품기준 등) 재검토
 - 성인지 관점 재난안전 매뉴얼 작성 및 운영체계 수립
 - 조례 개정 및 고도화
- ▶ 성인지적 재난안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 신체적 약자가 수용가능한 재난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 이행
 - 여성과 당사자 참여 프로그램 개발, 주기적 고도화
 - 민간전문가, 충청남도, 충남교육청, 충남소방본부 및 시·군과의 협력적 교육체계 수립
 - 부녀회, 학교학부모회, 자율방범대 등 성 인지 재난안전교육 실시
- ▶ 성인지적 재난안전 보호 장구 및 구호품 재정비 및 보급
 - 젠더전문가, 연령별/지역별 대표자 참여 물품 선정, 성능 확인 및 주기적 개선

② 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여성리더 양성

- ▶ 지진, 기후재해,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 자연·사회재난 예방 여성안전지킴이 양성
 - 마을단위 재난 및 사고 대응능력 보유 여성지킴이 양성 및 배치
 - 여성 재난안전요원 활동에 대한 보상 제공
 - 마을단위 성 인지적 재난안전 예방교육 실시 및 확산
 - 민간 재난대응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과 연계

③ 성 평등한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 충남 재난·안전 기본조례 등 재난안전망의 성 인지적 관점 재정비
 - 충남의 관련 위원회 및 기구, 종사자의 성별 균형 확충 및 성인지력 향상
 - 재난안전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 재난안전 의사결정 및 사업심의기구 성별 불균형 개선

- 위원회 위원, 주요 기관 종사자의 성 인지적 재난대응 교육
- 시·군 재난안전망 성 평등성 제고
 - 충청남도의 개선안을 시·군 재난안전 자치조례 반영 및 이행
- ▷ 성 인지적 환경재난 및 사고 대책 마련
 - 성별영향 고려한 재해조사 및 주민지원방안 근거 마련
- ▷ 상생형 민관 안전 거버넌스 구축과 연계, 여성의 주체적 참여 확대

2) 주요지표

주요지표	현재	2020	2025	2030
여성의 주관적 건강평가(건강양호)	44.9%	48%	52%	54%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4.6	100	100	100

* 여성의 주관적 건강평가(건강양호) : 전국평균 43.1%('16) (통계청, 『사회조사』)

*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 전국평균 96.6('14)

3) 추진과제의 단계별 추진 개요

전략10	단기(~2020)	중기(2021~2025)	장기(2026~2030)
모두가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및 중년기 건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성별 건강관리 강화 ▶ 청소년 신체활동 강화 프로그램 확대 ▶ 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신체활동 동아리 결성 및 지원 ▶ 중년여성 신체활동 동우회 결성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시설 및 장비 점검 ▶ 주기적인 청소년 정신건강 평가 ▶ 동단위 중년 클럽 동아리 결성 및 운영 ▶ 산업체에서의 중년 여성의 신체활동 강화 프로그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도시와의 출산 관련 인프라 공동이용제도 확대 ▶ 인근도시 출산관련 기관과의 협약체결 ▶ 분만 취약지 상황 분석 및 대처방안 조사 ▶ 출산관련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활용 ▶ 분만 취약지역 보건의료인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인 단체, 의료보건기관과의 협약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 시스템 수요자 접근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리더, 보건소, 보건의료기관 네트워크구축 ▶ 도민 빅데이터 분석 및 건강 관리 프로그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형평성 관점의 통계 생산 및 활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성질환자 및 환경오염지역 성별 건강 영향자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환경성 질환자 자료 구축 및 모니터링 실시 ▶ 특정 환경오염지역 주민건강영향 모니터링 및 성별 분리 통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성 질환자 성별자료 고도화 ▶ 특정 환경오염지역 성별 주민건강통계 체계화 및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성 질환자 성별자료 고도화 ▶ 특정 환경오염지역 성별 주민건강통계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환경통계 성별 자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환경통계 성별 자료 구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환경통계 성별 자료 구축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재난 여성 안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적 재난안전 매뉴얼 정비완료 ● 성 인지적 환경재난 및 사고 대책 마련 ▶ 재난안전 여성리더 양성 ▶ 성 평등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적 재난안전 매뉴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인지적 환경재난 및 사고 대책 고도화 ▶ 읍면동 재난안전 여성리더 확대 ▶ 기초지자체 성 평등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적 재난안전 매뉴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인지적 환경재난 및 사고 대책 고도화 ▶ 읍면동 재난안전 여성리더 활동 상실화 ▶ 도-시군 성 평등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적 운영

1

행복한 여성 일자리 프로젝트

■ 추진방향

- 지속가능한 여성 일자리 참여 확대와 노동 권익 강화
-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고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 추진과제

-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은 충남
- 여성이 일하기 좋은 충남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은 충남

- √ 여성일자리기관 인프라 강화
 - 광역 인프라 구축 및 권역별 운영 특성화
 - 광역 인프라 구축
 - 새일센터 간 협업사업 추진 및 현장형 컨설팅
 - 권역별, 유형별 협업사업(구인-구직 DB를 활용한 시장분석, 현장형 작은연구 등)
 - 지역 내 부진센터 컨설팅 강화
 - 충남도 새일센터 공동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
 - 수요 밀착형 고용서비스 강화 및 전문직종 훈련 확대
 - 새일센터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유망직종 발굴
 - 고용지원 인력의 고용안정 및 역량 강화
 -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기회 확대
 - 여성일자리 협업 네트워크 강화
 - 시·군 여성일자리 실무협의체 운영·확대

- √ 충남도 취·창업사업 여성 참여 확대
 - 충남도 취·창업사업 개편 및 다양화
 - 충남도 직업훈련 및 창업 프로그램 여성 참여율 제고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한 유망업종 양성과정 운영
 - 여성기업 집중 멘토링, 경영실무교육, 우수기업 벤치마킹 등 경영지원 강화
 - 여성친화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 발굴·훈련과정 운영
 - 사업체 및 여성 구직자 대상 수요조사
 - 권역별 여성특화 프로그램 발굴·육성
 - 취·창업자 사후관리 체계 강화
 - 대상 : 사업 참여자 성별 고용유지 및 생존율 추세 관리
 - 주기 및 방법 : DB구축(연 단위), 충남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시

- √ 커뮤니티 비즈니스 일자리 확대
 - 사회적경제 여성창업 성장 지원
 - 사회적경제 여성창업 특성화 패키지 운영
 - 지역초기 공동체 발굴, 창업초기 컨설팅 및 공간 제공, 프로보노 연계 강화 등
 - 지역 일자리기관과의 고용연계 서비스 강화
 - 지역 일자리기관과 사회적경제 기업 간 고용협의체 구성·운영
 - 일자리기관 훈련생 및 구직자와 사회적경제 기업 간 고용연계

여성이 일하기 좋은 충남

- √ 가족친화경영 확산
 -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컨설팅 지원
 - 기업협의회 및 상공회의소와 연계한 수요조사
 - 가족친화지원센터 : 가족친화 교육 및 컨설팅
 - 가족친화기업 인센티브 제공 확대
 - 충남도 기업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입찰계약, 고용우수기업, TP입주기업, 근로자 가족돌봄휴가·남성육아휴직 사용률 가점
 -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할인
 - 가족친화기업 근로자의 지자체시설 사용료 및 관람료 감면
 - 가족친화기업 홍보
 - 충남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사례 홍보

√ 여성노동자 노동인권 강화

- 충남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 노동정책협의회 구성·운영 : 성비 균형 조항
 - 성별에 따른 차별해소 조항
 - 여성, 초단기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노동약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 포함
-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 마련
 - 감정노동가이드라인 조례 제정(실태조사, 토론회 등)
 - 민간부문 실천협약 체결
- 충남노동인권센터 내 여성고용평등상담실 운영
 - 전담인력 배치
 - 노동권 확보·모성보호 상담 및 분쟁해결 지원
 - 노동교육 및 노무상담, 고충처리(근로조건 차별, 힘희롱·성희롱, 모성휴가 및 직장복귀 고충 등), 분쟁해결 지원
 - 사례집 발간
-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확대
 - 계약·입찰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육성 자금 우대,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등

◆ 달성목표

주요목표	현재	2020	2025	2030
사회적경제 기업 수	610개소	750개소	900개소	1,000개소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수	-	5개소	10개소	15개소

* 사회적경제 기업('16년 11월) :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수('16년) : 남녀고용평등분야 16개(전국), 충남도 '16년 선정 기업 없음

■ 추진방향

- 공공·민간부문에서의 동등한 참여 실현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성평등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 추진과제

- 남녀동수 참여
- 성평등 거버넌스 실현

남녀동수 참여

- √ 공공부문 여성의 의사결정권한 확대
 - 5급 이상 공무원 성별비율 형평성 제고
 - 5급 이상 성평등 임용목표 수립 및 이행
 - 인사제도 성인지적 분석 및 개선계획 수립
 - 기획-인사-감사-예산 등 주요부서 우수 여성공무원 전략적 배치
 - 공공기관(출연기관 등) 관리직 성별비율 형평성 제고
 - 공공기관 인사제도 성인지적 분석 및 개선계획 수립
 - 매년 공공기관 대표성 부문 성별통계 생성 및 공시를 통한 자발적 개선 유도
 - : 최고직 성별현황, 고위직(임원) 성별 현황, 관리직 성별 현황, 주요 위원회 성별 현황
 - 공공기관 대표성 부문 성별 균형성 확보 실적 경영평가에 반영
- √ 도민참여기구 여성 참여 확대²⁾
 - 도민참여기구 위촉직 여성비율 확대
 - : 매년 도민참여기구 성별통계 생성 및 이행점검

2) 도·시군 위원회를 통한 정책참여(도·시군 위원회 959개, 전체인원 9,092명, '15년 12월말 기준)
:여성위원 신규 발굴인원 수(2개 위원회 중복참여 기준) '20년 35%(474명)→'25년 40%(701명)→'30년 50%(1,156명)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도민이 참여하는 모든 협치기구)

※[특별] 성별, 연령별 비율, 여성농업인, 장애여성, 이주여성 참여비율 별도 표기

- 도 소관 위원회 관련 조례 전반적 검토 및 개정
: 위촉직 위원 비율 적정성 및 자격기준 개정을 통하여 여성참여 확대 법적 기반 조성

성평등 거버넌스 실현

- √ 성평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
 - 성평등 거버넌스 거버넌스팀 신설
 - 성평등거버넌스 정책 총괄 기획·조정 기능 수행
 - 성평등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도민참여기구 구성·운영
 - 성평등 거버넌스 전문인력 개방형 전문직위제 운영
 - 성평등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충남 성평등 거버넌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분야별로 도민, 의회 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 참여
: 양성평등비전2030 실현 시민협약 추진, 의제별 이행점검, 공감대 확산
 - 충남도 각 부서 공무원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분야별 성평등 정책 심의, 조정, 자문 등 내부협력체계
 - 도 및 시군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도 및 시군 성평등 정책 관련 제도·사업 공유, 개선방안 논의 등
 - 충남여성인재DB 구축
 - 충남도 인재풀관리시스템 내 여성인재DB 구축 및 관리기능 강화
: 분야별, 성별, 연령별 DB수록 비율 관리(※특별: 이주여성, 장애여성, 여성농업인 비율 관리)
- √ 여성·시민사회 활동 발굴 및 활성화 지원
 - 여성·시민사회 활동 발굴 및 활성화 지원
 - 여성 풀뿌리소모임 대상 공모사업 신설 운영
: 마을단위 성평등 관점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 시군단위 '작은' 젠더거버넌스 사업 개발·운영
: 사업모델 개발-성평등 정책 의제 발굴 및 제안, 사업반영, 환류 일련의 과정

- 여성·시민사회 핵심 활동가 역량강화(대학과 연계한 장기교육)
- 여성단체·소모임 DB 구축 및 네트워크 조성
 - : 교류사업 운영: 양성평등주간사업 참여, 공익활동지원센터 교류사업 참여 연계 등
 - : 충남 여성단체·소모임 대표 연대회의 구성 및 협력사업 실시
- 여성·시민사회 활성화 허브(Hub) 조직 설치
 - : 민·관 매개역할 수행 및 여성·시민사회 여성·시민사회 참여역량 강화 전담 지원
(광역단위 운영 → 시군단위 운영모델 개발 후 시군 확산 → 민간 여성단체 단계별 이관)
- 성평등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모델 개발 및 추진
- 여성·시민사회 성평등 리더십 강화, 성평등 의제개발 능력 강화
-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사업 운영

◆ 달성목표

주요목표	현재	2020	2025	2030
도·시군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³⁾	24.6%	40%	45%	50%
여성·시민사회 활성화 허브조직	-	광역1 기초5	기초5 (추가)	기초5 (추가)

3

따뜻하고 안전한 마을 프로젝트

■ 추진방향

- 공공 돌봄시스템 구축을 통한 여성노인 및 아동의 돌봄안전망 강화
- 도민의 주체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젠더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방

■ 추진과제

- 마을단위 돌봄 안전망 확대
- 안전한 마을공동체 확산

3) (도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시군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2: 도 위원회 31%(‘16.9월말), 시군 위원회 23.8%(‘15.12월말)
(※‘15년 충남 24.6%, 전국평균 30%, 전국1위 39.2%)

마을단위 돌봄 안전망 확대

- √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도 확대
 - 마을단위 독거노인 공동생활 주거공간 확대 및 지원
 - 마을회관, 경로당, 빈집 등을 활용하여 독거노인의 공동생활 지원으로 정서적 고립감 완화 및 생활안전 도모
 - 독거노인 공동취사 및 숙박지원
 - 공동생활가정 노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 √ 보육(육아) 품앗이, 공동육아 나눔터 모델개발 및 확산
 - 마을단위 지역공동체 돌봄 모델 확산
 - 세대간 통합모델(어르신 육아도우미 활용) 확대

- √ 아이돌봄 공백(틈새) 시간 지원 체계 확대
 - 여성농업인 농번기 주말 돌봄방 확대
 - 맞벌이 부부의 돌봄 틈새시간 지원 서비스 확대
 - 개별적인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확대
 - 야간, 주말, 휴일 등에 교사 4인이 교대 근무로 휴일 보육서비스 제공(기존 어린이집 전환)

안전한 마을 공동체 확산

- √ 내가 만들고 지키는 폭력제로 마을 만들기
 -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마을만들기 기획단 운영
 - 주민, 마을활동가, 젠더폭력 관련 전문가, 경찰서(파출소, 지구대), 자율방범대, 지역 복지 관련 시설·기관의 참여
 - 도내 시군별 가족폭력 피해자와 멘티 상담활동가 연결,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자조모임 운영
 - 가정폭력 피해자의 중복피해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자원 연계
 - 가정폭력 피해 우려가 있는 가정 발굴 및 자원 연계
 - (현) 여성가족부 아동·여성 지역 안전 프로그램 사업과 연계
 - 기존 시행지역 외 미시행 지역 연차별 확대

√ 우리마을 안전·사업 운영

- 시범지역 선정(읍면동 단위)
 - 단독,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1인 여성인구가 많은 지역, 슬럼화 등으로 방법 취약 지역 위주 선정
- 안전·안심마을 모니터링단 파견
 - 선정된 마을에 주민 참여지원, 주민참여 사업 기획 및 수행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젠더폭력 전문가, 도민 모니터링단으로 구성
- 사업 프로그램 운영
 - 마을안전도 점검, 폭력안전 자원 탐색, 주민 협업·참여 프로그램 운영
 - 주민대상 젠더폭력 이해 및 반폭력 의식 교육
- 공모 신청 후 선정
 - 공모자격은 젠더폭력예방에 관심이 있는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 매년 2개소(18~20년)→3개소(21~24년)→5개소(25~30년)로 사업지역 단계별 확대
 - 선정마을은 2년 간 지원, 2년 주기로 신규 마을 선정
- 사업운영 마을 간 네트워크 형성
 - 도시형, 농촌형 모델 발굴
 - 정보공유와 사업 프로그램 확대

√ 폭력안전지킴이 여성리더 양성

- 여성이 마을안전의 주체가 되어 안전취약 요소 발견·발굴
 - 파출소, 지구대의 순찰·치안업무, 관련 지원기관과 연결
 - 우리마을 안전·안심사업과 연계
- 우리마을 안전·안심사업의 주요 활동가로 양성 및 활용
 - 선정마을 당 10~15명 규모 모집, 선발, 사전교육
 - 근무수당 지급 및 관리
 - 우수 활동가 포상

◆ 달성목표

주요목표	현재	2020	2025	2030
마을공동체 돌봄모델 개발 확산	-	5마을	20마을	30마을
우리마을 안전·안심 사업	-	6마을	15마을	25마을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의 실현

제1절 비전의 실현

1. 비전의 실현

■ 조직

- 성평등 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성평등 관점의 행정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행정조직의 개편 및 구성
- 성평등 정책 추진 전담부서의 설치와 인력 보강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 주류화 제도의 총괄 관리
- 성평등 정책의 기획·집행·성과점검·평가의 환류 시스템 구축

■ 촉진자

- 성평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결과적으로 성평등 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촉진자’로서 총 7,300명을 양성
- 비전 실현 과정에서 양성된 성평등 촉진자는 성평등 정책을 도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충남의 성평등 문화의 확산과 성평등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게 될 주체
- 10대 추진전략별로 보면, 젠더혁신 시스템 구축 전략에서 937명, 여성 임파워먼트 전략에서 1,961명, 가족의 다양성 인정과 지원 전략에서 415명, 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전략에서 210명,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른 자원 배분 전략에서 311명,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전략에서 1,665명, 모두가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전략에서 1,390명을 양성

■ 예산

- 성평등 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비전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전체 예산 중 성인지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인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의 비율을 연차적으

로 상향하도록 함

- 16년 현재, 성인지 예산의 비율은 5.9% 수준에 불과하나 2030년에는 충청남도 전체 예산의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함



<그림 5-1> 비전의 실현

2. 비전 실현 주체의 역할

■ 충청남도의 역할

- 비전의 실현은 도 및 시군, 유관기관과 단체를 포함하는 시민사회 영역, 도민이 함께 협력할 때, 그 성과가 증대될 수 있음
- 우선, 충청남도는 비전과 관련한 세부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하며,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함
- 또한, 시군과의 협력망을 구축하여 비전의 각 정책들이 시군 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사회, 도민과 거버넌스 방식의 협력망을 확대해나가야 함

■ 시민사회의 역할

- 다양한 영역의 유관기관과 민간단체를 포괄하는 시민사회 영역은 도와 시·군 성평등 정책 실행의 주요한 협력 파트너임

- 또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매개하는 창구로서 성평등 비전 실현을 가시화하는 역할을 담당

■ 도민의 역할

- 도민은 비전 실현과 관련한 정책들에 있어 성평등 촉진자로서 참여하며, 정책 추진의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비전 실현 과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
- 또한 일상생활에서 성평등을 실천하는 주체로서, 결과적으로 충청남도의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

제2절 점검 체계

1. 비전 실현 점검 체계

■ 충남양성평등위원회

-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의 추진 점검을 위한 최상위 단위로서 충남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 운영함
- 충남양성평등위원회는 「충남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의거 구성·운영되고 있는 양성평등 위원회의 기존 기능에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의 추진을 점검, 자문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비전 실현의 점검의 추진체계가 행정 주체와 민간 영역의 전문가, 도민이 결합하여 거버넌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화함

■ 양성평등운영위원회

- 분과위원회와 도 실국 및 시군의 관련 부서의 기능을 연결·조정함으로써 비전 실현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분과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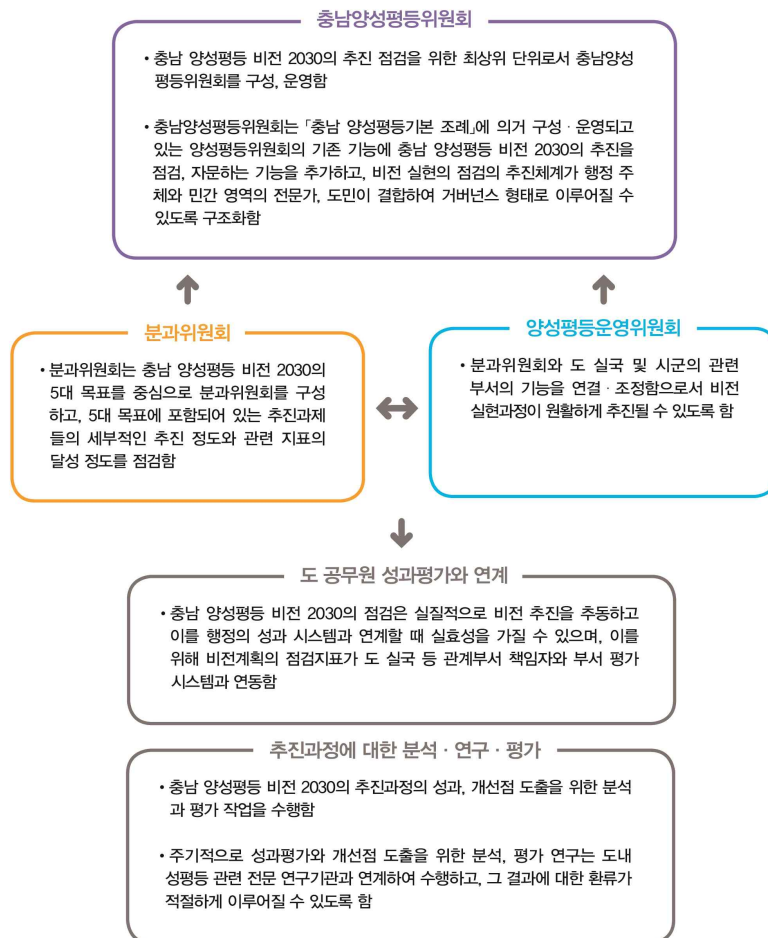
- 분과위원회는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의 5대 목표를 중심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5대 목표에 포함되어 있는 추진과제들의 세부적인 추진 정도와 관련 지표의 달성 정도를 점검

■ 도 공무원 성과평가와 연계

-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의 점검은 실질적으로 비전 추진을 추동하고 이를 행정의 성과 시스템과 연계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비전계획의 점검지표가 도 실국 등 관계부서 책임자와 부서 평가시스템과 연동

■ 추진과정에 대한 분석·연구·평가

-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의 추진과정의 성과, 개선점 도출을 위한 분석과 평가 작업을 수행
- 주기적으로 성과평가와 개선점 도출을 위한 분석, 평가 연구는 도내 성평등 관련 전문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환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그림 5-2> 비전 실현 점검을 위한 추진체계

2. 점검지표

■ 전략별 주요지표

<표 5-1> 10대 추진전략별 주요 점검지표

10대 전략	주요 지표
① 젠더 혁신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결산 성과목표 달성률 미실시 → 매년 2%상승 ■ 공무원 성평등교육 이수율 50% → 100% ■ 성인지예산 비율 5.9% → 20%
② 여성 임파워먼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분야 지역성평등지수 14.4 → 40.0 ■ 도·시군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24.6% → 50%
③ 돌봄의 공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형 어린이집 비율 5.2% → 12% ■ 총남형 아동수당 지원을 미실시 → 95%
④ 일과 생활의 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기업(기관) 수 59개 → 150개 ■ 가사노동 공평한 분담비율 19.6% → 75%
⑤ 가족의 다양성 인정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구성방식 수용도 36.6% → 60%
⑥ 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만족도 성비 81.1 → 97.0 ■ 남성의 성평등의식 수준(4점 척도) 2.62 → 3.50
⑦ 평등한 일터, 좋은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68.0 → 80.0 ■ 성별 임금격차 59.8 → 64.0 ■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75.7 → 78.0
⑧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른 자원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중위소득 52% → 75% (가족유형 구분없이 동일지원) ■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68.4 → 90.0 ■ 장애여성 경제활동참가율 20.2% → 60%
⑨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사회안전 인식 성비 52.4 → 80.0 ■ 인구10만명당 성폭력발생 39.7 → 30.0
⑩ 모두가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주관적 건강평가(건강양호) 44.9% → 54.0% ■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4.6 → 100.0

■ 미래 성평등 충남의 변화

- 성평등의 가치와 관점이 행정 시스템과 정책 추진의 과정에서 안착되어 실현되는 충남
- 정책추진과 행정이 민관협치를 통해 이루어지고, 주민이 중심인 주민자치가 확대되며, 그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영향력이 늘어나는 충남
- 많은 여성들이 주민을 대표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다양한 분야의 조직·단체들을 이끄는 핵심주체로서 역할을 하는 충남
-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절대빈곤층이 감소하고, 그 가운데 여성의 빈곤화 현상도 완화되어 살기 좋은 충남
- 경력단절 여성이 없는 충남, 여성들의 좋은 일자리가 가득한 충남
-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아동, 노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이 누구나 사회적 돌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가득한 충남
-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충남
-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지원 시스템이 갖추어져 누구나 건강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충남
- 이주여성, 장애여성, 청소년의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고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충남

<표 5-2> 성평등 충남의 현재와 미래

구분	현재	2030년	도달수준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고용구조에서 성불평등 만연 ▶ 경력단절 여성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이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 조성 ▶ 여성의 고용증가 	<p>【성평등 지수】 현재 67.8 → 74.0</p>
의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사회, 경제, 정치 영역에서의 권한 수준이 매우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영역에서의 여성의 주체적인 참여와 동등한 권한 수준 도달 	<p>【성평등 지수】 현재 14.4 → 40.0</p>
교육· 직업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직업훈련에서 성별격차 상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등한 교육수준과 역량 도달 	<p>【성평등 지수】 현재 92.3 → 100.0</p>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탈출 및 자립기반 취약 ▶ 빈곤의 여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빈곤문제 해소 ▶ 여성의 빈곤화 현상 완화 	<p>【성평등 지수】 현재 67.8 → 89.0</p>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 지원 서비스 인프라 및 사업의 균형성, 평등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노후보장 ▶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지원 시스템 마련 	<p>【성평등 지수】 현재 95.5 → 100.0</p>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에 대한 폭력의 만연 ▶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주환경 ▶ 폭력예방과 피해지원 시스템의 강고한 구축 	<p>【성평등 지수】 현재 53.1 → 80.0</p>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부장적 가족관계 및 가족문화의 잔존 ▶ 가족 내 돌봄부담, 특히 여성의 높은 부담과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한 가족문화 ▶ 일-생활의 균형을 이룬 삶 가능 	<p>【성평등 지수】 현재 66.6 → 81.0</p>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 정보접근, 활용에서의 성별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한 문화와 여가생활 영위 	<p>【성평등 지수】 현재 82.7 → 92.0</p>

<표 5-3> 미래 충남의 성평등 도달 수준

구분	현재 (충남)	(비고)	2030년 도달	2030년 도달	충남의 도달수준
			예상수준 (전국1위)	예상수준 (충남)	
경제	67.8 (전국11위)	전국평균 68.3 전국1위 73.7	79.0	74.0	중상위
의사결정	14.4 (전국14위)	전국평균 23.3 전국1위 39.8	45.0	40.0	중상위
교육· 직업훈련	92.3 (전국12위)	전국평균 93.4 전국1위 96.0	100.0	100.0	상위
복지	67.8 (전국12위)	전국평균 74.6 분야1위 80.6	90.0	89.0	상위
건강	95.5 (전국13위)	전국평균 96.1 분야1위 98.5	100.0	100.0	상위
안전	53.1 (전국13위)	전국평균 61.0 분야1위 72.7	83.0	80.0	중상위
가족	66.6 (전국5위)	전국평균 65.3 분야1위 73.4	83.0	81.0	상위
문화	82.7 (전국13위)	전국평균 86.0 분야1위 91.5	96.0	92.0	중상위





<그림 5-3> 미래 충남의 성평등 도달 수준

부록

[부록] 추진과제의 추진 시점

※ 2017년 1월 충청남도 기구개편(안)에 따른 부서 명칭 사용

추진전략 1

젠더혁신 시스템 구축

추진과제	세부과제	사업내용	담당부서 (과 단위)	2017	2018	2019	2020	2021 ~24	2025~ 30
1-1 성평등 정책 환경 조성	1-1-1 젠더 행정시스템 혁신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여성가족정책관 혁신담당관 자치행정과	★ (성평등팀)		★ (성평등 담당관)			
		성평등·인권증진국 신설	자치행정과						★
		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강화	여성가족정책관		★				
	1-1-2. 공무원 성평등정책 실행력 강화	성인지정책 역량강화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여성가족정책관	★					
		성인지 행정통계 생산	기획관	★					
1-2 젠더거버넌스 강화	1-2-1. 젠더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	젠더거버넌스 전담 행정조직 신설 - 젠더거버넌스 담당 설치('17~) - 개방형 전문직위제 운영('18~)	여성가족정책관	★					
		젠더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및 운영('17~) - 광역단위 운영('17~) - 시군 시범운영, 확산('18~)	여성가족정책관	★					
		충남여성인재DB 구축('17~)	기획관	★					
	1-2-2. 여성·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여성·시민사회 활동 발굴 및 활성화 지원 - 여성 풀뿌리소모임 공모사업 신설('17~) - 시군 작은 젠더거버넌스 사업 개발·운영('18~) - 여성단체·풀뿌리 활동가 역량강화(대학연계 장기교육)('21~)	여성가족정책관	★					
		- 여성단체·소모임 DB 구축('17~) - 여성단체·소모임 네트워크 조성('17~) - 여성단체·소모임 대표 연대회의('20~)							
		여성·시민사회 활성화 허브(Hub)조직 설치 -광역 1개소('18), 기초 3개소('18~'20) -기초 7개소('21~'25) -기초 5개소('26~'30)	여성가족정책관			★			

추진과제	세부과제	사업내용	담당부서 (과 단위)	2017	2018	2019	2020	2021 ~24	2025~ 30	
2-1. 남여동수 참여 실현	2-1-1. 여성 참여비율 제고	5급 이상 공무원 성별비율 관리·이행점검('17~)	인재육성과	★						
		공공기관(출연기관 등) 관리직 성별비율 관리·이행점검	혁신담당관							
		-인사제도 성인지적 분석('17)		★						
		-매년 성별통계 생산, 공시('18~)			★					
		-경영평가 반영('21~)						★		
		민간기업 관리직 성별비율 조사 및 공시	일자리노동정책과							
		-충남형 고용평등지표 개발('17) (여성대표성 측정)		★						
		-충남형 고용평등지표 조사, 공시('18~)				★				
	-충남형 고용평등우수기업 지정('18~)				★					
	2-1-2. 여성 참여역량 강화		민관협치기구 성별비율 관리 및 이행 점검	여성가족정책관						
-민관협치기구 위촉직 여성비율 점검('17~)				★						
-위원회 조례 검토 및 개정('18~)						★				
여성 관리자 역량강화(공무원)('17~)			인재육성과	★						
2-2. 여성농업업인·이주여성·장애여성 임파워먼트	2-2-1. 여성농업인의 경영지위 향상	여성 관리자 역량강화(공공기관)('18~)	혁신담당관			★				
		여성 관리자 역량강화(민간기업)('18~)	일자리노동정책과			★				
		여성 정책 참여역량강화 교육 체계 수립·운영('17~)	여성가족정책관	★						
	2-2-2. 이주여성의 정책참여 활성화	이주여성의 정책파트너 위상 강화	여성가족정책관					★		
2-2-3. 장애여성의 사회참여역량 향상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대	농업정책과	★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여건 개선	농업정책과	★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지원 시스템 강화	농업정책과	★						
장애여성 학력수준 향상	장애인복지과	★								
장애여성 맞춤형 자격증 취득	장애인복지과	★								
장애여성 교육 바우처 도입	장애인복지과			★						

추진과제	세부과제	사업내용	담당부서 (과 단위)	2017	2018	2019	2020	2021 ~24	2025~ 30
3-1. 노인 돌봄 공공성 확립	3-1-1.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도시-농촌 간 돌봄 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대책과		★				
		지역 내 돌봄 접근성 확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	
	3-1-2. 공공체 돌봄 확대	따로 또 같이 사업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건축도시과						★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도 확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					
		성별 특성을 고려한 여가프로그램 확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					
	3-1-3. 노인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대	공공형 노인요양기관 확대를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	저출산고령화대책과		★				
3-2. 아동양육지원정책 확대	3-2-1. 수요자 중심 아이돌봄 지원 체계 강화	보육(육아)폼앗이, 공동육아 나눔터 등 모델 개발 및 확산	저출산고령화대책과			★			
		아이 돌봄 공백(틈새)시간 지원체계 확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				
		충남형 아동수당 신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
	3-2-2. 아동 돌봄 네트워크 구축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연계 및 확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				
		방과 후 초등돌봄 네트워크 (학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강화	복지정책과	★					
	3-2-3. 충남형 공공 어린이집 인프라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평가 후 전환, 인건비 지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					
		신규 아파트(300세대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유도·확충	저출산고령화대책과	★					
		산단형 직장어린이집 확충	저출산고령화대책과	★					

추진과제	세부과제	사업내용	담당부서 (과 단위)	2017	2018	2019	2020	2021 ~24	2025~ 30
4-1. 성평등한 사회환경조성	4-1-1. 자기 돌봄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	자기돌봄을 위한 주민 휴식공간 설치(2018~)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 돌봄제공자의 자기돌봄 지원(2020~)	여성가족정책관 복지정책과				★		
4-2 성평등한 노동환경조성	4-2-1. 고용의 지속성 강화	가족친화경영 확산	여성가족정책관	★					
		남녀가 평등한 기업문화 확산	일자리노동정책과		★				
		일-생활 균형 지원 인프라 확대	여성가족정책관		★				
4-3. 성평등한 가족생활조성	4-3-1. 성평등 가족문화 실현	성평등 가족문화 의식 확산(2018~)	여성가족정책관		★				
		성평등 가족 문화 확산의 남성참여 확대(2018~)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				

추진과제	세부과제	사업내용	담당부서 (과 단위)	2017	2018	2019	2020	2021 ~24	2025~ 30
5-1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수용성 증진	5-1-1. 다양한 가족에 관한 사회적 인식개선	가족의 다양성 존중과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17년~)	여성가족정책관	★					
		다양한 가족의 정책욕구 반영(2018~)	여성가족정책관		★				
	5-1-2. 다양한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정보망 확대(2018~)	여성가족정책관		★				
5-2 가족 지원 기반 강화	5-2-1. 가족환경 변화에 따르는 가족정책 개선	총괄적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가족 전담부서 기능 확대(2018~)	여성가족정책관		★				
		충남형 가족지원 기관 모델 개발(2018~)	여성가족정책관		★				
	5-2-2. 가족지원 정책 주요 전달 체계 개선	가족지원 기관의 특성화 및 중점기능 수행(2019~)	여성가족정책관			★			

추진과제	세부과제	사업내용	담당부서 (과 단위)	2017	2018	2019	2020	2021 ~24	2025~ 30
6-1 성평등 문화생태 네트워크 구축	6-1-1. 지역여성문화 자원 발굴	여성문화자원 발굴 네트워크	문화정책과		★				
		여성문화자원의 콘텐츠화	문화정책과	★					
		충남여성문화 정보공유창고(아카이브) 구축	문화정책과						★
	6-1-2. 성평등 문화 마을 인큐베이팅	여성 동네문화기획자 양성	문화정책과		★				
		여성문화인력 네트워크	문화정책과				★		
		마을단위 소규모 문화창작공간(사랑방) 확대	문화정책과				★		
6-2 도민의성평등 의식강화	6-2-1. 생애주기별 양성평등 교육	성평등 교육 추진체계 구축	여성가족정책관	★					
		성평등 교육 확대	여성가족정책관	★					
	6-2-2. 성평등 콘텐츠 및 활용능력 확대	평생교육 성평등 콘텐츠 활용 및 확대	여성가족정책관 평생교육진흥원	★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 및 콘텐츠 공모전	공보관		★				
		시니어 성평등 미디어 인큐베이팅	공보관				★		

추진전략 7

평등한 일터, 좋은 일자리

추진과제	세부과제	사업내용	담당부서 (과 단위)	2017	2018	2019	2020	2021 ~24	2025~ 30
7-1 일자리의 고용평등 강화	7-1-1. 일터 혁신 프로젝트 추진	성별 고용평등지표 관리	일자리노동정책과		★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 확산 성별 모니터링	일자리노동정책과				★		
		여성노동자 노동인권 강화	일자리노동정책과			★			
7-2 좋은 일자리 확대	7-2-1. 지속가능한 여성 일자리 확대	충남도 여성일자리지원 시스템 강화	여성가족정책관	★					
		충남도 취·창업사업 여성 참여 확대	일자리노동정책과		★				
		커뮤니티 비즈니스 일자리 확대	경제정책과 일자리노동정책과	★	★				

추진과제	세부과제	사업내용	담당부서 (과 단위)	2017	2018	2019	2020	2021 ~24	2025~ 30
8-1 빈곤탈출 성인지 정책강화	8-1-1. 사각지대 빈곤 발굴 및 지원 확대	숨겨진 노인빈곤 지원 확대	복지정책과		★				
		생활임금 민간부문 확대	경제정책과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여성가족정책관				★		
		빈곤여성 생애설계 지원 확대	복지정책과				★		
	8-1-2. 저소득층 주거 빈곤 해소	주거의 질적 지원 강화	복지정책과 건축도시과		★				
		충남형 공동체 주거모델 확산	복지정책과 건축도시과			★			
8-2 이주여성·장애여 성의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8-2-1. 이주여성의 취·창업 지원 체계화	결혼이주여성 취·창업 지원 체계화	여성가족정책관	★					
		사회적경제 분야 결혼이주여성 공동체 일자리 확대	여성가족정책관	★					
	8-2-2. 장애여성 취·창업기반 강화	장애여성 특화형 사업장 모델 개발	경제정책과 장애인복지과	★					
		장애여성 취창업 지원 강화	장애인복지과	★					
		성별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장애인복지과			★			
	8-3 위기 청소년 자립지원강화	8-3-1. 청소년 위기단계별 성별 지원 체계 강화	위기에방 인프라 확대를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	여성가족정책관	★				
초기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위기보호 서비스 확충			여성가족정책관		★				
경제적 및 심리 정서적 자립 지원체계 구축			여성가족정책관	★					

추진과제	세부과제	사업내용	담당부서 (과 단위)	2017	2018	2019	2020	2021 ~24	2025~ 30
9-1 반(反)폭력 의식의 확산	9-1-1. 폭력예방교육 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교육콘텐츠 개발	여성가족정책관		★				
		예방교육 액션플랜 수립	여성가족정책관	★					
		생애주기별 젠더폭력 예방교육 확대	여성가족정책관	★					
9-2 젠더폭력 예방과 피해회복 지원체계 강화	9-2-1.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공익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여성가족정책관				★		
		초기대응 시스템 구축 -초기대응 솔루션 협의체 운영(17~) -지원기관 연계 가이드라인 제작(18~) -시군 폭력피해자 임시보호시설(20~) -해바라기센터 증설(25~) -가정폭력 가정 가족상담 지원(18~)	여성가족정책관	★					
		피해지원 종사자 역량강화	여성가족정책관	★					
	9-2-2. 폭력 취약계층 인권보호 강화	이주여성 폭력긴급보호 체계 강화	여성가족정책관			★			
		여성장애인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여성가족정책관		★				
		여성노인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여성가족정책관				★		
	9-2-3. 성매매 클린 총남 만들기	성매매 감시체계 및 집행력 강화 - 성매매집결지 폐쇄(20~) - 성매매특별사법경찰 신설(25~)	안전정책과 여성가족정책관				★		
		성구매 대상자 및 탈성매매자 자립 지원	여성가족정책관				★		
		위기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	여성가족정책관		★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정책관				★		

추진과제	세부과제	사업내용	담당부서 (과 단위)	2017	2018	2019	2020	2021 ~24	2025~ 30
9-3 촘촘한 폭력안전망 구축	9-3-1. 폭력범죄예방 시스템 강화	범죄예방디자인 환경개선 사업 확대	도시건축과	★					
		빅데이터 범죄 대응시스템 구축	여성가족정책관 경찰청				★		
		젠더폭력 통계 생산 및 구축	여성가족정책관		★				
	9-3-2. 마을중심 안전네트워크 강화	내가 만들고 지키는 폭력제로 마을만들기	여성가족정책관		★				
		우리마을 안전·안심사업 운영	여성가족정책관				★		
		폭력안전지킴이 여성리더 양성	여성가족정책관				★		

추진전략 10

모두가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과제	세부과제	사업내용	담당부서 (과 단위)	2017	2018	2019	2020	2021 ~24	2025~ 30
10-1 도민의 건강 형평성강화	10-1-1. 성인지적 생애주기별 건강지원	건강관련 지표 성별통계 생산 및 관리	건강증진식품과	★					
		청소년 성별 건강관리 강화	건강증진식품과		★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건강증진식품과		★				
		중년기 성별 건강증진 강화	건강증진식품과		★				
		노년기 성별 건강증진 강화	건강증진식품과		★				
	10-1-2. 보건의료시스템의 수요자 접근성 강화	보건의료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보건정책과			★			
		주민리더, 보건소, 보건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보건정책과	★					
	보건의료 인력의 성인지력 강화	보건정책과	★						
10-2 환경정책의 성인지적관리체계 구축	10-2-1. 환경오염지역 성별 건강 영향자료 구축	환경성 질환자 성별 모니터링 실시	환경보건과		★				
		특정오염지역 건강 모니터링 실시 및 성별 분리통계 작성	환경보건과	★					
10-3 재해재난 성인지적대응체계 구축	10-3-1. 재해재난 여성 안전 강화	성인지적 재해재난 매뉴얼 정비 및 시행	재난대응과		★				
		재해재난 방지 관련 여성리더 양성	재난대응과		★				
		성평등한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재난대응과		★				

[부록] 핵심과제 목록

추진전략	추진과제	핵심과제
젠더혁신 시스템 구축	1-1 성평등 정책 환경 조성	▶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1-2 젠더거버넌스 강화	▶ 젠더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 여성·시민사회 활성화 허브조직 설치
여성 임파워먼트	2-1 남녀동수 참여 실현	▶ 공공부문 관리직 성별비율 관리 및 이행점검
	2-2 여성농업인·이주여성·장애여성 임파워먼트	▶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대
돌봄의 공공성 강화	3-1 노인돌봄 공공성 확립	▶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도 확대
	3-2 아동양육 지원 정책 확대	▶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일과 생활의 균형	4-2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 가족친화경영 확산
	4-3 성평등한 가족생활 조성	▶ 성평등 가족문화 확산의 남성참여 확대
가족의 다양성 인정과 지원	5-2 가족 지원 기반 강화	▶ 가족지원 기관의 특성화 및 증점기능 수행
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6-1 성평등 문화생태 네트워크 구축	▶ 여성문화자원의 콘텐츠화
	6-2 도민의성평등 의식강화	▶ 성평등 교육 확대
평등한 일터, 좋은 일자리	7-1 일자리의 고용평등 강화	▶ 여성노동자 노동인권 강화
	7-2 좋은 일자리 확대	▶ 충남도 여성일자리지원 시스템 강화
사회적약자에 대한 고른 자원 배분	8-1 빈곤탈출 성인지 정책 강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8-2 이주여성·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	▶ 장애여성 특화형 사업장 모델 개발
	8-3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 초기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위기보호 서비스 확충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9-1 반(反)폭력 의식의 확산	▶ 생애주기별 젠더폭력 예방교육 확대
	9-2 젠더폭력 예방과 피해회복 지원체계 강화	▶ 초기대응 시스템 구축
	9-3 촘촘한 폭력안전망 구축	▶ 우리마을 안전·안심사업 운영
모두가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10-1 도민의 건강 형평성강화	▶ 건강관련 지표 성별통계 생산 및 관리
	10-2 환경정책의 성인지적 관리체계 구축	▶ 특정오염지역 건강 모니터링 실시 및 성별 분리통계 작성
	10-3 재해재난 성인지적 대응체계 구축	▶ 성인지적 재해재난 매뉴얼 정비 및 시행

[부록] 참여한 명단

□ 비전위원회 명단

구분		성명	소속/직위
공동	위원장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위원장	지은희	전)여성부 장관 전)덕성여대 총장
위원		권태선	허핑턴코리아 사장
위원		김양희	젠더&리더십 대표 여성환경연대 대표
위원		김효선	여성신문사 사장
위원		김화중	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위원		맹정호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위원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위원		박영숙	청양여성행복네트워크 대표 전)여성민우회생협 이사장
위원		변재란	순천향대 영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위원		우주형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교수
위원		장화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장
위원		전경자	순천향대 간호학과 교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지역건강연구실장
위원		안정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원장
위원		이고운	전)경인방송 PD 여성다큐영화 제작감독
위원		초의수	부산복지개발원 원장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원		최일성	한서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 전문가위원회 명단

분야	성명	소속/직위
복지	김 영 미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 다 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 재 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재 완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 진 석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제&교육	김 우 영	공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권 정 숙	청운대학교 교직학부 교수
	조 현 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건강	김 남 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 진 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강 암 구	우송대학교 보건의료경영과 교수
	이 건 정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젠더폭력	박 진 경	인천대학교 기초과학원 교수
	조 주 은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위원
	황 정 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 달 숙	백석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 교수

분과	성명	소속/직위
대표성 & 의사결정	양민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양교육권 전임교수
	박영미	풀뿌리여성센터 바람 운영위원
	문경희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성주류화 제도	윤금이	아산시 여성정책보좌관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사
	강남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대표
	조혜경	전)충북발전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가족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혜경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신희정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온정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수정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순희	배재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심미선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전성환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윤정욱	농촌문화기획자

분과	성명	소속/직위
환경&농업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국장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평주	충남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김은경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
	오미란	지역고용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특별분야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센터장
	이영미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채식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진

구 분	성 명	소속/직위
연구책임	김 영 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기획조정실장
공동연구	김 종 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수석연구위원
공동연구	우 복 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송 미 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임 우 연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안 수 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태 희 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김 지 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조 윤 진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공동연구	이 채 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공동연구	이 경 하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공동연구	박 민 아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담연구원
공동연구	김 희 경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공동연구	김 종 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공동연구	임 연 희	디트뉴스24 총괄팀장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5, 『EDI2015장애인통계』 .
- 국가인권위원회, 2013, 『농축산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
- 경찰청, 각년도, 『경찰범죄통계』 .
- 김은경 외, 2014, 『Post-2015 개발체제에서 젠더의제 분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종철, 2014, 『충남 남성의 성평등 인식 및 생활 실태조사』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김종철, 2015, 『충남 6차산업의 여성 참여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농림축산식품부, 2013. 『여성농업인실태조사』 .
- 농림축산식품부, 2014, 『보도자료』 (4.3).
- 농림축산식품부, 2016, 『제4차(16-20)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
- 보건복지부, 2014, 『2014 장애인실태조사』 .
- 보건복지부, 2015, 『건강보험통계』 .
- 서울특별시, 2014,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
- 송미영, 2011, 『충남여성노인의사회적통합방안』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송미영, 2016, 『젠더브리프』 18호, “충남 청소년의 위기실태조사의 함의: 성별위기 결과 및 위기보호수준의 차이”,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아산이주여성연대토론회, 2016, 『이주여성의 노동의 현실과 대안』 .
- 여성가족부, 2015,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 .
- 여성가족부, 2015, 『지역별 성평등수준 분석 연구』 .
-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
- 여성가족부, 2016,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 . 지방행정실사회통합지원과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 2016,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 여성가족부,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 우복남, 2016, 『충남 결혼이주여성 생활실태와 정책방향』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전라북도, 2015, 『전북형 다문화가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 질병관리본부, 2015,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분석』 .
- 청주시, 2016, 『청주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 청주복지재단.
- 최유진외, 2015, 『2015 양성평등 추진전략 사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은희, 2015, 『충남 장애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충남여성정책개발원·충남청소년진흥원, 2015, 『충남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미간행보고서.
- 충청남도, 2013,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
- 충청남도, 2014, 『2014 충남사회조사』 .
- 충청남도, 2014, 『2014 충남 성인지통계』 .
- 충청남도, 2014, 『충남 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 .
- 충청남도, 2014, 『충청남도 3농혁신 2030발전 계획』 .

- 충청남도, 2015, 『2015 도정백서』
- 충청남도, 2015, 『2015 충남 사회지표』 .
- 충청남도, 2015, 『충남 환경보전 종합계획』 .
- 충청남도, 2015, 『3농혁신 2단계 추진계획』 .
- 충청남도, 2016, 『2016 성인지예산서』 .
- 충청남도, 2016, 『제4차(16-20)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안)』 .
- 통계청, 1990~2015, 『인구동향조사』 .
- 통계청, 2012, 『2010~2035장래가구추계』 .
-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보고서』 .
- 통계청, 2014, 『전국사업체조사』 .
- 통계청, 2015, 『농림어업 총조사』 .
- 통계청, 201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 통계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 .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각년도.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한국여성단체연합, 2014, 『베이징 +20과 post 2015,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
심포지움 자료집.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2015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http://www.gsis.kwdi.re.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5, 『2015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
- 행정자치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2014~2016)』 .
- 황창연 외, 2010, 『여성이 행복한 충남 만들기 5개년 계획수립 연구』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CSW, 2016, 『Women's empowerment and the link to sustainable development Agreed Conclusion』 (Advanced unedited version CSW 60th session, 24 March 2016).
- European Commission, 2015, 『Strategic engagement for gender equality 2016-2019』 .
- European Parliament, 2015a,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09 June 2015 on the EU Strategy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post 2015』 .
- European Parliament, 2015b, 『Evalu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20 and the opportunities for achieving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in the post-2015 development』 .
-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5, 『The Power of Parity : How advancing women's equality can add \$12 trillion to global growth』 .
- OECD, 2016, The Better Life Index(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 UN, 1995, "Beijing Platform for Action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http://www.un.org/womenwatch/daw/beijing/platform>)
-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 UN General Assembly, 2000,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 Further actions and initiatives to implement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

UN Women, 2013, 『A Transformative Stand-alone Goal on Achieving Gender Equality, World Economy Forum, 2015, 『the Global Gender Gap Index』 .
Women's Rights and Women's Empowerment: Imperative and Key Components』 .
UN Women, 2015a,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Turns 20』 .
UN Women, 2015b, 『Monitoring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and girls i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